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KINU 연구총서 23-25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황태연 | 전병곤 | 신종호 | 이기현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연구책임자

황태연(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전병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중호(한양대학교 ERICA 부교수)

이기현(한국외국어대학교 부교수)

KINU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KINU 연구총서 23-25

발행일	2023년 12월 30일
저자	황태연, 전병곤, 신중호, 이기현
발행인	김천식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국제전략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인쇄처	(주)현대아트컴(02-2278-4482)
I S B N	979-11-6589-148-0
가격	9,000원

© 통일연구원, 202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Contents 차례

요약	9
----	---

Chapter I

서론	17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2. 연구방법 및 범위 ————— 23

Chapter II

대외정책 결정 모델과 시진핑 체제	27
--------------------	----

1. 대외정책 결정 모델의 중국 적용과 사례 ————— 29
2. 시진핑 1, 2기 지도부와 대외정책 특징 ————— 36
3. 소결 ————— 57

Chapter III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구성 현황과 특징	63
-----------------------	----

1.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구성 현황 ————— 65
2.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의 특징: '시진핑 1인 우위' 체제 확립 ————— 83
3.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에 대한 평가: 지속과 변화 ————— 88

Chapter IV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	93
1.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인식과 정책기조	95
2.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 전망	118
3. 소결	136

Chapter V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	141
1.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인식과 정책 기조	144
2.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153
3. 소결	169

Chapter VI

결론: 내용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75
참고문헌	187
최근 발간자료 안내	195

〈표 Ⅱ-1〉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현황(시진핑 1기)
 (18기 1중전회, 2012년 11월 15일) 38

〈표 Ⅱ-2〉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현황(시진핑 1기)
 (18기 1중전회, 2012년 11월 15일, 상무위원 제외) 39

〈표 Ⅱ-3〉 시진핑 1기 지도부 현황 41

〈표 Ⅱ-4〉 시진핑 1기 국무원 부·위원회(장관급) 수장(首長) 41

〈표 Ⅱ-5〉 제19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현황(시진핑 2기)
 (19기 1중전회, 2017년 10월 25일) 49

〈표 Ⅱ-6〉 제19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현황(시진핑 2기)
 (19기 1중전회, 2017년 10월 25일, 상무위원 제외) 49

〈표 Ⅱ-7〉 시진핑 2기 지도부 현황 52

〈표 Ⅱ-8〉 시진핑 2기 국무원 부·위원회(장관급) 수장(首長) 53

〈표 Ⅲ-1〉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현황
 (시진핑 3기) 67

〈표 Ⅲ-2〉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현황
 (17인, 상무위원 7명 제외) 68

〈표 Ⅲ-3〉 역대 중앙서기처 서기 현황(1980년~현재) 71

〈표 Ⅲ-4〉 역대 증공중앙 대외연락부 부장 현황(1951년~현재) 73

〈표 Ⅲ-5〉 중국 중앙인민정부(국무원) 구성 체계 76

〈표 Ⅲ-6〉 시진핑 3기 국무원 총리(1)·부총리(4)·국무위원(5) 현황
 (2023년 3월 기준) 77

〈표 Ⅲ-7〉 국무원 26개 부·위원회 수장(首長) 현황(2023년 3월 기준) 80

〈표 Ⅲ-8〉 역대 중앙군사위원회 구성(1992년~현재) 82

〈표 Ⅳ-1〉 역대 당 대회 보고에 나타난 국제정세 인식과
 이상적 국제질서관 106

〈표 IV-2〉 역대 당 대회 보고에 나타난 통일 관련 입장 117
〈표 IV-3〉 역대 당 대회 보고에 나타난 대외정책목표/원칙 117
〈표 IV-4〉 역대 당 대회 보고에 나타난 주요대상별 정책 135

Figures 그림 차례

〈그림 III-1〉 제20기 중국공산당 지도부 구성 66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최근 국제질서는 미중 전략경쟁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유동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극복해야 할 다양한 도전적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 구조하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의 관점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미동맹의 강화에 따른 중국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상호존중과 호혜의 관점에서 한중 협력관계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향후 5년 동안 중국을 이끌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선제적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 3가지 필요성과 논점에 주목한다. 첫째,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인 중국정치의 특성상 정책 결정 과정의 제도화 수준에 따라 대외전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하다. 둘째,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국가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공간 확장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기존 중국외교의 4대 축(대국외교, 주변외교, 개발도상국외교, 다자외교)에 대한 일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도부 구성 및 대외전략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그동안 중국은 미중관계의 하부 구조로서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시진핑 3기 지도부에서도 이러한 경

향성이 계속될 것인지, 한반도 정책 결정요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고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 소위 강대국 정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의 논점을 반영한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 및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II장에서 대외정책 결정 모델의 중국 적용과 사례를 살펴보고,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 즉, ‘약자들의 연합(Coalitions of the Weak)’과 ‘집단사고(group thinking)’ 개념에 주목하였다. 또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특징과 구별하고자 시진핑 1,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특징을 분석했다. III장에서는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구성을 당(黨), 정(政), 군(軍)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당·정·군의 핵심 지도자를 소위 ‘시진핑계열’로 분류되는 측근들로 대부분 구성하고, 시진핑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시진핑 1인 우위’ 체제를 확립했다. IV장에서는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진핑 1, 2기와 비교해 이상적 질서관이라 할 수 있는 인류운명공동체와 개발도상국 외교가 강조되었다. 또한, 중국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맹체계를 약화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쐐기전략(wedge strategy)을 추구하고, 중국 중심의 블록화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V장에서는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의 특징이 대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규명하고,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여 한중관계 및 중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관계를 전망하였다. 그 결과 미중 전략경쟁 구조하에서 한중관계는 기회와 도전의 측면이 모두 존재할 것으로 전망되나, 한미일 대 중러북의 대립 양상이 강화

되면 한중관계는 경색과 갈등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용을 요약하고, 미중 전략경쟁 구조하에서 한미일 대 중러북의 구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중협력 및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 방향 및 우리의 대응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주제어: 시진핑 3기, 중국 대외전략, 한반도 정책, 한중관계, 중북관계, 미중 전략경쟁



Xi Jinping's Third Term Leadership's Foreign Policy Strategies and Polici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Hwang, Taeyeon et al.

Recent global order is experiencing a rising volatility due to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long with the protracted war in Ukraine. This trend poses multiple challenges that need to overcome. South Korea has, till now, promoted its national interest amid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by maintaining its strategic ambiguity regarding its intention of partnering with US for security and with China for the economy. However, now is the time for Korea to rethink its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hina, emphasizing mutual respect and reciprocity while stably managing risks from China attributable to the stronger ROK–US alliance. Therefore, pre-emptive study of foreign policy strategies of Xi Jinping's third-term leadership, which would lead China for the next five years, as well as of it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s highly important.

This study focuses on the three key needs and perspectives as follows: First, a study and prediction of Xi Jinping's third-term leadership's structure are necessary considering that given the party-state system, one of characteristics of Chinese politics, the extent of system-based policy decision making may influence the leadership's foreign policy strategie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Second, it is essential to study the new leadership's structure and shifts in its foreign policy strategies, given the possible major restructuring of the four pillars of China's traditional diplomacy (great power diplomacy, developing country diplomacy, neighborhood diplomacy, multilateral diplomacy). Xi's third-term leadership is expected to expand its strategic leverage and grow its global influence to achieve the nation's development goals once it takes power. Third, China has established and pursued its polici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while seeing two Koreas as a substructure of its relations with the US. Now, as North Korea continues to advance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nd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s accepted as a reality, it is crucial to understand and predict whether such a stance will persist throughout the third term. Additionally, the study aims to explore the impacts on decisive factors of China's polici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onsequences of what is commonly referred to as great power politics.

In light of this background, this study predicts the foreign policy strategies of Xi's third-term leadership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d, it also presents policy insights and indications for Korea from the perspectives of continuity and change that reflects aforementioned views.

To this end, Chapter 2 explores China's introduction of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model and its examples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two notions—Coalitions of the Weak and group thinking—to study and predict Xi's third-term leadership's foreign policies. Also, this chapter looks at the leadership structures of Xi's first term and second term and their characteristics of foreign policies to distinguish Xi's third-term leadership from his previous leaderships.

Chapter 3 provides a closer look into characteristics of the third-term leadership's structure, mainly focusing on party, state, and military. This, in turn, indicates that Xi packed his third-term leadership mainly with so-called Xi's loyalists as top leaders of party, state, and military, and cemented "one-man dominant rule" that allows power concentrated on one person, or Xi Jinping.

Chapter 4 examines Xi's third-term leadership's foreign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s of continuity and change, which in turn finds that his ideal vision of world order,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for Mankind and diplomacy toward developing countries are highlighted more compared to Xi's first term and second term. Also, despite multiple constraints, China appears to be pursuing a wedge strategy aimed at weakening the U.S. alliance and expanding China's influence, alongside strategies

to bolster China-led blocs.

Chapter 5 is about how Xi's new leadership's characteristics would impact its polici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d predicts impacts and future outcomes of Korea–China relations and China–North Korea relations by understanding China's polici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perspectives of continuity and change. Both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re expected in Korea–China relations amid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However, if the confrontation between South Korea–US–Japan and China–Russia–North Korea would be escalated, resulting strains and tensions are likely to weig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Lastly, Chapter 6 recaps the findings from the aforementioned study and presents policy insights regarding stable management directions and response plans for cooperation and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mid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ongoing realignment of the South Korea–US–Japan trilateral partnership versus that of China–Russia–North Korea.

Keyword: Xi Jinping's third term leadership, China's foreign policy strategies,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Korea–China relations, China–North Korea relations,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 서론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국제질서는 미중 전략경쟁에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유동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1/} 이러한 국제질서의 유동성은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면서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비핵·평화·번영의 실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민주주의의 대 권위주의의 진영화 모색, 경제와 안보의 연계 강화, 글로벌 공급망 경쟁, 기후변화, 감염병, 사이버 테러와 같은 신흥 안보위협 증가 등 글로벌 차원의 복합 위기가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에게 극복해야 할 다양한 도전적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외교안보 비전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1/ 최근 학계에서는 신냉전 담론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찬반 양론이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다극화와 복합적 상호의존 관계의 형성으로 신냉전이 불가하다는 관점과 다극화와 신냉전의 병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Hal Brands and John Lewis Gaddis, “The New Cold War,” *Foreign Affairs*, 2021.10.19.,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10-19/new-cold-war>> (검색일: 2022.12.20.); 후자에 대해서는, Odd Ame Westad, “The Sources of Chinese Conduct: Are Washington and Beijing Fighting a New Cold War,” *Foreign Affairs*, 2019.8.23.,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9-08-12/sources-chinese-conduct>> (검색일: 2022.12.20.). 그러나 현존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전환기적 특성에 대해서는 커다란 이견이 없어 보인다.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하나, 이에 따른 중러북 협력의 증가로 인해 이들과의 협력 수준을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증대를 비난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한중 간 적지 않은 갈등을 노정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 구조하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의 관점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도모해왔다. 중국을 배제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번영, 더 나아가 통일 실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미동맹의 강화에 따른 중국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상호존중과 호혜의 관점에서 한중 협력관계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중국을 5년 동안 이끌 시진핑(習近平)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선제적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시진핑 3기라는 점에서,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와 정책은 1, 2기 지도부와 유사한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진핑 1, 2기 지도부와 비교할 때,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상의 특징 및 대내외적 환경요인 등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대외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시기상의 이유로 시진핑 3기 지도부를 포괄해 정면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2/} 게다가 학술적인 측면이 아닌 정책적 연구는 여전히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2/ 시진핑 집권 1, 2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에 관한 연구로는, 전병곤 외,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3); 신중호,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18); 한강우, “시진핑 집권 1,2기 권력집중화 양상 비교 분석 -인민일보 1면 보도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2권, 2호(2019), pp. 1~32; 황상필,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역할이론적 검토,” 『국제정치연구』, 제25집 3호(2022), pp. 237~264. 반면에, 시진핑 3기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는 향후에 많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3년 6월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시진핑 3기를 겨냥한 ‘중국의 미래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의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않은 게 현실이다.^{3/}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 3가지 필요성과 논점에 주목한다. 첫째, ‘당-국가(party-state)체제’인 중국정치 특성상 정책결정의 제도화 수준에 따라 대외전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하다. 2022년 10월 제20차 당 대회 직후 개최된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상무위원(7명) 및 중앙정치국 위원(24명)의 면면을 볼 때 소위 ‘시진핑 1인 우위’ 체제 형성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중국 정치에서의 공식적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 작동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시진핑 1인 우위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시진핑 개인의 정책적 영향력 증대뿐만 아니라 시진핑계열의 파벌지배력 역시 증대되면서 소위 ‘집단사고(group thinking)’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구성 및 엘리트 간 연계와 협력 및 견제의 작동 원리(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둘째,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국가발전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공간 확장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기존의 중국외교의 4대 축(대국외교, 주변외교, 개발도상국외교, 다자외교)에 대한 일대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 도래했다는 점 역시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제기한다. 중국외교는 그동안 시진핑 1기와 2기를 거치면서 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 구

3/ 물론, 시진핑 3기 지도부의 출범을 공식화한 20차 당 대회와 전인대에 관한 분석과 예측은 적지 않다. 다만, 중장기적인 맥락에서의 정책연구와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林子立, “中共20大對外交政策的影響與未來走向,” 『展望與探索』, 第20卷, 第12期(2022.12), pp. 64~70; 전병곤 외, 『중국 20차 당 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22); 김선진·조은교, “시진핑 3기 경제 제약요인과 대내외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27집 제4호(2022), pp. 57~77.

축,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 구축 등을 외교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기존의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제20차 당 대회 및 2022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중국은 중국식 국제질서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국제질서의 진영화(블럭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시진핑 3기 지도부는 글로벌 의제에 대한 담론권 확대에 노력하고 있고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을 통해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기도하고 있으며,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개발도상국외교를 전개할 가능성도 증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이 그동안 대국외교-특히 미중관계-의 하부(중속) 구조로서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성이 지속할 것인가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시진핑 1, 2기와 비교할 때,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 결정요인 중에서 대국(특히 미국) 요인의 중요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소위 강대국 정치가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고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3원칙이 새로운 시진핑 3기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의 논점을 반영한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 및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려는 연구 목적을 갖고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할 것이다. 첫째, 당-국가 체제인 중국에서 지도부 특징과 대외정책이 어떤 영향과 상관성을 갖는

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둘째,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의 현황과 특징은 무엇이고, 시진핑 1기 및 2기 지도부 구성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셋째,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 목표와 내용은 무엇이고, 시진핑 1기 및 2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비교할 때 지속성과 변화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의 특징은 무엇이고, 시진핑 1기 및 2기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과 비교할 때 지속성과 변화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가. 연구 추진 방법

본 연구는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시진핑 3기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려는 시도이다. 이의 효과적인 도달을 위해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내용분석, 현지조사와 심층면접, 공동연구,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동원했다.

우선,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분석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병행하였다. 각종 단행본 및 학술논문, 정책연구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1, 2차 관련 문헌의 전반적인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였고, 정태적 문헌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중국 지도자들의 발언과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인터뷰, 중국공산당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등에서 통과된 공식문건에 대한 함의를 추적하는 내용분석법을 추가로 활용했다.

둘째, 본 연구는 중국 현지조사 및 주요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면접(depth-interview)을 활용해 중국의 대내외정책 방향을 파악하

는 데 주력하였다. 심층면접은 문헌이나 공식 성명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습득하는 데 활용하였고, 현지조사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 등)과 중북 접경지역인 동북 3성 지역(옌벤(延邊)대학교, 라오닝(遼寧)사회과학원, 지린(吉林)대 동북아학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셋째, 공동연구와 코워킹회의를 적극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국내정치 및 엘리트연구, 경제사회 및 외교안보 등 각각의 분야별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아울러, 개별연구의 단점 및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연구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 비록 짧은 연구 기간이지만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차례의 코워킹회의를 추진하였다.

넷째, 국내외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견해를 수렴하였다. 그 밖에도 통일연구원과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과의 정례 전략대화나 대만 아태평화연구기금회와의 전략 대화와 같이 중국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회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중국 대외정책의 범위가 중국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주요국 간의 관계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및 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폭넓은 자문 및 전략 대화와 같은 학술교류는 본 연구가 더욱 깊이 있는 분석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연구가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구성과 한반도 정책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주된 분석대상은 시진핑 3기 지도부이며, 따라서 중국 당(黨), 정(政), 군(軍)의 핵심 지도자들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여

기에는 중국공산당의 경우 중앙정치국 위원과 중앙서기처, 대외연락부의 인사, 중앙정부의 경우 전인대와 국무원의 부·위원회 수장, 그리고 군의 경우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들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시간적 범위는 시진핑 3기 지도부가 구성된 2022년 10월의 20차 당 대회부터 현재까지이다. 다만,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시진핑 3기 지도부와 대외정책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시진핑 1기와 2기도 연구 범주에 부분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4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II장에서는 대외정책 결정 모델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중국 적용 사례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 후,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한 변수들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즉, 정책결정과정에서 개인적 요인이 강했던 마오쩌둥(毛澤東) 시기와 상대적으로 제도적 규범 요인이 강했던 덩샤오핑(鄧小平) 시기의 특징이 시진핑 시기에도 유효할지, 특히 시진핑 1인 우위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3기 지도부 구성에서 약자들의 연합(Coalitions of the Weak)과 집단사고(group thinking)의 개념에 주목하고 이것이 대외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자 했다. 아울러, 시진핑 1기와 2기의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의 특징을 개괄하고 다음 장의 3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 및 한반도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비교 분석의 준거로 삼았다.

III장에서는 시진핑 3기 당·정·군 주요 지도부의 구성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3기 지도부의 인구사회적 통계(연령, 지역, 학력 등)와 전문화 수준 및 1, 2기와 비교를 통해 특징을 도출하고 이것이 중국 대외정책 결정에 줄 수 있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어 IV장에서는 이에 기반해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인식과 정책기조를 분석하고 향후 대외정책을 전망하는 데 활용하였다. 중국 대외정책의 4대 축인 강대국, 주변국, 개발도상국, 다자외교를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망하였다. 계속해서, V장에서도 III장 및 IV장의 함의에 기초해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인식과 정책기조를 분석하고, 중북관계와 한중관계를 분석, 전망하였다. 마지막 결론부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후, 한미일 및 중러북의 구도에서 한중협력 및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 방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I 장·V장·VI장은 황태연·전병곤이 공동작성하였고, II장은 황태연, III장은 신종호, IV장은 이기현이 각각 작성하였다.

II. 대외정책 결정 모델과 시진핑 체제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대외정책 결정 모델과 시진핑 체제

1. 대외정책 결정 모델의 중국 적용과 사례^{4/}

가. 서구의 대외정책 결정 모델

어느 한 국가의 대외정책(Foreign policy)은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가 안팎의 구조 안에서 수많은 행위자가 만들어 내는 하나의 복잡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정책에 대한 분석은 정치적 행위자(political actors)가 정책을 결정하는 방법이나 다른 외국 정부나 비정부기구와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국가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는데 대외정책 결정에 지도자라는 개인 요인이 중요하지, 아니면 국가조직이나 제도, 규범이 중요하게 작동하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대외정책 결정 모델을 분류하고 있다.

먼저, 대표적인 대외정책 결정 모델로 ‘합리적 행위자 모델(rational actor model)’이 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한 국가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결정자, 즉, 최고지도자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선택한다고 주장한다.^{5/} 다음

4/ 신중호, “대외정책 결정 모델과 중국,”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3.3.31.)
참조 및 수정·보완

5/ ‘합리적 행위 모델’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Graham T. Allison, *Essence*

으로 ‘관료정치 모델(bureaucratic politics model)’이 있다. 관료정치 모델은 지도자의 개인적 요인보다는 관료 제도 안에서 국가의 대외정책이 대외정책 결정과 관계된 관료라는 정책결정자들 간에 정치적 타협을 통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6/} 그리고 ‘인지적 모델(cognitive model)’이 있다. 이 모델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함께 구조적 요인보다는 정책결정자들이 정책환경에 대해 인식하고 진단하는 등, 자신과 상대방의 행동 인식 등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7/} 그 밖에도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 무엇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조직 과정 모델(organizational process model)’, ‘부처 간 정치 모델(inter-branch politics model)’, 그리고 ‘정치 과정 모델(political process model)’^{8/} 등이 있다.

나.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모델

서구의 대외정책 결정 모델을 중국에 적용하려는 시도와 이를 통해 새로운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모델을 찾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나 인지적 모델과 같이 개인적 요인이 대외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한 것처럼,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고 현재의 중국을 탄생시킨 마오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정중욱·김태현, “외교정책이론,” 이상우·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1992), pp. 419~513.

6/ ‘관료정치 모델’은 다음을 참조. Graham T. Allison and Morton H. Halperin, “Bureaucratic Politics: A Paradigm and Some Policy Implication,” *World Politics*, no. 24 (1972), pp. 40~79; Stephen D. Krasner, “Are Bureaucracies Important?(Or Allison Wonderland),” *Foreign Policy*, no. 7 (Summer 1972), pp. 159~179.

7/ 정중욱·김태현, “외교정책이론,” pp. 419~513.

8/ Roger Hilsman, Laura Gaughran, and Patricia A. Weitsman, *The politics of policy making in defense and foreign affairs: conceptual models and bureaucratic politic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90).

쩌둥과 같은 최고지도자의 역할에 중심을 둔 ‘마오(毛) 중심 모델(Mao-in-command model)’이 있다.^{9/} 마오 중심 모델은 중국의 마오쩌둥과 같이 절대적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요인을 대외정책 결정에 주요 요인으로 내세운 것으로, 대외정책 결정 과정이 상명하달(top-down)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하여 ‘상명하달식 모델’로 설명하기도 한다.^{10/}

‘제도주의적 모델(institutionalism)’과 같은 시각은 마오 중심 모델과 같이 대외정책 결정권이 최고지도자에게 있지만, 정책의 실질적 결정은 정치 엘리트 관료 내부에서 이뤄지고, 관료 제도를 통해 대외정책이 ‘집행’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11/} 다시 말해 제도주의적

9/ ‘마오(毛) 중심 모델’에 대해서는 Roderick MacFarquhar, *The Origins of the Cultural Revolution, vol. 1: Contradictions Among the People 1956-1957*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Lowell Dittmer, *China's Continuous Revolution* (Berkeley and Los Angel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Avery Goldstein, *From Bandwagon to Balance of Power Politic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Harry Harding, "Competing Models of the Chinese Communist Policy Process: Toward a Sorting and Evaluation," *Issues and Studies*, vol. 20, no. 2 (February 1985), pp. 15~18; 정재호 편저, 『중국정치연구론』 (서울: 나남출판, 2000), p. 134. 등 참조.

10/ ‘상명하달식 모델’에 대해서는 Lu Ning, *The Dynamics of Foreign-Policy Decision making in China* (Boulder: Westview Press, 1997), p. 11; Michael D. Swaine, *The Role of the Chinese Military in National Security Policy making* (Santa Monica, CA: RAND, 1998), pp. 7~18 등 참조.

11/ 양무진, “중국의 정책결정구조와 정치적 권위관계,” 『동북아 연구』, 제3권, (1997), pp. 253~254.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바로 케네스 리버설(Kenneth Lieberthal)이 제기한 ‘분절적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 모델로서,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 전반이 계통적인 상명하달식 권위에 의해 작동되기보다는 부처간, 지역 간, 단위 간의 협상과 타협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리버설은 외교정책결정 과정에서 관료 조직들 간 상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합의(consensus)를 이루기 위해 협상과 교섭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Kenneth Lieberthal,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 eds. Kenneth Lieberthal and David Lampton, *Bureaucracy, Politics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p. 1~30. ‘분절적 권위주의’ 관련 다른 연구는 Carol Lee Hamrin, "Elite Politics and the Development of China's Foreign Relations," eds. Thomas Robinsoa and David Shambaugh, *Chinese Foreign*

모델은 그들이 몸을 담고 있는 관료조직 내 소수 엘리트가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은 마오쩌둥과 같이 절대적 영향력이 강한 최고지도자의 사례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낮다고 평가하는 덩샤오핑^{12/}이나 장쩌민(江澤民) 시기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와 달리 중국 특색의 집단지도체제의 특징을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한 중국식 ‘협의’(또는 ‘합의’, 이하 협의) 모델이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외정책에 대한 최고지도부의 영향력은 다른 서구 국가들과 비교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지만, 소수의 최고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인식한다. 특히 대외정책 결정에서 ‘중앙외사공작위원회(中央外事工作委員會)’와 같이 중국적 특징을 지닌 공식·비공식적 제도 장치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본다.^{13/} 이러한 중국식 협의 모델은 최고지도자 개인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발휘되기는 쉽지 않았으나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9명으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가 운영되었던 후진타오(胡錦濤) 시기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 후진타오 시대보다 2명이 축소된 7명으로 구성된 시진핑 집권 1, 2기 역시 기본적으로 협의를 중시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식 협의

Policy (New York: Clarendon Press, 1997); David Lampton,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등 참조.

12/ 덩샤오핑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Chih-Chia Hsu,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in Deng's China: Three Patterns for Analysis," *Asian Perspective*, vol. 23, no. 2(1999), pp.197~223.

13/ 이러한 연구는 David Lampton,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Xuanli Liao, *Chinese Foreign Policy Think Thanks and China's Policy toward Japan*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2006); 張曆曆, 『外交決策』(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7) 등 참조.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시진핑 2기, 3기로 나아갈수록 시진핑 1인 우위 체제의 강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집단지도체제의 약화로 평가하는 만큼 시진핑 집권 시기를 구분하여 대외정책 결정 모델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 시진핑 시기의 대외정책 결정 모델

사회주의의 ‘당-국가’체제인 중국의 특성상 당·정·군 최고지도부 구성의 변화는 대외정책 결정 과정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14/} 집단지도체제라는 중국식 협의 모델로 대외정책 결정 모델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모델은 대체로 ‘개인적 요인’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시진핑 1, 2기보다는 향후 3기에 적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1, 2기를 거치면서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한층 더 강조해왔다. 시진핑은 최고지도자로서 2022년 10월 20차 당 대회 이후 공개된 당장(黨章) 개정안에 ‘시진핑의 당 중앙 핵심지위 및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 수호’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내외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진핑 개인의 영향력 증대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시진핑 3기에 들어서면서 ‘시진핑 1인 우위 체제’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중국 대외정책에서 시진핑 개인의 사상이나 철학 및 정책 성향이 더욱 중

14/ 중국에서 행위자(actors) 구성의 변화가 외교정책 변화를 이끈다는 주장은 Joseph Fewsmith, “Hu Jintao’s Approach to Governance,” eds. John Wong and Hongyi Lai, *China’s into the Hu-Wen Era: Policy Initiatives and Challenges* (Singapore: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Pte. Ltd., 2006), pp. 91~117; Cheng Li, “Will China’s “Lost Generation” find a path to Democracy,” eds. Cheng Li, *China’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Prospects For Democra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2008), pp. 98~120; Zhiyue Bo, *China’s Elite Politics: Governance and Democratization* (Singapore: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Pte. Ltd., 2010), pp. 383~392 등 참조.

요해졌다.

시진핑 2기를 거치며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증대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며 탄생한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당면한 대내외적 ‘위협인식’이 ‘시진핑 1인 우위 체제’와 결합하여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한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결정 구조를 수립하고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차 당 대회 「보고」에 나타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내외 정세 인식 역시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도전을 강조하였다. 즉,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중국이 갖고 있는 힘과 향후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국이 직면한 현재 시기를 ‘외부로부터의 견제와 도전의 시대’로 인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시진핑이라는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결정 구조를 선호한다. 마치 마오쩌둥 시대처럼 국공내전을 거치며 신중국 건립과 같이 절체절명의 중대한 상황에서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된 상황과 유사하다. 따라서 시진핑 3기의 당과 정부(국무원), 군 최고지도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소위 ‘시진핑계열(習派)’^{15/} 사이에 어떤 연계와 협력 및 견제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분석

15/ 시진핑계열(習近平派系)은 중국공산당 내 파벌 또는 직계집단을 지칭하는 말로 과거 장쩌민을 중심으로 하는 상하이방(上海幫)을 비롯한 공청단파(團派) 등과 같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저장성, 푸젠성, 상하이 등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인물들이 중앙으로 진출하여 이들을 소위 시자권(習家軍)이라고도 하며, 구체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권력 집단으로 저장성 출신은 저장방(浙江幫) 또는 즈장신권(之江新軍)으로 불리고, 푸젠성 출신은 푸젠방(福建幫) 또는 민장신권(閩江新軍)으로 불린다. 그 밖에도 산시(陝西), 간쑤(甘肅)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신서북군(新西北軍), 칭화대학 출신의 칭화계(清華派), 군, 항공, 우주 등 기술 전문관료 출신의 군공계(軍工系), 장쩌민의 상하이방과 구별하여 상하이 서기 시절의 인맥을 중심으로 한 신상하이방이라 할 수 있는 푸장신권(浦江新軍)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모두 포함하여 ‘시진핑계열’이라고 하고,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였다.

을 통해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개념, 즉, ‘약자들의 연합’^{16/}과 ‘집단사고’^{17/}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빅터 쉬(Victor C. Shih)는 마오쩌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강력한 라이벌의 도전을 막기 위해 ‘약자들의 연합’을 결성했다고 주장했다. 즉, 강한 라이벌을 제거하고 약한 지도자 집단을 주위에 두어 최고지도자의 권력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은 상당한 규모의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자들의 연합’ 전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18/} 향후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이 지속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을 막기 위해 ‘약자들의 연합’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19/}

다음으로 어빙 재니스(Irving L. Janis)의 ‘집단사고’ 이론은 진주

16/ Victor C. Shih, *Coalitions of the Weak: Elite Politics in China from Mao's Stratagem to the Rise of Xi*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전체 참조.

17/ Irving L. Janis, *Victims of groupthink: A psychological study of foreign-policy decisions and fiascoes* (Boston: Houghton Mifflin, 1972) 전체 참조.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재니스(Janis)는 ‘집단사고’를 어떤 대가(cost)를 치르더라도 합의(consensus)를 이끌기 위한 심리적인 추진(psychological drive)으로 정의. ‘집단사고’ 모형은 집단사고를 일으키는 7가지 선행요인(①집단응집력, ②공정한 리더십 부재, ③전문가들로부터의 고립, ④절차적 규범의 부재, ⑤구성원의 교육·경력·사회적 동질성, ⑥외부 위협에 의한 높은 스트레스, ⑦최근 실패에 따른 낮은 자긍심 등)으로 인해 다양한 집단사고의 증상(자기과신 및 집단의 도덕적 우월감, 자기 합리화와 외부집단(적)에 대한 고정관념, 자아검열 및 이견자에 대한 압력 등)을 발생시키고, 이는 다시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방해하는 7가지의 결합 있는 정책 결정 과정 증상(①대안에 대한 불완전한 탐색, ②목표에 대한 불완전한 조사, ③선호 대안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 실패, ④기각된 대안의 검토 실패, ⑤빈약한 정보 탐색, ⑥정보처리의 선택적 편견, ⑦상황 대응 계획 수립 실패 등)을 유발함으로써 결국 정책 결정의 실패를 초래한다는 이론 유형이다.

18/ 시진핑의 후계 구도에 대한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 ‘시진핑계열’의 부상은 시진핑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크게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빅터 쉬의 분석처럼 ‘약자들의 연합’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19/ 빅터 쉬는 마오쩌둥의 후계자인 덩샤오핑도 비슷한 전략을 따랐다고 평가한다.

만 폭격이나 베트남 전쟁과 같이 외교정책 결정의 심리적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의 고위 정책 결정 집단이 실행한 중요한 정책 결정 실패 사례들의 결정 과정상의 오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다.^{20/}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사고의 결과를 유효하다고 믿든지, 정확하다고 믿든지, 인지된 집단 합의를 나타내는 관점이나 결론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집단사고 방식은 집단적인 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이 전부 시진핑계열로 구성된 상황에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정책 결정상의 결함을 분석하고 예측·전망하는 데 이러한 개념은 유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약자들의 연합이나 집단사고와 같은 개념이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특징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특징이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분석, 전망하고자 한다.

2. 시진핑 1, 2기 지도부와 대외정책 특징

가. 시진핑 1기 지도부 구성의 특징과 대외정책

(1) 시진핑 1기 지도부 구성 현황과 특징

(가) 중국공산당(黨)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한 소위 시진핑 1기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8차 당 대회)에

^{20/} Irving L. Janis, *Victims of groupthink: A psychological study of foreign-policy decisions and fiascoes* 전체 참조.

서 선출되었다. 먼저 205명의 중앙위원회 위원(이하 중앙위원) 및 171명의 후보위원이 선출되었고, 130명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紀律檢查委員會) 위원을 선출했다. 중앙위원회에는 시진핑 총서기와 7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하 상무위원), 25명의 중앙정치국 위원이 선출되었다. 무기명 투표 방식을 통해 선출된 205명의 중앙위원은 후진타오 전임 지도부에서 91명이 유임되고, 114명이 새롭게 당선되었다. 중앙위원 중 40년대 출생자(40後)가 31명, 50년대생(50後) 165명, 60년대생(60後)은 9명으로 구성되어 40년대생들은 점점 퇴출되고 50년대생들이 정책 결정의 주요 세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95%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박사학위자도 14%를 차지하고, 인문사회과학 배경의 전공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65명(31.7%)은 지식청년(知青)^{21/} 경력이 있으며, 중앙정치국 위원 중 7명(28%)이 포함되었다. 시진핑을 포함한 4명(57.1%)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이러한 경력을 갖고 있어 지식청년 경력 세대의 전면적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22/}

시진핑 1기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표 II-1>과 같이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전임 17대 상무위원과 비교해 2명이 감소하였다. 전임 상무위원 9명 중 7명이 퇴진하고 시진핑과 리커창(李克強)이 유임되며 새롭게 5명이 선출된 것이다. 18차 당 대회 인사의 특징으로 소수파로 분류되던 시진핑 총서기가 당내 합의에 기초한 인사결과가 수용된 결과로 결정되었다. 그밖에 공청단(共靑團) 세력을 대표하는

21/ 지식청년(知青)은 1950년대부터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0년대 말까지 농촌으로 내려가 농촌 생활 및 노동에 종사한 중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을 의미하며, 당시 정치운동의 목적으로 이들을 농민들과 함께 지내게 한 것으로 이러한 경험을 하방(下放)이라고 일컫는다.

22/ “205名中央委員來自哪裏？有何特點？,” 『中國人大網』, 2012.11.23., <http://www.npc.gov.cn/zgrdw/npc/zggcdsbcqgdbdh/2012-11/23/content_1743824.htm> (검색일: 2023.5.1.).

리커창과 상하이방(上海幫)을 대표하는 장더장(張德江), 류윈산(劉雲山) 등이 선출되면서 세력 간 균형이 이뤄지며 각 파벌의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세력 간에 적절하게 안배된 균형 인사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하는 중앙정치국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었다. 시진핑 1기 중앙정치국 위원에는 전임 17대에서 류연동(劉延東), 왕양(汪洋), 리위안차오(李源潮) 등 3명만이 유임되고 대대적 인사가 단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치국 위원에 유력한 차세대 지도자로 평가받는 쑨정차이(孫政才), 후춘화(胡春華), 자오러지(趙樂際), 왕양 등이 선출되었다.

표 II-1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현황(시진핑 1기)
(18기 1중전회, 2012년 11월 15일)

이름	출생연월	출생지	출신학교 (최종학력)	주요 직위
시진핑 (習近平)	1953.6.	산시(陝西)	칭화(清華)대학(박사)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리커창 (李克強)	1955.7.	안후이(安徽)	베이징(北京)대학(박사)	국무원 총리
장더장 (張德江)	1946.11.	랴오닝(遼寧)	김일성종합대학(학사)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위정성 (俞正聲)	1945.4.	저장(浙江)	하얼빈(哈爾濱)군사공정 학원(학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류윈산 (劉雲山)	1947.7.	산시(山西)	중앙당교(학사)	국가부주석
왕치산 (王岐山)	1948.7.	산시(山西)	시베이(西北)대학(학사)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장가오리 (張高麗)	1946.11.	푸젠(福建)	샤먼(廈門)대학(학사)	국무원 상무부총리

자료: 저자 작성.

표 II-2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현황(시진핑 1기)
(18기 1중전회, 2012년 11월 15일, 상무위원 제외)

이름	출생연월	출생지	출신학교 (최종학력)	주요 직위
궈진룽 (郭金龍)	1947.7.	장쑤(江蘇)	난징(南京)대학(학사)	베이징(北京)시
한정 (韓正)	1954.4.	저장(浙江)	화둥(華東)사범대학(석사)	상하이시 서기
쑤춘란 (孫春蘭)	1950.5.	허베이(河北)	중앙당교(석사)	톈진(天津)시
쑤정차이 (孫政才)	1963.9.	산둥(山東)	중국농업대학(박사)	중칭(重慶)시
후춘화 (胡春華)	1963.4.	후베이(湖北)	베이징대학(학사)	광둥(廣東)성
자오러지 (趙樂際)	1957.3.	산시(陝西)	중앙당교(석사)	중앙조직부장, 중앙서기처 서기
장춘셴 (張春賢)	1953.5.	허난(河南)	하얼빈(哈爾濱)공업대학 (석사)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 자치구 서기, 신장생산건설병단 제1정치위원
류치바오 (劉奇葆)	1953.1.	안후이(安徽)	지린(吉林)대학(석사)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선전부 부장
류연둥 (劉延東)	1945.11.	장쑤(江蘇)	지린대학(박사)	국무원 부총리, 국가과기교육영도소조 부조장
왕양 (汪洋)	1955.3.	안후이(安徽)	중앙당교(석사)	국무원 부총리
마카이 (馬凱)	1946.6.	상하이(上海)	중국인민대학(석사)	국무원 부총리
맹젠주 (孟建柱)	1947.7.	장쑤(江蘇)	상하이기계학원(석사)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국무원원, 중앙사회관리종합 거버넌스위원회 주임
리원톈호 (李源潮)	1950.11.	장쑤(江蘇)	중앙당교(박사)	국가부주석
리젠궈 (李建國)	1946.4.	산둥(山東)	산둥대학(학사)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 중화전국총공회 주석

이름	출생연월	출생지	출신학교 (최종학력)	주요 직위
판창룡 (範長龍)	1947.5.	랴오닝(遼寧)	중앙당교(학사)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쉬치량 (許其亮)	1950.3.	산둥(山東)	공군제5항공학교(학사)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왕후닝 (王滬寧)	1955.10.	산둥(山東)	푸단(復旦)대학(석사)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중앙서기처 서기
리잔수 (栗戰書)	1950.8.	허베이(河北)	허베이사범대학(석사)	중앙판공청 주임

자료: 저자 작성

(나) 중앙인민정부(政)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는 중앙정부 및 국가기관 수장들을 선출하여 시진핑 1기 지도부가 완성되었다. 아래 <표 II-3> 및 <표 II-4>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리커창 국무원 총리, 장가오리(張高麗), 류옌둥, 왕양, 마카이(馬凱) 등 4명의 국무원 부총리, 양징(楊晶), 창완취안(常萬全), 양제츠(楊潔篪), 귀성곤(郭聲琨), 왕용(王勇) 등 5명의 국무위원, 그밖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이하 정협) 주석 및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원장,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檢察院) 원장 등이 선출되었다. 리커창 총리가 맡은 국무원은 20개 부와 3개 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중국심계서(審計署) 등 총 25개 부·위원회로 구성된다.^{23/} 국무원의 각 부장 및 주임 등은 전임 정부와의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총 15명이 유임되었다.

^{23/} 시진핑 1기의 구체적인 중앙정부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는 전병곤 외,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신종호,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 정책 전망』 참조.

표 II-3 시진핑 1기 지도부 현황

직 위	이 름	출생연월	출생지	출신학교 (최종학력)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	1953.6.	산시(陝西)	칭화대학(박사)	
국가부주석	리위안차오(李源朝)	1950.11.	장쑤(江蘇)	중앙당교(박사)	
전인대 상무위원장	장더장(張德江)	1946.11.	랴오닝(遼寧)	김일성종합대학(학사)	
국무원	총리	리커칭(李克強)	1955.7.	안후이(安徽)	베이징대학(박사)
	부총리	장가오리(張高麗)	1946.11.	푸젠(福建)	사먼대학(학사)
		류연둥(劉延東)	1945.11.	장쑤(江蘇)	지린대학(박사)
		왕양(汪洋)	1955.3.	안후이(安徽)	중앙당교(석사)
		마카이(馬凱)	1946.6.	상하이(上海)	중국인민대학(석사)
	국무 위원	양징(楊晶)	1953.12.	네이멍구 (內蒙古)	중앙당교(석사)
		창완취안(常萬全)	1949.1.	허난(河南)	산시성웨이난사범전문 학교(학사)
		양제츠(楊潔篪)	1950.5.	상하이(上海)	난징대학(박사)
		귀성쿤(郭聲琨)	1954.10.	장시(江西)	베이징과기대학(박사)
		왕용(王勇)	1955.12.	랴오닝(遼寧)	하얼빈공업대학(석사)
국가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習近平)	1953.6.	산시(陝西)	칭화대학(박사)
	부주석	판창롱(範長龍)	1947.5.	랴오닝(遼寧)	중앙당교(학사)
		쉬차량(許其亮)	1950.3.	산둥(山東)	공군 제5항공학교(학사)
중국인민정치 협상회의 주석	위정성(俞正聲)	1945.4.	저장(浙江)	하얼빈군사공정학원(학사)	
최고인민법원장	저우창(周強)	1960.4.	후베이(湖北)	시난정법학원(석사)	
최고인민검찰원장	차오젠밍(曹建明)	1955.9.	장쑤(江蘇)	화둥정법학원(석사)	

자료: 저자 작성.

표 II-4 시진핑 1기 국무원 부·위원회(장관급) 수장(首長)

부위원회(직위)	이름	비고
외교부(부장)	왕이(王毅)	
국방부(부장)	창완취안(常萬全)	국무위원 겸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	쉬사오스(徐紹史)	

부위원회(직위)	이름	비고
교육부(부장)	위안구이런(袁貴仁)	
과학기술부(부장)	완강(萬綱)	
공업정보화부(부장)	마오웨이(苗圩)	
국가민족사무위원회(주임)	왕정웨이(王正偉)	
공안부(부장)	귀성쿤(郭聲琨)	국무위원 겸임
국가안전부(부장)	경후이창(耿慧昌)	
감찰부(부장)	황수셴(黃樹賢)/양샤오두(楊曉渡)	황수셴(~2016.11.)
민정부(부장)	리리궈(李立國)/황수셴(黃樹賢)	리리궈(~2016.11.)
사법부(부장)	우아이잉(吳愛英)	
재정부(부장)	러우지웨이(樓繼偉)	
인력자원사회보장부(부장)	인위민(尹蔚民)	
국토자원부(부장)	장다밍(薑大明)	
환경보호부(부장)	저우성셴(周生賢)	
주택농농건설부(부장)	장웨이신(薑偉新)	
교통운수부(부장)	양찬탕(楊傳堂)	
수리부(부장)	천레이웨이(陳雷爲)	
농업농촌부(부장)	한창빈(韓長斌)	
상무부(부장)	가오후청(高虎城)	
문화부(부장)	차이우웨이(蔡武爲)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주임)	리빈(李斌)	
중국인민은행(은행장)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심계서(심계서장)	류자이(劉家義)	

자료: 저자 작성.

(다) 군부(軍)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후진타오로부터 승계받고, 2013년 3월에 전인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에 선출되어 당정 모두의 군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다. 이는 전임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장쩌민 전임 국가주석에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뒤늦게 승계받은 것과

달리 대내외정책 추진 과정에서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24/}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민간인 없이 군 인사 2명(판찬룽(範長龍), 쉬치량(許其亮))으로 채워졌고, 위원으로는 8명(창완취안, 팡펑후이(房峰輝), 장양(張陽), 자오커스(趙克石), 장유샤(張又俠), 우성리(吳勝利), 마샤오텐(馬曉天), 웨이펑허(魏鳳和))이 임명되었다.^{25/}

(2) 시진핑 1기 대외정책 특징

시진핑 1기는 중국의 국제적 정체성에 변화가 나타나 기존의 대외정책도 이와 함께 재구성하려고 하였다. 즉, 후진타오 시기까지 중국은 ‘개발도상국(또는 발전도상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대외정책을 입안하였다면, 이제는 ‘강대국’이란 새로운 정체성으로 전환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을 새롭게 재구성하고자 하였다.^{26/} 이러한 시진핑 지도부의 주변 정세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형세(新型勢)’에 대한 강조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은 ‘중국몽(中國夢)’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的偉大復興)’을 주창하고 대국외교를 중심으로 주변외교, 개도국 외교 등 다자주의 외교^{27/}를 강조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다. 시진핑은 2012년 초 국가부주석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미중 간에

24/ 신중호, “중국공산당 제18차 당 대회와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 『국제문제연구』, 제12권 4호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2), pp. 67~101.

25/ 신중호,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p. 50.

26/ 김홍규,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사조의 변화와 함의,” 『신아세아』, 22권 4호 (2015), p. 38.

27/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의 역사적 배경은 김한권, “시진핑 시기 중국 다자주의 외교의 변화: UN 전문기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 국제문제분석, 2020.4.3.), <<https://www.ifans.go.kr/knda/com/fileupload/FileDownloadView.do?storageId=c61b04e5-0182-4c75-ad21-828ecacfb855&uploadId=3555004630309948&fileSn=1>> (검색일: 2023.1.10.) 참조.

새로운 강대국 관계의 형성을 제안한 바 있다. 즉, 강대국을 대상으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제시하며 미중관계를 이끄는 기본 틀로 추진하였다. 신형대국관계는 후진타오 시기 말인 2010년 제시되어 2012년 10월 18차 당 대회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된 시진핑 시대의 외교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이 바라는 새로운 미중관계를 개념화한 것이다.^{28/} 2014년에는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中國特色大國外交)’^{29/}를 천명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에 힘을 쏟았다. 주변 개발도상국에게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를 제시하며 중국이라는 성장 열차에 올라탈 것을 적극 독려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G20 항저우 정상회의 등 굵직굵직한 다자무대를 자국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여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부각했고, 2013년 10월 ‘주변외교업무좌담회(周邊外交工作座談會)’에서는 “주변국 외교가 중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임을 밝히고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관계 안정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30/} 이를 통해 주변국 외교 이념으로 주변국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친(親)’, 성의를 다해 주변국을 다하는 ‘성(誠)’, 중국 발전의 혜택을 주변국과 나누겠다는 ‘혜(惠)’, 주변국을 더욱 포용하겠다는 ‘용(容)’의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아시아 국가에 “친(親)·성(誠)·혜(惠)·용(容)” 등 다양한 중국식 담론을 선보이며 소프트파워 증진을 꾀했다.^{31/} 그리고 신형국제관계 이념과 인류운명공동체를 만드는 구체적 경로를 밝히고 외교 목표로 제시하

28/ 김홍규, “시진핑 시기 미중 새로운 강대국 관계 형성 전망과 대한반도 정책,” 『국방연구』, 제56권 제3호 (2013), p. 38.

29/ 2014년 11월 28-29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및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시진핑은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강조함.

30/ 2013년 10월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주변외교업무좌담회’에서 대주변국 외교 이념으로 천명함.

31/ 서정경, “시진핑 2기 정부의 외교 전망: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4권 1호 (2018), pp. 5~33.

는 등 국제관계에서의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어젠다를 주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밖에도 1990년대 중반에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력을 표방하며 제시된 ‘신안보관(新安全觀)’을 다자간 안보협력을 위해 강조하였고, 2014년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기초연설을 통해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함께 ‘아시아 신안보관’을 제시하고 본 회의를 “아시아지역 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협력기구로 만들자”라고 제안하였다.

중국은 과거 강대국 관계와는 달리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지 않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부상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천명해왔으며, 기존 질서와 구도에 편입되지 않고 새로운 질서와 구도를 만들고 새로운 판을 짜는 전략을 추구한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 반드시 국제법과 국제규범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중 견제를 계속하였다.^{32/} 이러한 상황은 미중 간 ‘전략적 의혹과 불신(strategic distrust)’ 속에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역 규범과 질서 창출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점차 심화할 것임을 보여준다.^{33/}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중북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기존에 특수 관계를 지양하고 국가이익에 기반한 정부 중심의 교류를 위주로 정상적인 중북관계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북한 내의 급변사태 등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자국의 국익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이면서 한국 측과의 소통을 유지하려는

32/ 신중호,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p. 53.

33/ 김홍규, “시진핑 시기 미중 새로운 강대국 관계 형성 전망과 대한반도 정책,” pp. 28~29.

의지를 보여주었다.^{34/}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도발과 장성택 처형 등 일련의 상황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신뢰가 약화하고 중북관계가 경색되는 국면을 맞이하였다. 한중관계는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수립한 이후 시진핑-박근혜 정부 시기 역대 최상의 관계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계속된 북한 핵문제와 사드(THAAD) 배치 문제 등 안보와 직접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한중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도 하였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나.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의 특징과 대외정책

(1)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 현황과 특징

(가) 중국공산당(黨)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1기 동안 다른 정치세력들과 조정 및 타협을 중시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했다.^{35/} 2016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이하 제18기 6중전회)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核心)으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표현이 공식 언급되면서 전임 장쩌민, 후진타오 총서기와도 차별화된 중국공산당 내의 ‘핵심’ 지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차 당 대회)에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하 시진핑 사상)’이 당장(黨章)에 삽입되어 시진핑 자신의 1인 권력 강화 및 자신감 있고 강력한 대내외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점차 강화하였다.^{36/}

34/ 김홍규,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사고의 변화와 함의,” p. 41.

35/ 신중호,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p. 61.

36/ 위의 책, pp. 60~61.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관련한 인사 부문에서 시진핑 1기와 비교하여 이러한 경향이 더욱 반영되었다. 19차 당 대회에서 204명의 중앙위원회 위원 및 172명의 후보위원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 133명이 선출되었다. 19차 당 대회 폐막 직후 제19기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하 제19기 1중전회)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25명을 선출하고, 그중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국무총리가 연임하고, 리잔수(栗戰書), 왕양, 왕후닝(王滬寧), 자오러지 및 한정(韓正) 등 5명이 새롭게 상무위원에 진입하면서 시진핑 2기의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완성되었다.

시진핑 2기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표 II-5>와 같이 총 7명으로 구성되었고, 시진핑 1기 상무위원 중 장더장, 위정성(俞正聲), 류원산, 왕치산(王岐山) 및 장가오리 등 5명이 물러나고 새롭게 교체되었다. 18기와 비교하여 상하이방으로 불리던 장더장, 위정성, 류원산, 장가오리 등이 물러나고 새롭게 진입한 한정만이 상하이방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리잔수, 왕후닝, 자오러지 등 시진핑 측근 그룹이 부상하였다. 2017년 제19기 1중전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당시 거론되었던 천민얼(陳敏爾) 충칭(重慶)시 서기와 후춘화 부총리의 기용에 대해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증원 및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고, 그동안 차기 후보자로 주목받던 이들의 상무위원회 진입에 대한 관측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정치국 위원은 총 25명으로 그중에서 15명이 새롭게 선출되었다. 신입 위원 중 11명은 시진핑의 옛 근무지 동료이거나 동향, 동문이며 시진핑의 측근세력으로 시진핑이 직접 발굴하거나 충성도가 높은 시진핑계로 강화되었다. 이는 당내 한 축으로 등장했던 태

자당의 의미는 약화하고, 상하이방과 공청단은 축소되면서 시진핑 계열이라는 시진핑 측근 그룹의 부상과 이로 인한 시진핑의 권력 강화라는 특징을 보였다.

18차 당 대회에서 국유기업 임원 출신 5명이 중앙위원회에 진출한 것과 달리 19차 당 대회에서는 국유기업 임원들의 중앙위원회 진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유기업 개혁 목표와는 달리 부패 척결 의지가 반영되어 기업 인사가 배제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37/}

시진핑 2기 지도부는 대체로 중앙위원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다시 상무위원으로의 점진적, 단계적 승진제도를 통해 과도한 권력 경쟁을 피하고 세대 간, 계파 간 안정적 권력 이양을 형성하여 ‘점진적, 단계적 승진제도’가 잘 지켜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한 세대 지도부는 1회 연임을 허용하여 총 10년을 임기로 하여 ‘격대지정(隔代指定)’을 통해 차세대 지도부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하여 후계자 수업을 받고 권력 이양을 준비하는 관례가 있으나 이러한 ‘격대지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과거 3세대 지도자인 장쩌민과 4세대 지도자인 후진타오, 그리고 현 5세대 지도자 시진핑과 리커창 또한 격대지정에 따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사전에 진입하여 지도자 수업을 받았다. 그런데, 차세대 주자로 유력했던 후춘화 광둥성 서기와 천민얼 충칭시 서기는 중앙정치국 위원에 머물렀다. 기존 중국의 집단지도체제 특징은 ‘점진적, 단계적 승진제도’와 ‘격대지정’을 통해 세대 간 안정적 권력 이양과 특정 계파, 파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진핑

37/ 2019년 10월 19기 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었던 국유기업 임원인 청통(誠通)그룹 회장 마정우(馬正武)를 중앙위원회에 임명하였다. 이는 국유기업 개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타결해보려는 또 다른 해법으로 작용한 것일 수 있다.

1기와 비교하여 2기 지도부 인선의 특징은 계파 및 파벌 구성에 있어서 시진핑계열의 부상과 이로 인한 집단지도체제의 약화와 시진핑 1인 중심의 권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표 II-5 제19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현황(시진핑 2기)
(19기 1중대회, 2017년 10월 25일)

이름	출생연월	출생지	출신학교 (최종학력)	주요 직위
시진핑 (習近平)	1953.6.	산시(陝西)	칭화(清華)대학(박사)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리커창 (李克強)	1955.7.	안후이(安徽)	베이징(北京)대학(박사)	국무원 총리
리잔수 (栗戰書)	1950.8.	랴오닝(遼寧)	김일성종합대학(학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양 (汪洋)	1955.3.	저장(浙江)	하얼빈(哈爾濱)군사공정학원 (학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왕후닝 (王滬寧)	1955.10.	산시(山西)	중앙당교(학사)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문명위원회 주임
자오러지 (趙樂際)	1957.3.	산시(山西)	시베이(西北)대학(학사)	중앙기율검사 위원회 서기
한정 (韓正)	1954.4.	푸젠(福建)	샤먼(廈門)대학(학사)	국무원 상무부총리

자료: 저자 작성.

표 II-6 제19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현황(시진핑 2기)
(19기 1중대회, 2017년 10월 25일, 상무위원 제외)

이름	출생연월	출생지	출신학교 (최종학력)	주요 직위
당쉐상 (丁薛祥)	1962.9.	장쑤(江蘇)	푸단(復旦)대학(석사)	중앙서기처 서기
왕첸 (王晨)	1950.12.	베이징(北京)	중국사회과학원(석사)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

이름	출생연월	출생지	출신학교 (최종학력)	주요 직위
류허 (劉鶴)	1952.1.	허베이(河北)	중국인민대학(석사)	국무원 부총리
쉬치량 (許其亮)	1950.3.	산둥(山東)	공군 제5항공학교(학사)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쑤춘란 (孫春蘭, 여)	1950.5.	후베이(湖北)	중앙당교(석사)	국무원 부총리
리시 (李希)	1956.10.	간쑤(甘肅)	시베이(西北)사범학원(학사)	광둥성 서기
리창 (李強)	1959.7.	저장(浙江)	중앙당교(석사)	상하이시 서기
리홍중 (李鴻忠)	1956.8.	산둥(山東)	지린(吉林)대학(학사)	톈진시 서기
양제츠 (楊潔篪)	1950.5.	상하이(上海)	난징(南京)대학(박사)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양샤오두 (楊曉渡)	1953.10.	상하이(上海)	중앙당교(석사)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장유샤 (張又俠)	1950.7.	산시(陝西)	군사학원(전문학사)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천시 (陳希)	1953.9.	푸젠(福建)	칭화(清華)대학(석사)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조직부 부장
천취안궈 (陳全國)	1955.11.	허난(河南)	우한(武漢)이공대학(박사)	신장위구르자치구 서기 신장생산건설병단 제1정치위원
천민얼 (陳敏爾)	1960.9.	저장(浙江)	중앙당교(석사)	충칭시 서기
후춘화 (胡春華)	1963.4.	후베이(湖北)	베이징대(학사)	국무원 부총리
곽성궈 (郭聲琨)	1954.10.	장시(江西)	베이징과기대학(박사)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중앙서기처 서기
황쿤밍 (黃坤明)	1956.11.	푸젠(福建)	칭화대학(박사)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선전부 부장
차이치 (蔡奇)	1955.12.	푸젠(福建)	푸젠사범대학(박사)	베이징시 서기

자료: 저자 작성.

(나) 중앙인민정부(政)

2018년 3월 제13기 전인대에서 중앙정부 및 국가기관 수장들을 선출하여 시진핑 2기 지도부가 완성되었다. 아래 <표 II-7> 및 <표 II-8>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치산 국가부주석,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리커창 국무원 총리, 한정, 쑨춘란(孫春蘭), 후춘화, 류허(劉鶴) 등 4명의 국무원 부총리, 웨이펑허, 왕융, 왕이(王毅), 샤오제(肖捷), 자오커즈(趙克志) 등 5명의 국무원, 그밖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및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등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최고감찰기관으로 신설된 국가감찰위원회(國家監察委員會)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양샤오두(楊曉渡) 부서기가 주임을 겸직하였다.^{38/} 리커창 국무원총리가 맡은 국무원은 2018년 「당·국가기구개혁심화방안(深化黨和國家機構改革方案)」에 따라 개편되어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문화여유부 등으로 부서명이 바뀌고, 퇴역군인사무부와 응급관리부가 신설되어 21개 부로 확대되었으며, 3개 위원회 및 중국인민은행, 중국심계서 등 총 26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39/} 특히, 각 부문의 수장 중에서 시진핑계열의 인사들이 대거 진출하고 공청단 및 상하이방의 쇠퇴와 함께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 전문관료를 배치한 특징이 나타난다. 이와 함께 시진핑 2기의 당·국가기구개혁은 ‘당’과 ‘정부(국무원)’로 이원화되었던 사무기구를 당중앙 조직으로 통일하는 등 당정일원화의 특징이 나타나 중국공산당의 전면적 영도강화뿐만 아니라 시진핑 권력 강화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40/}

38/ 국가감찰위원회는 2018년 3월 발표한 『당·국가기구개혁심화방안(深化黨和國家機構改革方案)』 국가감찰위원회의 내용이 소개되었고, 그 특징에 대해서는 황태연,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신설과 특징: 권위주의적 통제강화와 법·제도화의 딜레마,” 『현대중국연구』 제22집 제3호 (2020), pp. 1~35 참조.

39/ 실제로 2018년 당·국가기구개혁에 따르면 정부(正部)급 기구는 시진핑 1기와 비교하여 8개 감소하여 총 26개 부문에 이른다. 시진핑 2기의 구체적인 중앙정부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는 신중호,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참조.

40/ 당정기구 개혁 내용 및 특징은 다음을 참조. 황태연, “중국의 당정(黨政)관계 변

표 II-7 시진핑 2기 지도부 현황

직 위	이 름	출생연월	출생지	출신학교(최종학력)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	1953.6.	산시(陝西)	칭화대학(박사)		
국가부주석	왕치산(王岐山)	1948.7.	산시(山西)	시베이대학(학사)		
전인대 상무위원장	리잔수(栗戰書)	1950.8.	허베이(河北)	허베이사범대학(석사)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強)	1955.7.	안후이(安徽)	베이징대학(박사)	
		부총리	한정(韓正)	1954.4.	저장(浙江)	화둥사범대학(석사)
			쑤춘란(孫春蘭)	1950.5.	허베이(河北)	중앙당교(석사)
			후춘화(胡春華)	1963.4.	후베이(湖北)	베이징대학(학사)
			류허(劉鶴)	1952.1.	허베이(河北)	중국인민대학(석사)
	국무 위원	웨이펑허(魏鳳和)	1954.2.	산둥(山東)	국방대학(학사)	
		왕용(王勇)	1955.12.	랴오닝(遼寧)	하얼빈공업대학(석사)	
		왕이(王毅)	1953.10.	베이징(北京)	베이징제2외국어학원 (석사)	
		샤오제(肖捷)	1957.6.	랴오닝(遼寧)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박사)	
		자오커즈(趙克志)	1953.12.	산둥(山東)	중앙당교(석사)	
국가 중앙 군사위 원회	주석 부주석	시진핑(習近平)	1953.6.	산시(陝西)	칭화대(박사)	
		쉬치량(許其亮)	1950.3.	산둥(山東)	공군제5항공학교(학사)	
		장유샤(張又俠)	1950.7.	산시(陝西)	군사학원(전문학사)	
중국인민정치 협상회의 주석	왕양(汪洋)	1955.3.	안후이(安徽)	중앙당교(석사)		
최고인민법원장	저우창(周強)	1960.4.	후베이(湖北)	시난정법학원(석사)		
최고인민검찰원장	장쥘(張軍)	1956.10.	산둥(山東)	중국인민대학(법학)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양샤오두(楊曉渡)	1953.10.	상하이(上海)	중앙당교(석사)		

자료: 저자 작성.

화,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인가?: 시진핑 시대 당정 기구개혁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21집 제2호 (2019), pp. 1~35.

표 II-8 시진핑 2기 국무원 부·위원회(장관급) 수장(首長)

부위원회(직위)	이름	비고
외교부(부장)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임
국방부(부장)	웨이펑허(魏鳳和)	국무위원 겸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	허리펑(何立峰)	
교육부(부장)	천바오성(陳寶生)	
과학기술부(부장)	왕즈강(王志剛)	
공업정보화부(부장)	마오웨이(苗圩)	
국가민족사무위원회(주임)	바티얼(巴特爾)	
공안부(부장)	자오커즈(趙克志)	국무위원 겸임
국가안전부(부장)	천원칭(陳文清)	
민정부(부장)	황수셴(黃樹賢)	
사법부(부장)	푸정화(傅政華)	
재정부(부장)	류쿤(劉昆)	
인력자원사회보장부(부장)	장지난(張紀南)	
자연자원부(부장)	루하오(陸昊)	부서명 변경
생태환경부(부장)	리간제(李幹傑)	부서명 변경
주택도시건설부(부장)	왕멍후이(王蒙徽)	
교통운수부(부장)	리샤오펑(李小鵬)	
수리부(부장)	어징핑(鄂竟平)	
농업농촌부(부장)	한창빈(韓長斌)	
상무부(부장)	중산(鍾山)	
문화여유부(부장)	뤄수강(雒樹剛)	부서명 변경
국가위생건강위원회(주임)	마샤오웨이(馬曉偉)	
퇴역군인사무부(부장)	쑤사오칭(孫紹驥)	신설
응급관리부(부장)	왕위푸(王玉普)	신설
중국인민은행(은행장)	이강(易綱)	
중국심계서(심계서장)	후쩌롄(胡澤君)	

자료: 저자 작성.

(다) 군부(軍)

2017년 19차 당 대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시진핑), 2명의 부주석(쉬치량, 장유사)과 4명의 위원(웨이핑허, 리취청(李作成), 마오화(苗華), 장성민(張升民)) 등이 임명됐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은 시진핑 1기에 비해 4명으로 감소했다. 많은 전문가가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요인 중 하나로 군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군부가 전통과 애국주의를 강조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증대해 왔고, 최근의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 한국과의 사드 배치 갈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서 강경한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41/} 그러나 대외정책에서 군부의 영향력은 중국공산당의 중앙기구, 즉, 중앙정치국 위원에 군 관련 인사가 몇 명이나 진출했는지를 근거로 살펴보면 전문성을 갖춘 전문관료의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1982년에 중앙정치국 위원 25명 중 약 20명이 군부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었지만, 1997년 이후 2명만이 군 출신(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2명)으로 2017년 19차 당 대회 이후에도 중앙정치국 위원 중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2명만이 군 관련 인사다.^{42/}

(2) 시진핑 2기 대외정책 특징

시진핑 1기에 이어 대외정책 기조에 있어서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의 개념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전략 측면에서 기존의 ‘도광양희(韜光養晦)’ 전략을 벗어나 적극적 외교 자세를 보여주는 ‘분발유위(奮發有爲)’를

41/ 신중호,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p. 96.

42/ 위의 책, pp. 100~101.

전면에 내세웠다. 이러한 적극적 외교 자세는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소위 ‘전랑(戰狼)외교’라 평가하기도 한다.

중국이 대외정책 방향으로 강조하는 다자주의 외교는 시진핑 2기에 서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 측이 인식하는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에 다 자주의 외교로 대응하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43/}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자주의를 불신함에 따라 미국이 지난 70년간 국제사회에서 맡아 온 리더 역할에서 손을 뗀 가운데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리더십 공백을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잠재적인 기회로 인식한 것이다.^{44/}

2022년 20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보고」를 통해 자신의 지난 10년의 집권 시기 동안 나타난 대외정책의 성과를 제시했다. 대외정책 관련 평가에서 “일대일로 성과, 총체적 국가안보 강화, 전면적 중국 특색 대국외교 추진과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및 신형국제 관계의 추동” 등을 제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진핑 2기의 대외 정책 특징은 1기에서 제시한 대외정책 기조 및 방향에 대한 강화, 점증적 확대 발전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19차 당 대회에서 상호존중, 공평정의, 협력공영의 신형 대국관계 건설 및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이 중국 외교의 목표임을 제시하고, 올바른 의리관, 내정불간섭 원칙 견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갈등과 분쟁의 해결, 무력 사용 반대 등의 기본 원칙과 평화공존 5원칙과 같이 기존 중국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제시하며 중국 특색을 강조하였다.^{45/} 이와 같은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변외교 및

43/ 김한권, “시진핑 시기 중국 다자주의 외교의 변화: UN 전문기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p. 25.

44/ 스리칸스 콘다팔리, “중국 특색의 지역 다자주의,” David Shambaugh 편저, 김지용·서운정 옮김, 『중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서울: 명인출판사, 2021), p. 446.

45/ 전병근 외, “중국 20차 당 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p. 75.

대국관계, 대 개도국 협력 관계, 다자주의 외교, 일대일로, 그리고 해외에서의 권익 수호 등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시진핑 집권 2기의 국가전략 방향은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현대화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위험 요소를 예방, 제거하고, 국가안보관을 지키며, ‘발전(發展)’과 ‘안보(安全)’에 대한 전반적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안보’는 총체적 국가안보관(總體的國家安全觀), 국가안보체계, 국가안보능력 건설 강화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경제안보, 식량안보, 에너지자원안보, 금융안보 등 새로운 비전통안보 영역에 대하여 대비하고 공공안보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안정과 안보 수호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안보는 경제부국(富國)을 기반으로 가능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46/} 시진핑 집권 이후 외교 목표를 제시하고 대외정책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어젠다를 주도하려는 노력은 시진핑 집권 2기에서도 계속되었다.

시진핑 2기 말기에는 ‘안보’와 ‘발전’이라는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제안하였다. 먼저, 2021년 9월 유엔총회 일반토론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발전 우선과 인민 중심, 호혜와 포용·혁신 견지, 그리고 인류와 자연의 공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글로벌 발전구상(全球發展倡議)’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2022년 4월 보아오(博鰲) 아시아 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글로벌 안보구상(全球安全倡議)’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글로벌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공동 안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중국은 글로벌 안보구상을 통해 대화 협상의 자세를 견지하고 항구적으로 평화로운 세계 건설 및 공생 협력과 번영 등을 추구

46/ “2021年國務院政府工作報告,” 『中國政府網』, 2021.3.5., <<https://www.gov.cn/zhuanti/2021lhfgzbg/index.htm>> (검색일: 2023.3.10.).

할 것임을 전 세계에 밝히고 있다.

이처럼 대외정책에서 새로운 어젠더를 주도하려는 노력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대외정책 기조로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후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전방위적으로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대외정책 추진 전략으로 나타난 것이다.

시진핑 1기, 2기를 거치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란 원칙을 유지·강조하며 한반도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중국 대외관계의 핵심인 미중관계의 하위에서 운용되어 온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사드 배치 갈등 이후 한중관계는 더욱 최악의 상황으로 전락하고 있다.^{47/} 따라서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지속에 따라 한반도는 북한 핵문제뿐만 아니라 한중관계에 있어서도 더욱 복잡한 리스크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이상의 논의에서 서구의 대외정책 결정 모델을 중국에 적용하려는 다양한 시도와 대외정책 결정 모델의 중국 적용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중국 적용과 사례에서 대표적으로 절대적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요인을 대외정책 결정에 주요 요인으로 내세운 상명하달식 모델로 설명되는 마오 중심 모델이 있다. 제도주의적 모델은 관료조직 내 소수 엘리트가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마오쩌둥과 같이 절대적 영향력의 최고지도자 사례보다는 덩샤오핑이나 장쩌민과 같이 마오쩌둥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낮은 시기의 대

47/ 전병곤 외, 『중국 20차 당 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pp. 107~109.

외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중국 특색의 집단 지도체제 특징을 반영한 중국식 협의 모델은 최고지도부의 영향력이 서구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지만, 소수의 최고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집단지도체제 내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측면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협의 모델은 후진타오 시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총 9명으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가 운영되었던 상황에서 대외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좀 더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시진핑 집권 1, 2기 역시 협의를 중시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식 협의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진핑 2기에서 3기로 나아갈수록 시진핑 1인 우위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집단지도체제가 약화되었다.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모델은 대체로 개인적 요인, 즉, 지도자의 강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시진핑 1, 2기보다 향후 3기에 더 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견제와 도전의 시대라는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내외적 위협인식과 시진핑 1인 우위 체제가 결합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결정 구조를 선호한다. 이는 마오쩌둥 시대처럼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된 상황과 유사하다.

따라서 시진핑 3기 중국의 최고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소위 시진핑계열 사이에 어떤 연계와 협력, 그리고 견제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진핑 3기의 대외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 즉, 약자들의 연합과 집단사고 개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이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특징으로 작용

할 수 있는지는 III, IV장을 통해 검토하고, 이러한 특징이 중국의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본 장에서는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특징과 구별하고자 시진핑 1,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특징을 정리하였다.

먼저, 시진핑 1, 2기 지도부 구성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시진핑 1기에서는 소위 파벌을 일정 부분 용인하는 형태로 지도부가 구성되었고, 2기에서는 정치세력 간 균형이나 안배뿐만 아니라 시진핑의 측근 인사를 전진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시진핑 1기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전임 후진타오 시기의 17대 상무위원과 비교해 2명이 감소한 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18차 당 대회 인사의 특징으로 소수파로 분류되던 시진핑 총서기가 당내 합의에 기초한 인사결과가 수용된 결과로 보인다. 소위 공청단 세력을 대표하는 리커창, 상하이방을 대표하는 장더장 등이 선출되면서 세력 간 균형이 이뤄지며 각 파벌의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세력 간에 균형 있는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1기 동안 자신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6년 제18기 6중전회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공식 언급되면서 중국공산당 내의 핵심지위를 확립했고, 이어서 2017년 19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사상’이 당장에 삽입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시진핑 자신의 당내 권력 강화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강력한 대내외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은 시진핑 1기와 비교하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반영되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살펴보면, 시진핑 1기와 마찬가지로 상무위원이 총 7명으로 구성되지만, 18기와 비교하여 장더장 등 상하이방 4명이 물러나고 새롭게 진입한 정만이 상하이방으로 분류되면서 시진핑 측근 그룹이라고 불리는

리잔수, 왕후닝, 자오러지 등이 부상하였다. 또한, 소위 차기 후보자로 주목받던 천민얼, 후춘화 등이 상무위원회 진입이 실현되지 못하면서 후계 구도와 관련된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차세대 지도부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하여 권력 이양을 준비하는 관계인 ‘격대지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시진핑 2기는 시진핑에게 충성도가 높은 시진핑계열이라는 시진핑 측근 그룹의 부상과 이로 인한 집단지도체제의 약화 등으로 시진핑 1기와 비교해 시진핑 1인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음으로 시진핑 1, 2기의 대외정책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시진핑 1기는 후진타오 시기까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대외정책을 입안하였던 것에서 중국의 정체성 변화에 따라 대외정책도 재구성하려고 하였다. 즉, 강대국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전환에 맞춰 이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을 펼치고자 한 것이다. 시진핑은 집권 후 ‘중국몽’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창하고 대국외교를 중심으로 주변외교, 개도국 외교 및 다자주의 외교를 강조하였다. 미국을 상대로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여 미중관계를 이끄는 외교관계의 기본 틀로 추진하였고, ‘신형국제관계’ 및 ‘인류운명공동체’를 국제관계에서의 새로운 담론으로 제시하며 어젠다를 주도하고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였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북한에 대한 신뢰가 약화하고 중북관계가 경색되는 국면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한중관계는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박근혜 정부 시기 최상의 관계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지만, 사드배치 문제가 발생하면서 한중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있다.

시진핑 2기에서는 시진핑 1기에 이어 대외정책에서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신형국제관계 및 인류운명공동체 등의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강조하였다. 대외정책 추진 전략 차원에서는 적극적 외교 자세를 보여주는 ‘분발유위’를 전면에 내세우며, 소위 ‘전랑외교’로 평가받는 적극적 외교 자세를 통해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대응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전략에 맞서 대외정책 방향으로 다자주의 외교를 더욱 강화하면서 미국의 리더십 공백을 자신의 영향력 확대 기회로 삼았다. 시진핑 2기 말기에 두 개의 이니셔티브로 ‘안보’와 ‘발전’을 제시하고, 글로벌 발전구상과 글로벌 안보구상을 제시하는 등 대외정책에서 새로운 어젠더를 주도하려는 노력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대외정책 추진 전략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1, 2기를 거치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등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였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반도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중관계에서 더욱 복잡한 리스크가 증가하였다.

Ⅲ.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구성 현황과 특징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구성 현황과 특징

1.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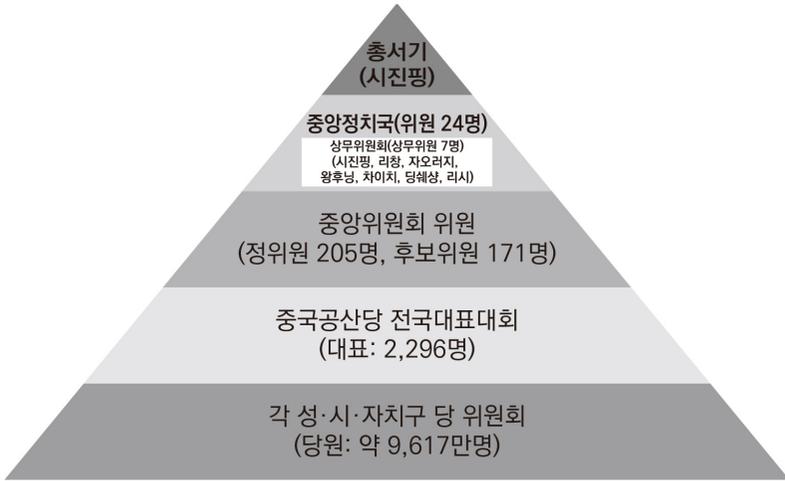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黨), 정(政), 군(軍) 핵심 기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아래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중앙정치국 위원, 헌법상 최고권력기관인 전인대, 최고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 그리고 전국의 무장역량을 영도하는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을 분석한다.

가. 중국공산당(黨)

(1) 중앙위원회 위원 및 중앙정치국 위원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은 가장 중요한 행위자(actors)로 인식해 왔으며, 이 중에서도 핵심 지도부는 중앙위원 및 중앙정치국 위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10월 개최된 제20차 당 대회는 총 2,296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205명의 중앙위원 및 171명의 후보위원(총 376명)을 선출했다. 그리고 당 대회 폐막 다음 날 개최된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이하 제20기 1중전회)에서는 376명의 중앙위원(후보위원 포함)들이 총서기(시진핑)와 중앙정치국 위원(24명), 중앙정치국 상무위원(7명)을 선출했다.

그림 Ⅲ-1 제20기 중국공산당 지도부 구성



자료: 저자 작성.

중앙정치국 위원은 총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에서 7명이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전임 시진핑 2기(2017.10.~2022.10.) 중앙정치국 상무위원(7명) 중에서 3명(시진핑, 자오러지, 왕후닝)이 시진핑 3기에도 유임되었고, 4명(리창(李強), 차이치(蔡奇), 덩쉐샹(丁薛祥), 리시(李希))은 새롭게 선출되었다. 시진핑을 제외한 6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모두 시진핑계열 혹은 범시진핑계열(凡習派)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시진핑이 저장(浙江)성과 푸젠(福建)성 당 위원회 서기로 근무했을 당시 교류하던 측근^{48/}도 2명(리창, 차이치)이나 포함되었다.

48/ 시진핑이 저장성 당위원회 서기로 재직할 때 함께 근무했던 간부와 비서진, 시진핑의 추천을 받았거나 시진핑이 추천한 인물, 그리고 시진핑과 교류협력을 했던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즈장신권(之江新軍)’으로 지칭하며, 푸젠성 당위원회 서기로 재직할 때 함께 근무하며 생활했던 간부와 비서진은 ‘민장신권(閩江新軍)’으로 지칭.

표 III-1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현황(시진핑 3기)

이름	출생연월	출생지	출신학교 (최종학력)	주요 직위	비고
시진핑 (習近平)	1953.6.	산시(陝西)성 푸핑(富平)	칭화(清華)대학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유임)	태자당
리창 (李強)	1959.7.	저장(浙江)성 루이안(瑞安)	중앙당교 공상관리(工商管理) 석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신규) 국무원 총리 및 당조(黨組) 서기	시진핑계열 (之江新軍)
자오러지 (趙樂際)	1957.3.	산시(陝西)성 시안(西安)	베이징(北京)대학 철학 학사 중앙당교 석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유임)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시진핑계열
왕후닝 (王滬寧)	1955.10.	산둥(山東)성 라이저우(萊州)	푸단(復旦)대학 법학 석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유임) 제14기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 중공중앙 전면심화개혁위원회화판공실 주임	범시진핑 계열
차이치 (蔡奇)	1955.12.	푸젠(福建)성 유시(尤溪)	푸젠사범대학 경제학 박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신규)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시진핑계열 (之江新軍, 閩江新軍)
당쉐상 (丁薛祥)	1962.9.	장쑤(江蘇)성 난통(南通)	푸단(復旦)대학 이학(理學) 석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신규) 국무원 부총리 당조(黨組) 부서기	시진핑계열
리시 (李希)	1956.10.	간쑤(甘肅)성 량당(兩當)	칭화대학 공상관리 석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신규) 중앙기율검찰위원회 서기	범시진핑 계열

자료: 中國政府網(www.gov.cn), 中國人大網(npc.gov.cn), 人民日報(http://cpc.people.com.cn), 新華社(http://www.xinhuanet.com) 등 참조 저자 작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제외한 17명의 중앙정치국 위원의 경우 시진핑계열 및 범시진핑계열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하였다. 특히 군 관련 인사(장유샤(張又俠), 허웨이동(何衛東))뿐만 아니라 군 관련 전문가 혹은 군 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마싱루이(馬興瑞)는 항공우주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발탁했고, 제20기 중앙정치국 위원 중에서 가장 젊은 리간제(李幹傑, 1964년 11월생)는 핵공업 분야 전문가로 발탁했으며, 위안자권(袁家軍) 역

시 소위 ‘우주파(宇宙幫)’로 지칭되는 우주항공분야의 기술관료라는 점 때문에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발탁했다. 특히 장귀칭(張國淸)은 군 관련 기업에 근무한 경험을 높이 사서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선발했을 뿐만 아니라 국무원 부총리로 발탁하기도 했다.

주요 직할시 수장(당위원회 서기)으로 시진핑 최측근(베이징 인리(尹力), 톈진 천민얼, 상하이 천지닝(陳吉寧)) 혹은 국방현대화와 관련된 인사(충칭 위안자쥘)로 배치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이징 당위원회 서기인 인리는 의학 박사로서 시진핑의 부인인 핑리위안(彭麗媛) 여사의 이미지 메이킹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진핑의 측근이며,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중공중앙선전부 부장인 리수레이(李書磊) 역시 중앙당교 부교장으로 재직시 시진핑의 연설문을 작성한 측근이다.

표 Ⅲ-2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현황
(17人, 상무위원 7명 제외)

이름	출생연월	출생지	출신학교 (최종학력)	주요 직위	비고
마싱루이 (馬興瑞)	1959.10.	산둥(山東)성 원청(鄆城)	하얼빈(哈爾濱) 공업대학 공학 박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신구) 중국공산당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자치구 당위원회 서기 신장생산건설병단 제1정치위원	항공우주과학 기술 전문가
왕이 (王毅)	1953.10.	베이징(北京)시	베이징 제2외국어학원 경제학 석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신구) 중국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외교분야 전문가
인리 (尹力)	1962.8.	산둥(山東)성 린이(臨沂)	러시아의학과학원 의학 박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신구) 중국공산당 베이징시 당위원회 서기	시진핑 부인(핑리위안) 이미지 메이킹

이름	출생연월	출생지	출신학교 (최종학력)	주요 직위	비고
스타이펑 (石泰峰)	1956.9.	산시(山西)성 위서(榆社)	베이징대학 법학 석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신규)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제14기 전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중국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 부장	중앙당교 부교장(2002- 2010)시기 후진타오 및 시진핑의 신임
류귀중 (劉國中)	1962.7.	헤이룽장 (黑龍江)성 왕쿠이(望奎)	허얼빈공대 시스템공정 석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신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부총리	산시(陝西)성 성장(2018.1.) 및 당서기 (2020.7.)
리간제 (李幹傑)	1964.11.	후난(湖南)성 왕칭(望城)	칭화(清華)대학 원자로 공정 및 안전 석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신규)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부장	‘핵공업’ 분야 전문가
리수레이 (李書磊)	1964.1.	허난(河南)성 위안양(原陽)	베이징대학 인문학 박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신규)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부장	시진핑계열 (閩江新軍) 중앙당교 부교장 재직시 시진핑 연설문 작성
리홍중 (李鴻忠)	1956.8.	산둥(山東)성 창러(昌樂)	지린대학 역사학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유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장쩌민계열 (상하이방)→ 시진핑계열 합류
허웨이둥 (何衛東)	1957.5.	푸젠(福建)성 난핑(南平)	국방과학기술대학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신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시진핑계열 (閩江新軍) 시진핑과 군 경력 공유
허립펑 (何立峰)	1955.2.	광둥(廣東)성 싱닝(興寧)	샤먼(廈門)대학 경제학 박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신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부총리	시진핑계열
장유샤 (張又俠)	1950.7.	산시(陝西)성 웨이난(渭南) (북경 출생)	베이징 징산(景山)학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유임)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시진핑과 동향(陝西)
장국칭 (張國清)	1964.8.	허난(河南)성 뤄산(羅山)	칭화(清華)대학 경제학 박사 (고급공정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신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부총리	군 기업 (中國北方工業 公司) 군무 경험

이름	출생연월	출생지	출신학교 (최종학력)	주요 직위	비고
천원칭 (陳文淸)	1960.1.	쓰촨(四川)성 런서우(仁壽)	시난(西南)정법대학 법학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신규)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저우용강과 쓰촨성에서 같이 근무 경험
천지닝 (陳吉寧)	1964.2.	지린(吉林)성 리수(梨樹)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공학 박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신규) 중국공산당 상하이시 당위원회 서기	시진핑계열
천민얼 (陳敏爾)	1960.9.	저장(浙江) 주지(諸暨)	중앙당교 석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유임) 중국공산당 텐진(天津)시 당위원회 서기	시진핑계열 (之江新軍)의 핵심 측근
위안자권 (袁家軍)	1962.9.	지린(吉林)성 통화(通化)	베이징항공우주 (北京航空航天) 대학 공학박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신규) 중국공산당 충칭(重慶)시 당위원회 서기	시진핑계열 (閩江新軍) 우주항공분야 기술관료(宇宙幫)
황쿤밍 (黃坤明)	1956.11.	푸젠(福建)성 상항(上杭)	칭화대학 공공관리학 박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유임) 중국공산당 광둥(廣東)성 당위원회 서기	시진핑계열 (閩江新軍)

자료: 中國政府網(www.gov.cn), 中國人大網(npc.gov.cn), 人民日報(http://cpc.people.com.cn), 新華社(http://www.xinhuanet.com) 등 참조 저자 작성

(2) 중앙서기처

중앙서기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書記處)의 약칭으로, 중앙정치국 및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사무기구이다. 중앙서기처의 업무는 중앙위원회 총서기(시진핑)가 주관하며 주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이처럼 중앙서기처 업무의 중요성으로 인해 중앙서기처 제1서기는 전통적으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 1명이 담당해 왔으며, 차기 지도부의 핵심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제20기 중앙서기처는 총 7명으로 구성되었고, 제1서기는 시진핑계열(之江新軍, 閩江新軍)의 핵심 측근이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차이치가 맡고 있다. 또한 제19기부터 중앙서기처 서기가 중앙

통일전선공작부(이하 중앙통전부) 부장을 겸직하기 시작한 이래 이번 제20기에서도 이를 이어받아 스타이핑(石泰峰)이 중앙통전부 부장직을 겸직하였다. 이 밖에도 중앙서기처 서기인 리간제와 천원칭(陳文淸) 및 리수레이가 각각 중앙조직부 부장,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중앙선전부 부장직을 겸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앙서기처 서기 업무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I-3 역대 중앙서기처 서기 현황(1980년~현재)

임 기	중앙서기처 서기
제11기 (1980년 2월~1982년 9월)	완리(제1서기), 왕런중, 팡이, 구무, 송런충, 위추리, 양더즈, 후차오무, 후야오방, 야오이린, 펑충, 시중신(1981년 6월~)
제12기 (1982년 9월~1987년 10월)	완리(제1서기), 시중신, 덩리첸, 양웅, 위추리, 구무(~1985년 9월), 천피셴, 후치리, 야오이린(~1985년 9월), 차오스(1985년 9월~, 후보), 리펑(1985년 9월~, 하오젠슈(1985년 9월~, 후보), 왕자오궈(1985년 9월~)
제13기 (1987년 10월~1992년 10월)	후치리(제1서기), 차오스, 루이싱원, 옌밍푸, 리루이환, 덩관건, 양바이빙, 원자바오(후보)
제14기 (1992년 10월~1997년 9월)	후진타오(제1서기), 덩관건, 웨이젠싱, 원자바오, 런젠신, 우방궈(1994년 9월~), 장춘원(1994년 9월~)
제15기 (1997년 9월~2002년 11월)	후진타오(제1서기), 웨이젠싱, 덩관건, 장완년, 뤄간, 원자바오, 쩡칭훙
제16기 (2002년 11월~2007년 10월)	쩡칭훙(제1서기), 류원산, 저우융강, 허궈창, 왕강, 쉬차이허우, 허융
제17기 (2007년 10월~2012년 11월)	시진핑(제1서기), 류원산, 리위안차오, 허융, 링지화, 왕후닝
제18기 (2012년 11월~2017년 10월)	류원산(제1서기), 류치바오, 자오러지, 리잔수, 두칭린, 자오홍주, 양칭
제19기 (2017년 10월~2022년 10월)	왕후닝(제1서기), 덩쉐상, 양샤오두, 천시, 귀성쿤, 황쿤밍, 유취안
제20기 (2022년 10월~현재)	차이치(제1서기), 스타이핑, 리간제, 리수레이, 천원칭, 류진궈, 왕샤오훙

자료: 저자 작성.

(3) 중공중앙 대외연락부

중공중앙 대외연락부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對外聯絡部)의 약칭으로 1951년 설립되었다. 중공중앙 대외연락부는 중국공산당의 대외(外事)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주로 각국 정당 및 정치조직과의 교류업무를 담당한다. 중국이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의 특성상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당 대 당 관계에서 중공중앙 대외연락부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9/} 실제로 중공중앙 대외연락부는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을 맞이하여 ‘중국공산당과 세계정당 지도자회의(中國共產黨與世界政黨領導人峰會)’를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공식 웹사이트(<http://www.cpc100summit.org>)를 개설하는 등 중국공산당의 대외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중공중앙 대외연락부 주요 지도자는 류젠차오(劉建超, 1964년생, 제20기 중앙위원) 부장과 4명의 부부장(궈예저우(郭業洲), 첸홍산(錢洪山), 천저우(陳洲), 리밍상(李明祥))으로 구성되어 있다. 류젠차오는 중국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위원장: 시진핑) 판공실 부주임을 맡은 바 있는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중공중앙 대외연락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곳은 ‘2국(아시아 2국)’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대외연락부 산하에 당대세계연구센터(當代世界研究中心, <http://www.cccws.org.cn>)라는 싱크탱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싱크탱크 협력 연맹’ 이사회의 비서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일대일로 구상과 관련된 중요한 의제들을 다루고 있다.

49/ 신중호,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pp. 66~67.

표 III-4 역대 중공중앙 대외연락부 부장 현황(1951년~현재)

이름	기간	이름	기간
왕자샹 (王稼祥)	1951년 ~1966년 3월	주량(朱良)	1985년 12월~1993년 3월
류닝이 (劉寧一)(代)	1966년 6월~1968년 4월	리수징(李淑錚)	1993년 3월~1997년 8월
경바오 (耿飜)	1971년 1월~1979년 1월	다이빙궈(戴秉國)	1997년 8월~2003년 3월
지펑페이 (姬鵬飛)	1979년 1월~1982년 4월	왕자루이(王家瑞)	2003년 3월~2015년 11월
차오스 (喬石)	1982년 4월~1983년 7월	송타오(宋濤)	2015년 11월~2022년 5월
첸리런 (錢李仁)	1983년 7월~1985년 12월	류젠차오(劉建超)	2022년 5월~현재

자료: 중공중앙대외연락부 홈페이지(<https://www.idcpc.org.cn/>) 참조 저자 작성.

(4) 당 중앙 직속 ‘위원회’

중국의 대외정책과 관련된 당 조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중앙위원회 산하에 설립되어있는 각종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13년 설립된 중앙국가안전위원회(中央國家安全委員會), 기존의 ‘영도소조(領導小組)’에서 2018년 ‘위원회’로 격상된 중앙외사공작위원회(中央外事工作委員會), 2022년 제20차 당 대회를 통해 새롭게 신설된 ‘중앙과학기술위원회(中央科技委員會)’ 등이 있다.

중앙국가안전위원회는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설립이 결정되었고, 2014년 1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시진핑을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주석에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중앙국가안전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산하 기구로서, 총서기(시진핑)가 주석직을 맡고, 국무원 총리와 전인대 상무위

원장 혹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부주석직을 맡는 구조라는 점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외사공작위원회는 기존의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中央外事工作領導小組)를 위원회로 격상한 조직이다. 2018년 3월 제13기 전인대에서 「당과 국가 기구개혁 심화 방안(深化黨和國家機構改革方案)」이 통과되어, 그동안 당 중앙의 정책결정 ‘협조’ 기구였던 중국공산당 산하의 4개 핵심 분야(개혁·외교·사이버안보·경제)의 영도소조를 ‘결정권’이 있는 위원회(委員會)로 격상했다.^{50/} 주목할 만한 점은 중앙외사공작위원회가 중국의 대외정책과 관련된 최종적 기획과 설계 및 조정·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 이외에도, 시진핑 2기부터 해양권익(海洋權益) 보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협조·지도·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점이다.^{51/} 실제로 중앙외사공작위원회의 집행기구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중앙정치국 위원이 담당해 왔으며, 국가안보와 해양권익 등과 같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중앙과학기술위원회(中央科技委員會)는 시진핑 3기 출범과 함께 새롭게 설립된 당 중앙의 정책결정 의사협조기구(黨中央決策議事協調機構)이다. 2023년 3월 제14기 전인대에서 「당과 국가 기구개혁 심화 방안(深化黨和國家機構改革方案)」이 통과되어, 과학기술업무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52/}

50/ “中共中央印發《深化黨和國家機構改革方案》,” 『新華網』, 2018.3.21.,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3/21/c_1122570517.htm> (검색일: 2023.3.20.).

51/ 신중호,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pp. 67~68.

52/ “中共中央、國務院印發《黨和國家機構改革方案》,” 『人民網』, 2023.3.17., <<http://politics.people.com.cn/n1/2023/0317/c1001-32645833.html>> (검색일: 2023.3.20.).

나. 중앙인민정부(政)

(1) 국가주석

중국은 이미 2018년 3월 제13기 전인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직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진핑의 권력 연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바 있다. 그리고 2023년 3월 제14기 전인대에서 시진핑은 다시 국가주석에 선출됨으로써,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최초로 국가주석직 3연임에 성공한 지도자가 되었다. 국가부주석은 ‘상하이방’ 계열의 한정이 선출되었다.

(2) 전인대 상무위원장

전인대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상 최고국가권력기관이며, 상설기관 전인대 상무위원회이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7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명, 비서장, 그리고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되며(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5조), 2023년 3월 제14기 전인대에서는 자오러지를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선출했고, 14명의 부위원장과 비서장(류치(劉奇)) 및 159명의 위원으로 상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전인대는 10개의 전문위원회가 있으며, 대외관계와 관련이 있는 곳은 외사위원회이다. 이번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위원장)에는 장쑤(江蘇)성 당위원회 서기를 역임한 리우친젠(婁勤儉)이 선출되었다.

(3) 국무원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로서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자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85

조). 국무원은 총리와 부총리 약간명, 국무위원 약간명,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등으로 구성된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86조).

표 III-5 중국 중앙인민정부(국무원) 구성 체계

구분	분류
총리	리창(李强)
부총리(4)	딩쉐상(丁薛祥), 허리핑(何立峰), 장궈칭(張國清), 류궈중(劉國中)
국무위원(5)	리상푸(李尚福), 왕샤오홍(王小洪), 우정룽(吳政隆), 천이친(譚頤琴), 친강(秦剛)
비서장	우정룽(吳政隆)(겸직)
26개 부·위원회	외교부, 국방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공안부, 국가안전부, 민정부, 사법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교통운수부, 수리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문화 및 관광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퇴역군인사무부, 응급관리부, 중국인민은행, 중국심계서

자료: 중국 국무원(<https://www.gov.cn/gwyzjg/zuzhi/>) 홈페이지 참조 저자 작성.

2023년 3월 제14기 전인대 결과 국무원 총리에는 리창이 선출되었고, 부총리 4인과 국무위원 5인, 비서장(우정룽(吳政隆)), 그리고 26개 부·위원회 수장 등으로 새로운 중앙인민정부가 구성되었다. 리창 총리는 시진핑계열(之江新軍)의 핵심인물로서, 시진핑이 저장성 당위원회 서기로 재직시 저장성 당위원회 비서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상하이시 당위원회 서기 재직 시 코로나19(COVID-19) 봉쇄 조치로 인해 국내외적인 비판을 받았지만 이와 크게 상관없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진입했다.

부총리 4명(딩쉐상, 허리핑(何立峰), 장궈칭, 류궈중(劉國中))도 모두 시진핑계열이거나 시진핑의 국정철학을 이행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딩쉐상은 1962년생으로서 제20차 당 대회 이후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中央辦公廳) 주임을 맡아 시진핑의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2023년 제14기 전인대를 통해 국무원 부총리도 맡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소위 ‘60後(1960년대 출생자)’의 선두주자로 부상하였다. 허리핑은 1985년 샤먼(廈門)시 재정국 부국장 및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샤먼시 부시장이던 시진핑과 교류를 한 바 있다. 또한, 군기업(中國北方工業公司) 근무 경험이 있는 장귀칭과 산시(陝西)성 당위원회 서기를 역임한 류귀중 역시 각각 과학기술 분야 박사 및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시진핑 3기 지도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무위원 5명 역시 시진핑계열 혹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특히 왕샤오홍(王小洪)은公安 전문가로서, 푸저우(福州)시 당위원회 서기로 재직 당시 푸젠(福建)성 당위원회 서기였던 시진핑의 영도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는 시진핑계열(閩江新軍)이며, 천이친(譚貽琴)의 경우 구이저우(貴州)성 당위원회 서기로 재직 당시 추진한 탈빈곤정책에 대해 시진핑이 여러 차례 방문하여 관심과 지지를 보낸 바 있다.

표 III-6 시진핑 3기 국무원 총리(1)·부총리(4)·국무위원(5) 현황 (2023년 3월 기준)

이름	출생연월	출생지	출신학교 (최종학력)	주요 직위	비고
리창 (李強)	1959.7.	저장(浙江)성 루이안(瑞安)	중앙당교 공상관리 석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신규) 국무원 총리 겸 당조(黨組) 서기	시진핑계열 (之江新軍)
〈부총리(4)〉					
당쉐상 (丁薛祥)	1962.9.	장쑤(江蘇)성 난통(南通)	푸단(復旦)대학 이학(理學) 석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신규) 국무원 부총리 겸 당조(黨組) 부서기	시진핑계열
허리핑 (何立峰)	1955.2.	광둥(廣東)성 상닝(興寧)	샤먼(廈門)대학 경제학 박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신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부총리	시진핑계열

이름	출생연월	출생지	출신학교 (최종학력)	주요 직위	비고
장국칭 (張國清)	1964.8.	허난(河南)성 뤄산(羅山)	칭화(淸華)대학 경제학 박사(고급공정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착국 위원(신구)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부총리	군 기업 근무 경험
류국중 (劉國中)	1962.7.	헤이룽장(黑龍江)성 왕쿠이(望奎)	하이얼빈(哈爾濱)공대 시스템공정 석사	중국공산당 중앙정착국 위원(신구)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부총리	산시(陝西)성 성장(2018.1) 및 당위원회 서기(2020.7)
〈국무위원(5)〉					
리상푸 (李尚福)	1958.2.	장시(江西)성 싱궈(興國)	중칭(重慶)대학 공학 박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원 겸 국무원 당조(黨組) 국방부 부장 겸 육군 상장(上將)	기술관료 경력
왕샤오홍 (王小洪)	1957.7.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	중국인민공안대학 중앙당교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부서기 국무원원 겸 국무원 당조(黨組) 공안부 부장 겸 당위원회 서기	공안 전문가 시진핑계열 (閩江新軍)
우정룽 (吳政隆)	1964.11.	장쑤(江蘇)성 난징(南京)	타이위안(太原) 기계학원 학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원 겸 국무원 비서장 국무원 기관 당조(黨組) 서기	리창 국무원 총리의 장쑤성 당위원회 서기 시절 부관 역임
천이친 (譚貽琴)	1959.12.	구이저우(貴州)성 즈진(織金)	구이저우(貴州) 대학 역사학, 중앙당교 석사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원 겸 국무원 당조(黨組)	구이저우성 당서기 재직 시 탈빈근정책 추진
친강 (秦剛)	1966.3.	허베이(河北)성 화이라이(懷來)	국제관계학원 국제정치전공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원 겸 국무원 당조(黨組) 외교부 부장 겸 외교부 당위원회 부서기	시진핑계열

자료: 中國政府網(www.gov.cn), 中國人大網(npc.gov.cn), 人民日報(http://cpc.people.com.cn), 新華社(http://www.xinhuanet.com) 등 참조 저자 작성

국무원 26개 부·위원회 수장(首長) 구성과 관련하여 2022년 10월 제20기 2중전회에서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이 결정되었고 2023년

3월 제14기 전인대에서 심의·통과되었다. 시진핑 3기 당·국가기구 개혁의 핵심은 중국공산당의 영도 강화와 과학기술과 금융 및 안전 분야에서의 개혁 조치를 견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학기술부 재조직,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國家金融監督管理總局) 설립, 지방금융감독관리체제 개혁 심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國證券監督管理委員會)를 국무원 직속 기구로 조정, 중국인민은행 분행/지점 기구개혁 통합 추진, 국유금융자본관리체제 완비, 금융 관리부문 업무 종사자 통일 규범관리 강화, 국가데이터국(國家數據局) 설립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가 관리, 농업농촌부 직무 책임 최적화, 인구고령화 업무체제 완비, 지적재산권 관리체제 완비, 국가신방국(國家信訪局)을 국무원 직속기구로 조정, 중앙 국가기관 인원 편제 감축 등이 개혁 조치로 제기되었다.^{53/}

이번 국무원 26개 부·위원회 인사에서는 19개 부서의 수장을 새롭게 임명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7개 부서(과학기술부, 재정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국인민은행)의 수장은 유임함으로써 조직 역량 강화 및 업무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한 정책집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54/}

53/ “國務院機構改革方案,” 『中國政府網』, 2023.3.11., <http://www.gov.cn/xinwen/2023-03/11/content_5745977.htm> (검색일: 2023.3.20.).

54/ 다만,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 이후 일부 부처 수장에 대한 교체가 단행되었다. 2023년 7월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8호’를 통과시켜, 친강 외교부장과 이강(易剛) 인민은행장을 해당 직위에서 파면하고,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을 외교부장으로, 판궁성(潘功勝)을 인민은행장으로 임명할 것을 결정했다. “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第八號),” 『新華社』, 2023.7.25., <<https://baijiahao.baidu.com/s?id=1772390094233025582>> (검색일: 2023.7.25.). 또한 2023년 10월 24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리상푸의 국무위원 및 국방부 부장 직위와 친강의 국무위원 직위를 파면했다. 또한 왕즈강 과학기술부 부장의 직위를 파면하고 신이 인허권(陰和俊) 부장을 임명했고, 류쿤 재정부 부장을 파면하고 이 자리에 람푸안(藍佛安)을 새롭게 임명했다. “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第十四號),” 『新華社』, 2023.10.24., <<https://baijiahao.baidu.com/s?id=1780650047140977542&wfr=spider&for=pc>> (검색일: 2023.3.20.).

표 Ⅲ-7 국무원 26개 부·위원회 수장(首長) 현황(2023년 3월 기준)

이름	출생연월	출생지	출신학교 (최종학력)	주요 직위	비고
친강 (秦剛)	1966.3.	허베이(河北)성 화이라이(懷來)	국제관계학원 국제정치전공	외교부 부장	신임 국무위원 겸임 시진핑계열
리상푸 (李尚福)	1958.2.	장시(江西)성 싱궈(興國)	충칭(重慶)대학 공학 박사	국방부 부장	신임 국무위원 겸임 기술관료 경력
정자제 (鄭栅潔)	1961.11.	푸젠(福建)성 장저우(漳州)	사먼(廈門)대학 공상관리 석사(고급공정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신임 시진핑계열 (閩江新軍)
화이진핑 (懷進鵬)	1962.12.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베이징항공우주대학 공학 박사	교육부 부장	신임 기술관료
왕즈강 (王志剛)	1957.10.	안휘(安徽)성 화이위안(懷遠)	칭화(清華)대학 관리학 박사	과학기술부 부장	유임 기술관료
진장룽 (金壯龍)	1964.3.	저장(浙江)성 딩하이(定海)	푸단(復旦)대학 경제학 박사	공업 및 정보화부 부장	신임 기술관료
판웨이 (潘燚)	1960.4.	장쑤(江蘇)성 난징(南京)	화중(華中)사범대학 역사학 박사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	신임
왕샤오홍 (王小洪)	1957.7.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	중국인민공안대학, 중앙당교	공안부 부장	신임 국무위원 겸임 시진핑계열 (閩江新軍)
천이신 (陳一新)	1959.9.	저장(浙江)성 타이순(泰順)	저장성 당교 석사	국가안전부 부장	신임 시진핑계열 (之江新軍)
탕덩제 (唐登傑)	1964.6.	장쑤(江蘇)성 전후(建湖)	통지(同濟)대학 공상관리 석사(고급공정사)	민정부 부장	신임 시진핑계열 (閩江新軍) 군 기업 경력
허룽 (賀榮)	1962.10.	산둥(山東)성 린이(臨沂)	중국정법대학 법학 박사	사법부 부장	신임 시진핑계열
류쿤 (劉昆)	1956.12.	광둥(廣東)성 차오저우(潮州)	사먼(廈門)대학, 광둥성 당교 석사	재정부 부장	유임 광둥 출신 발탁
왕샤오핑 (王曉萍)	1964.3.	후베이(湖北)성 탄펑(團風)	중국정법대학 법학 석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신임

이름	출생연월	출생지	출신학교 (최종학력)	주요 직위	비고
왕광화 (王廣華)	1963.1.	허난(河南)성 싱양(滎陽)	베이징(北京)대학 지리학 학사 및 경제학 석사	자연자원부 부장	신임
황룬추 (黃潤秋)	1963.8.	후난(湖南)성 창사(長沙)	청두(成都)지질학원 공학 박사	생태환경부 부장	신임 비공산당원
니홍 (倪虹)	1962.10.	랴오닝(遼寧)성 안산(鞍山)	하얼빈(哈爾濱) 건축공정학원 고급공상관리 석사(고급공정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부장 국무원 빈곤자원개발영도소조 조원	신임
리샤오펑 (李小鵬)	1959.6.	쓰촨(四川)성	화베이(華北)전력학원 학사(고급공정사)	교통운수부 부장	유임 리펑 전 총리 아들
리궈잉 (李國英)	1963.12.	허난(河南)성 위저우(禹州)	동북사범대학 환경과학 박사	수리부 부장	신임
탕런젠 (唐仁健)	1962.8.	중칭(重慶)시	서남재경대학 경제학 박사	농업농촌부 부장	유임
왕윈타오 (王文濤)	1964.5.	장쑤(江蘇)성 난통(南通)	푸단(復旦)대학 철학 학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상무부 부장	유임
후허핑 (胡和平)	1962.10.	산둥(山東)성 린이(臨沂)	칭화(清華)대학 수리공정사, 동경대학 공학 박사	문화 및 관광부 부장 겸 당조(黨組) 서기	신임 시진핑계열 (清華幫)
마샤오웨이 (馬曉偉)	1959.12.	산시(山西)성 우타이(五台)	중국의과대학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	유임
페이진자 (裴金佳)	1963.8.	푸젠(福建)성 안시(安溪)	중앙당교 경제관리 학사	퇴역군인사무부 부장	신임 시진핑계열 (閩江新軍)
왕샹시 (王祥喜)	1962.8.	후베이(湖北)성 선타오(仙桃)	허난(河南)이공대학 공정 석사(고급공정사)	응급관리부 부장	신임 시진핑계열
이강 (易綱)	1959.3.	베이징(北京)시	미국 일리노이대학 경제학 박사	중앙재경위원회판공실 부주임 중국인민은행 행장	유임
허우카이 (侯凱)	1962.4.	랴오닝(遼寧)성 선양(沈陽)	중앙재경대학 경제학 박사(고급공정사)	심계서 심사장 겸 당조(黨組) 서기	신임

자료: 中國政府網(www.gov.cn), 中國人大網(npc.gov.cn), 人民日報(http://cpc.people.com.cn), 新華社(http://www.xinhuanet.com) 등 참조 저자 작성.

표 Ⅲ-8 역대 중앙군사위원회 구성(1992년~현재)

임기	주석	부주석	위원
2022.10 ~현재	시진핑	장유사(張又俠), 허웨이둥(何衛東)	리상푸(李尚福), 류진리(劉振立), 마오화(苗華), 장성민(張升民)
	2022년 10월 중공 제20차 1중대회 결정		
2017.10. ~2022.10	시진핑	쉬치량, 장유샤	웨이평허, 리취청, 마오화, 장성민
	2017년 10월 중공 제19차 1중대회 결정		
2012.11. ~2017.10.	시진핑	판창룽, 쉬치량	창완취안, 팡평후이, 장양, 자오커스, 장유샤, 우성리, 마사오텐, 웨이평허
	2012년 11월 중공 제18차 1중 대회 결정		
2007.10. ~2012.9.	후진타오	궈보슝, 쉬차이하우, 시진핑(2010.10.18.)	량광례, 천빙더, 리지나이, 라오시룽, 창완취안, 징즈위안, 우성리, 쉬치량
	2007년 10월 중공 제17차 중앙위원회 결정		
2002.11. ~2007.10.	장쩌민(2004년 9월 사임)	후진타오(2004년 9월까지), 궈보슝, 차오강찬	쉬차이하우(2004년 9월까지), 량광례, 리지나이, 라오시룽
	2002년 11월 15일 중공 제16차 1차 중앙위원회 결정		
	후진타오	쉬차이하우	천빙더, 차오칭천, 징즈위안, 장당파(2006.12.14 사망)
	2004년 9월 19일 중공 제16차 4중대회 결정		
1997.9. ~2002.11.	장쩌민	후진타오	궈보슝, 쉬차이하우
		1999년 9월 중공 제15차 4중대회에서 추가	
		-	차오강찬
		1998년 10월 중공 제15차 3중대회에서 추가	
장완넌, 초하오텐			푸취안유, 위융보(만주족), 왕커, 왕루이린
1997년 9월 19일 중공 제15차 1중대회 결정			
1992.10. ~1997.9.	장쩌민	장완넌, 초하오텐	왕커, 왕루이린
		1995년 9월 28일 중공 제14차 5중대회에서 추가	
		류화칭, 장전	위융보, 푸취안유, 초하오텐(1995년 9월까지), 장완넌(1995년 9월까지)
		1992년 10월 19일 중공 제14차 1중대회 결정	

자료: 저자 작성.

다. 군부(軍)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역량을 영도하며, 주석과 부주석 약간명, 그리고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된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93조). 2022년 10월 제20차 당 대회에서는 중공중앙 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2023년 3월 제14기 전인대를 통해서는 국가중앙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시진핑은 당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연임했고, 부주석 2인 중에서 장유샤는 유임되었고 허웨이둥은 신규로 임명되었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은 4명(리상푸, 류전리(劉振立), 마오화, 장성민)으로 구성되었다.

2.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의 특징: ‘시진핑 1인 우위’ 체제 확립^{55/}

가. 시진핑 1인 권력 집중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시진핑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시진핑의 국가주석직 3연임이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등 전임 지도자들은 5년 임기의 국가주석직을 연임한 후에 퇴임했으나, 2018년 3월 제13기 전인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주석직 연임 규정을

55/ 아래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여 작성. 신중호,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과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글로벌 이슈 브리프 Vol. 09, 2023년 3월호), pp. 111~120,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 (검색일: 2023.2.10.); 신중호, “중국 제20차 당대회 이후 대외정책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22년 제11월호, 2022.11.11.), pp. 2~4, <<https://www.sejong.org/web/boad/1/egoread.php?bd=2&itm=&txt=&pg=1&seq=6798>> (검색일: 2023.2.10.).

폐지함으로써 시진핑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작년 10월 개최된 제20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은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차지했고, 올해 3월 제14기 전인대에서는 다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로 등극했다.

나. 시진핑계열로 당·정·군 지도부 구성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의 두 번째 특징은 당·정·군 핵심 지도자 대부분이 ‘시진핑 계열’ 혹은 ‘범시진핑 계열’로 분류되는 측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먼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에서 시진핑을 제외한 6명 모두 시진핑계열로 구성되었다. 당 서열 2위 리창은 2004년 저장성 당위원회 비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시진핑 저장성 당서기를 보좌한 바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선출된 당 서열 3위 자오러지는 시진핑과 같은 산시(陝西)성 출신으로, 시진핑 2기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직을 수행하여 반부패운동을 지휘하면서 시진핑의 측근으로 간주하고 있다. 차이치는 시진핑이 푸젠성과 저장성 당 서기로 재직 당시에 같은 지역에 근무하면서 교류를 해왔고, 당쇄상은 시진핑이 상하이(上海)시 당 서기 재직 시 당위원회 비서장으로 재직한 바 있고 시진핑 2기에는 당 중앙판공청 주임직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 핵심 측근 배치를 통한 정책 효율성 및 연속성 추구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의 또 다른 특징은 당·정·군 주요 지도자들을 자신의 측근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추구하면

서도, 주요 부처의 수장은 유임시킴으로써 정책의 연속성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제20차 당 대회에서 나타난 당 지도부 인선을 보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에서 3명(시진핑, 자오러지, 왕후닝)은 유임되었고, 4명(리창, 차이치, 덩쉐샹, 리시)은 새로운 인물로 충원했다. 또한, 중앙정치국 위원 24명 중에서도 7명만 유임하고 17명은 새롭게 발탁하였다.^{56/} 게다가 올해 3월 제14기 전인대에서 나타난 국가지도자 인선에서도, 국무원 총리(리창)와 부총리(4명) 및 국무원위원(5명)을 모두 새로운 인사로 발탁했고, 국무원 26개 부·위원회 중에서 7개 부처(과학기술부, 재정부, 교통운수부, 농촌농업부, 상무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수장은 유임시키고, 나머지 19개 부처의 수장은 새롭게 임명했다.

라. 전문가 등용을 통한 대미 장기전 대비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의 네 번째 특징으로는 미국과의 기술패권 및 금융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전(持久戰)’ 태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시진핑 2기부터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대비한 ‘장기전’ 태세를 준비하기 시작했으며,^{57/} 작년 제20차 당 대회 「보고(報告)」에서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도전”을 강조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전 태세’를 피력했다. 2023년 3월 양회 기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발전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강조하자 친강(秦剛)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미중 간 “충돌과 대결”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대미 강경 태세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56/ 제20차 당 대회 인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전병곤 외, 『중국 20차 당 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57/ 신중호, “2021년 양회(兩會)를 통해 본 중국의 대미 장기전 태세와 함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1-10, 2021.3.17.), pp. 1~6, <<https://repo.kinu.or.kr/handle/2015.oak/12362>> (검색일: 2023.2.10.).

이러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은 제14기 전인대에서의 지도부 인선 결과 및 당과 국가기구 개혁안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제14기 전인대에서 선출된 새로운 정부(국무원) 지도자 역시 대부분 ‘시진핑계열’로 구성하였다.

또한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위원장)에 장쑤성 당위원회 서기 출신의 러우친젠을 임명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러우친젠은 외교관 경력이 없는 당위원회 서기가 전인대 외사위원장을 맡게 된 최초의 사례이다. 지방정부 수장이었던 정치인 출신을 의회외교의 사령탑에 임명한 것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가들이 의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마. 대외정책에서 당의 주도적 역할 강화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중국공산당이 대외정책을 주도하는 경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3월 양회 기간 중 이뤄진 「당과 국가 기구 개편 방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공산당 직속으로 ‘중앙과학기술위원회(中央科技委員會)’를 설립하여 당 중앙의 정책결정 의사협조기구(黨中央決策議事協調機構)로 삼기로 결정했고, 국가데이터국을 설립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중국이 중국공산당 주도의 과학기술 및 기술자립을 강조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외부(특히 미국)로부터의 위협과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과 기술자립에 대한 강조는 중국공산당 엘리트층원에도 반영되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중국엘리트 연구 전문가인 리청(Cheng Li)의 조사에 따르면 제20차 당 대회를 통해 선출된

중앙위원(후보위원 포함) 376명 중에서 소위 ‘기술관료(techno-crat)’가 약 81명으로 3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8/} 이는 시진핑 1기의 21.5%와 시진핑 2기의 17.6%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치국 위원 24명 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학력(학위) 및 직무를 보유한 사람이 8명으로 약 33.3%를 차지한다.

바. 대만 문제 전문가의 전진 배치

당 지도부 구성에서 통일전선을 강화하고 대만 문제 전문가들이 대거 등장했다는 점은 시진핑 3기 지도부가 양안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왕후닝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류제이(劉結一) 전국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 겸 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 쑹타오(宋濤) 중공중앙 대만공작판공실 주임 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그리고 제19기부터 중앙서기처 서기가 중앙통전부 부장을 겸직한 이래 이번 제20기에도 스타이핑이 중앙통전부 부장직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 역시 시진핑 3기 지도부가 대만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8/} Karen Hao, “China’s Xi Stacks Government With Science and Tech Experts Amid Rivalry With U.S.,” *Wall Street Journal*, Nov 18, 2022, <<https://www.wsj.com/articles/chinas-xi-stacks-government-with-science-and-tech-experts-amid-rivalry-with-u-s-11668772682>> (검색일: 2023.2.15.).

3.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에 대한 평가: 지속과 변화

가. 시진핑 1, 2기와의 ‘지속성’

시진핑 3기 당·정·군 지도부 구성이 기본적으로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전 시진핑 1, 2기 지도부 구성과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먼저, 시진핑 1, 2기와 마찬가지로 시진핑 3기 역시 미리 차기 지도자를 지정하는 소위 ‘격대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곧 시진핑 체제가 최소 5년 이상 10년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대외정책의 ‘지속성’을 전망하게 한다.

다음으로, 시진핑 2기에서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중국공산당의 전면적 영도 강화 현상이 이번 시진핑 3기 지도부에도 그대로 계속되었고 좀 더 강조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2018년에 이어 2023년에도 이루어진 ‘당과 국가기구 개편 방안’에 잘 반영되었다.

또한, 외교부장이 퇴임 후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사례가 이번에도 계속되었다. 즉, 시진핑 2기에 양제츠가 외교담당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진입한 것처럼, 이번 시진핑 3기에도 왕이 전 외교부장이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함으로써 외교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3기의 한반도 정책의 경우 1, 2기와 마찬가지로 시진핑 국가주석을 핵심으로 하여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및 외교부장, 상무부장, 대외연락부장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시진핑 3기에도 여전히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중관계라는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중앙국가안전위원회와 중앙외사공작위원회와 같은 당 조직, 국무원과 외교부 및 대외연락부 산하의 싱크탱크(중국사회과학원,

현대국제문제연구원, 당대세계연구센터 등), 그리고 일부 지방정부 (산둥성, 동북 3성 등)의 역할 등을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의 새로운 ‘변화’

그렇다면, 시진핑 3기 지도부가 전임 1, 2기와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점은 명실상부하게 시진핑 2기에서 더욱 강화되던 ‘시진핑 1인 우위’의 권력 구도가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은 덩샤오핑 이후 10년 주기로 나타났던 최고지도자의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진핑은 국가주석직 3연임에 성공함으로써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1인자의 지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곧 향후 중국의 대내외정책 방향이 시진핑 개인의 철학과 구상에 좀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시진핑 1인 우위’ 체제의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전임 시진핑 1, 2기와의 정책적 연속성에 기반하면서도 새로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시진핑 1기에서는 소위 ‘파벌’을 일정 부분 용인하는 형태로 지도부가 구성되었으나, 시진핑 2기에서는 정치세력 간 균형이나 안배뿐만 아니라 ‘측근’ 인사를 전진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시진핑 3기에서는 당·정·군 지도부의 대부분을 시진핑의 핵심 측근들로 채웠다. 제20차 당 대회 인선을 보면, 그동안 장쩌민에서 후진타오, 그리고 시진핑 1, 2기로 이어지면서 비교적 잘 지켜진 것으로 평가를 받았던 정치세력 혹은 파벌 간의 안배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시진핑의 핵심 측근들로 당·정·군 핵심 지도부를 채웠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에서 시진핑 본인을 제외한 3명(리창, 덩쉐샹, 차이치)은 시진핑과 비슷한 시기에 업무적으

로 교류했던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3명(자오러지, 왕 후닝, 리시) 역시 시진핑이 중앙 정치무대로 발탁했거나 승진을 시켰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범시진핑계열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에서 ‘시진핑 1인 우위’ 구도가 완성되고 시진핑계열로 채워졌다는 점은 대내외적 위협인식 하에서 중국 지도부가 대외정책에서 효율성 추구를 우선시하겠다는 점을 의미한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추세,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중국의 경제·사회문제 등과 같은 현안에 직면한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책 성과를 창출해야만 시진핑의 국가주석 3연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14기 전인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직에 대한 만장일치(2,592명) ‘찬성’ 역시 이러한 중국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진핑 3기 지도부 인선 과정에서 중앙인민정부, 즉 국무원 주요 부처(과학기술부, 재정부, 상무부 등)의 수장을 유임시키고, 당과 국가의 기구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대외정책에서 당의 주도적 지위를 강화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등용했다. 이는 곧 시진핑 1, 2기의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의 방향이 미국과의 기술패권경쟁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위협 인식이 대부분 미국과의 전략경쟁 및 기술패권경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진핑 1, 2기와 대비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시진핑 1인 우위’가 공고화된 상황에서 중국이 이전보다 더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구조화 추세와 결합하면서 다양한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59/} 또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운 사회주

의 ‘당-국가’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는 소위 ‘집단사고’^{60/} 및 ‘약자들의 연합’^{61/}의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에 따른 ‘지속’과 ‘변화’의 특징이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시진핑이 공정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외정책결정 참여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
- 59/ 미중 전략경쟁과 그에 따른 복합리스크 및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신중호 외,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21); 김갑식 외,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22).
- 60/ 소위 위 ‘집단사고’의 오류에 의한 대외정책결정 실패 사례는 미국처럼 의사결정 구조가 개방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존슨 행정부가 베트남전 확전을 결정하고 케네디 행정부가 쿠바 피그만 침공을 지시하는 등의 오판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Irving L. Janis, *Victims of groupthink: A psychological study of foreign-policy decisions and fiascoes*. 하지만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이러한 오판이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마오쩌둥 시기의 ‘대약진운동’은 ‘집단사고’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焦佩, ‘이창신, “중국 대약진운동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집단사고(groupthink)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제2호 (2013, 6), pp. 211~233; 劉玉, “毛澤東晚年探索出現失誤的個人因素探析”, 『黨史博采』, 第9期 (2009), pp. 4~8; 王章維 郭厚旺, “大躍進時期國人社會心態探析”, 『新視野』, 第2期 (2000), pp. 50~52.
- 61/ ‘약자들의 연합’과 관련하여 시진핑 3기 지도부가 이전보다 더 권위주의적일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한 접근일 수 있지만, 마오쩌둥 시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과 함께 향후 중국외교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Mercy A. Kuo, “China’s Political ‘Coalitions of the Weak’ Insights from Victor C. Shih,” *The Diplomat*, 2022.10.10., <<https://thediplomat.com/2022/10/chinas-political-coalitions-of-the-weak/>> (검색일: 2023.8.16.); Victor C. Shih, *Coalitions of the Weak: Elite Politics in China from Mao’s Stratagem to the Rise of Xi*,

IV.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

1.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인식과 정책기조

가.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특징과 대외정책

앞서 III장에서는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구성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중 대외정책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측되는 특징은 크게 △시진핑 계열 전면 배치를 포함한 시진핑 1인 우위 체제의 확립 △정책 연속성을 위한 경제·과학기술 전문가 등용 △대만 문제 전문가 배치 등이다.

우선, 시진핑 1위 우위 체제는 대외정책의 오판과 집단사고의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번째 권력 등극은 단 1표의 기권과 반대가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62/} 중국공산당과 과 정부의 최고지도부 역시 시진핑계열이 장악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과 영향력이 1기나 2기에 비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그의 생각과 정책결정에 반대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과거 집단지도체제의 전통이 점차 쇠락하고, 시진핑 중심의 위원회 정치가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62/ “十四屆全國人大一次會議選舉產生新一屆國家領導人, 『中國政府網』, 2023. 3. 10., <https://www.gov.cn/xinwen/2023-03/10/content_57%E4%B8%AD%E5%9B%BD%E6%94%BF%E5%BA%9C%E7%BD%915910.htm> (검색일: 2023. 9. 18.).

시진핑 체제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국가안전위원회가 외교 및 안보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왕왕 중앙정치국에서 결정을 위한 준비안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위원회가 중앙정치국을 바이패스하는 경우도 잦았다.^{63/} 이 때문에 향후 1인 우위체제가 더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는 중국 주요 정치엘리트(예를 들면 중앙정치국 위원)간 정책토론 문화는 더욱 사라질 것이고, 최고권력자의 명령 수행만 하는 에스맨만이 남을 것을 우려할 수 있다.^{64/}

이러한 엘리트 구조하에서 외교정책 결정은 시진핑 1인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계열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약자들의 연합 결성 상태에서는 결국 시진핑의 말이 곧 국가의 외교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판단이 현명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오히려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정책그룹과의 의견 조율이 필수적인 체제보다 1인 우위 체제는 최종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조율의 시간 낭비가 없고, 반대·저항이라는 기회비용이 적기 때문에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65/}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정책결정의 변환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만일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관계를 호전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반대의 경우이다. 1인의 결정이 현명하지 않다면, 혹은 그 결정이 신중한 숙고와 다양한 변수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이뤄진

63/ Sheena Chestnut Greitens, "Xi's Security Obsession: Why China Is Digging In at Home and Asserting Itself Abroad," *Foreign Affairs*, 2023.7.28.,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xis-security-obsession>> (검색일: 2023.9.18.).

64/ 양갑용,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과 한반도 정책" (통일연구원 정책자문회의 자료, 2023.4.6.).

65/ 김계동 외, 『현대외교정책론』, (서울: 명인문화사, 2017), pp. 34~35.

오판이라면, 이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진핑 1인의 판단에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는 점은 우려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집단사고의 위험성이다. 집단사고는 집단 내 조직원들의 의견 일치를 유도하여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66/} 특히 권위주의 관료체제에서 상부 권력의 영향력이 강하다면, 하부 조직원들은 상부권력의 의견과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강하고, 자기조직의 의견반영 노력을 게으르게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전문성이 높은 관료 조직이 자신의 전문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비전문가인 상부 권력에게 판단을 일임하는 행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국제관계는 경제, 금융, 기술, 사이버 등 매우 복잡다단한 네트워크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문집단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되고, 그 집단마저, 자신들의 판단을 쉽게 포기하는 상황이 온다면, 중국 외교정책 역시 객관성을 담보한 결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느 집단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매우 위험한 정책결정 구조가 지속될 것이다.^{67/}

둘째, 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경제·과학기술 전문가 등용은 그나마 향후 중국 외교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인선 초기에 경제, 기술 부처의 수장을 유임시키고,

66/ Irving L. Janis, *Victims of groupthink: A psychological study of foreign-policy decisions and fiascoes* 전체 참조.

67/ 물론 이에 대한 반론의 여지도 있다. 최근 분석에 의하면 시진핑이 집권 3기에 측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진핑 1인 우위 체제라는 권력의 안정성이 오히려 정책결정 권한의 분산과 하방, 즉 시진핑계열 엘리트의 정책 자율성을 가능케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Vanessa Cai, "Signs of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Delegating More to Hand-picked Deputies at Start of Third Term," *South China Morning Post*, 2023.8.21., <<https://www.scmp.com/news/china/politics/article/3231699/signs-chinese-president-xi-jinping-delegating-more-hand-picked-deputies-start-third-term>> (검색일: 2023.9.18.)를 참조.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는 소위 온중구진(穩重求進, 안정 속 발전)으로 안정적인 경제 운용의 표방이자 기존 개혁개방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강조였다. 서방언론에서는 시진핑 2기에 공동부유가 강조되는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소위 ‘중국경제의 마르크스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68/} 그러나 새 정부는 개혁개방의 기조 유지 및 안정 속 발전을 강조하였다. 정부업무보고에서도 기업가 권익 보호를 수차례 강조하였고, 리창 신임총리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민영경제 활성화 약속 발언이 있었다. 상징적 외자 프로젝트(자유무역시험구 등)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의 공식 추진을 발표하기도 하였다.^{69/} 또한 2023년 6대 외교업무에서 대외개방과 발전을 강조하였고, 3대 국가이익(발전, 안전, 주권)에서 발전과 안전이익을 앞세우면서 대외개방과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70/} 무엇보다 과학기술 전문가의 대거 등용은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는 중국이 향후 기술 경쟁 외교에 주력할 것을 의미하고, 기술 전문성이 있는 관료조직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할 수 있는바, 이 분야에서는 집단사고의 위험성은 다소 줄어들고, 합리적인 대외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대만전문가의 대만업무 전면 배치는 중국의 대만정책의 안정적 관리를 시사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공작영도소조는

68/ Kevin Rudd, “The Return of Red: China Xi Jinping Brings Back Marxism,” *Foreign Affairs*, 2022, 11.9., <<https://www.foreignaffairs.com/china/return-red-china>> (검색일: 2023.9.18.).

69/ “國務院總理李強：中國仍是全球投資高地 堅定不移推進對外開放基本國策,” 『21世紀經濟報道』, 2023.03.13., <<https://www.21jingji.com/article/20230313/herald/7762187bb11872986d6a1ccad494cb87.html>> (검색일: 2023.9.28.).

70/ 中國外交部, “王毅談2023年中國特色大國外交六大任務,” 2022.12.25., <https://www.fmprc.gov.cn/wjzbhd/202212/t20221225_10994818.shtml> (검색일: 2023.9.5.).

왕후닝(정협 주석), 왕이(영도소조 비서장), 쑹타오(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주임) 삼각편대로 구성되었다. 왕후닝은 정협 주석 전 이미 대만업무 처리 경험이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23년 2월 대만 국민당 부주석 샤리옌(夏立言) 방문단 접견 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양안 교류의 정상화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가 있다.⁷¹⁾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및 외교부장은 중앙외사위원회 관공실 주임으로 외교전략 전반을 관장하는 동시에 대만관공실 주임을 경험하였던 전형적 외교통이다. 극단적 전략을 선택하기보다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원칙적이고 유연한 대만 정책 구사가 가능한 인물이다. 쑹타오는 중앙 대외연락부 역임 후 대만관공실 주임이 되었다. 왕후닝과도 업무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대만 국민당 샤리옌 부주석과 회담 때에도 양안교류의 중요성을 계속 언급할 정도로 외교적 해결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물론 대만 정책 역시 시진핑 1인 우위 체제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이고 대만 문제가 미중 갈등의 화약고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시진핑의 공세적 오판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배제 불가를 언급하면서, 동부전구(대만 문제 관할) 사령관 출신의 허웨이둥을 이례적으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초특급 승진시킨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지가 반영되었고, 대만에 대한 작전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는 점에서 대만과의 전쟁 혹은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만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결단이 있다면 안정적 관리를 지향할 냉정한 외교 삼각편대의 기능부전이 올 수도 있겠지만, 대만 문제는

71) “王滬寧會見中國國民黨副主席夏立言一行,” 『人民日報』, 2023.2.11.,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3-02/11/nw.D110000renmrb_20230211_6-01.htm> (검색일:2023.9.28.).

엘리트 개인의 성향 변수보다는 구조적 변수의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허웨이등 역시 대만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오판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추가적으로 강성의 외교라인과 전랑외교의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다. 시진핑 2기에 다수의 중국 외교 엘리트들이 강한 중국을 표방하며, 투사의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이 현상은 소위 전랑외교라는 단어로 요약되었고, ‘늑대전사’의 성향을 가진 외교 엘리트들이 향후 중국 외교를 공세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었다. 특히 시진핑이 애착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친강 전 외교부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친강은 주미대사 시절 미국의 대중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해서 늑대전사의 전형으로 평가되어 온 인물이다. 친강은 외교부장으로 취임하고 중국의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공식회견인 2023년 3월 양회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속도를 조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폭주한다면 아무리 많은 가드레일이 있어도 탈선과 전복을 막을 수 없고, 충돌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한 “늑대가 기습하면 중국의 외교관들은 늑대와 함께 춤을 추면서 국가를 지켜야 한다.”^{72/} 등의 강한 발언을 하였다. 이를 감안할 때, 중국 외교 엘리트의 ‘늑대전사’ 경향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물론 친강 전 외교부장이 의혹이 많은 상태로 조기 하차하였고,^{73/} 늑대전사의 강성 이미지보다는 중재자의 이미지가 강한 노회한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이 다시 외교부장으로 복귀하였지만, 외교부장 1인의 교체가 중국 외교 엘리트들의 강성 이미

72/ “十四屆全國人大一次會議記者會外交部長秦剛答中外記者問,” 『人民網』, 2023.3.7., <<http://lianghui.people.com.cn/2023/GB/452475/452582/index.html>> (검색일: 2023.6.12.).

73/ “중국, 친강 외교부장 면직…후임에 왕이 다시 임명,” 『연합뉴스』, 2023.7.25., <<https://www.yna.co.kr/view/MYH20230726001600641>> (검색일:2023.9.28.).

지를 퇴색시키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전랑외교는 외교엘리트의 성향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미중 경쟁 시대에 중국 외교기조의 공세성 강화 그리고 명령체계의 최전선에서 그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라 이 이미지 또한 쉽게 변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일국의 대외정책 결정은 엘리트 요인보다는 구조 요인이 더 중요하다.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역시 대외적 환경과 같은 구조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래 절에서 분석될 중국공산당의 대외인식과 당면과제에서 나타난 구조 변인이 외교정책 결정에 주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거와 비교해 시진핑 3기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더욱 본격화되는, 즉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중국이 처한 경제적 위기 극복 등과 관련된 국내정치 환경 역시도 대외정책 결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엘리트 요인의 중국 대외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 대외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변수 중에서 엘리트 변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진핑 3기는 기존 지도부나 시진핑 1, 2기와 비교해 중국공산당의 전면 영도를 강화하면서 시진핑 1인 권력의 집중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면서, 결국에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 시진핑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요 외교 이슈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중국의 대외정책을 예상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한 것이다. 동시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주요 외교 이슈에 어떠한 성향과 특색을 가진 엘리트들이 포진하는가에 따라 향후 대외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1인 우위 체제의 확립이라는 특징은 주요 외교정책에 관

여하는 엘리트 중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이 시진핑의 사상이나 생각과는 달리 다소 독립적으로 움직일지 혹은 자율성을 갖게 될지, 아니면 시진핑의 인식, 사상, 노선에 대한 무조건 따르기가 나타날지 예측해 봐야 하는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인식

대외인식은 일국의 대외정책 결정의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국가 혹은 절대권력자가 당시의 대외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그 처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외인식의 변화는 향후 대외정책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분석을 제공한다. 특히 시진핑 3기 지도부는 공산당 영도를 강조하면서 실제 공산당과 시진핑 1인으로서의 권력 집중을 설계하였다. 시진핑 개인의 대외인식은 직접 인터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 이 간접적 분석 방법으로 중국공산당 당 대회에서 시진핑이 직접 발표한 보고문건이 활용될 수 있다. 보고문건의 대외인식 관련 내용은 시진핑 및 주요 엘리트들의 대외인식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주요 외교 엘리트들이 당 대회 이후 공식화 견 등에서 당 보고문건에 근거해 발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2022년 10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中國共產黨第二十次全國代表大會, 이하 20대)의 당보고 문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시진핑 1기와 2기 지도부의 대외인식과 비교하기 위해 18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8대), 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대)의 당 보고문건도 같이 살펴볼 것이다.

18대는 시진핑 1기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직전이기에 때문에 전임 후

진타오 지도부 시기 대외인식과의 경로의존성이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18대 보고에서는 현재의 세계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과정에 있으나 시대의 주제는 여전히 평화와 발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계의 다극화와 경제 글로벌화의 가속화, 문화 다양성, 정보화의 지속 강화, 과학기술 혁명과 글로벌 협력의 확대 발전 중이며, 신흥시장국가와 개발도상국의 국력 증강 중이라고 평가하였다.^{74/} 즉, 시대 주제는 평화와 발전이며, 신흥시장국가와 개발도상국의 종합적인 실력이 증강되면서 국제역량의 균형에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국제정세의 전체적 안정에 중요한 시기이며, 중국의 발전에 대체로 유리한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다. 당시 중국은 주요 위협요인으로는 국제금융위기, 글로벌 발전의 불균형, 패권주의(霸權主義), 강권주의(強權主義) 신간섭주의(新干涉主義) 등을 우려하고, 이에 더해 지역분쟁, 식량안보, 에너지·자원 안보, 사이버·네트워크 안보 등 비전통안보 이슈를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19대는 시진핑 지도부의 색채가 점차 강하게 반영되었다. 특히 ‘중국몽’ 실현을 위한 일대일로 등 중국의 다양한 대외정책 실험들이 본격 가동되는 상황이 대외인식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대에서는 지난 5년을 세계 경제의 침체, 빈번한 지역분쟁, 전 세계적 문제가 강화된, 그래서 당과 국가발전에 있어 지극히 평범하지 않은 기간이었다고 평가하였다.^{75/} 이는 시진핑 2기 지도부가 향후 중화민족의 대부흥이라는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 쉽지 않은 외부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인식의 반영이었다. 18대까지 지속 언급된

74/ “堅定不移沿著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 爲全面建成小康社會而奮鬥,” 『人民網』, 2012.11.9., <<http://cpc.people.com.cn/n/2012/1109/c349998-19530612.html>> (검색일:2023.9.28.).

75/ “習近平: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 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 『中國政府網』, 2017.10.27., <<http://cpc.people.com.cn/19th/n1/2017/1027/c414395-29613458.html>> (검색일:2023.9.28.).

패권주의, 강권정치, 신간섭주의 비판 내용은 빠지고, 이를 대신해 신형국제관계 원칙에 입각한 세계운명공동체 구축이 강조되었다. 과거의 단순한 기준 질서 비판과 비교해, 중국의 부상에 걸맞은 세계 질서에 대한 공헌 그리고 새로운 중국적 구상의 본격화를 강조하는 모양새였다. 이에 반해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 요인이 많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였다.

20대는 시진핑 1, 2기를 거쳐 시진핑 3기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맞이한 당 대회라는 점에서 시진핑의 대외인식이 가장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차 당 대회 보고에서 나타난 중국의 대외인식은 중국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다. 현재의 세계를 세계, 시대, 역사 분야에서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대변혁의 시기로 진단하였다. 강압, 속임수, 영합게임의 패권주의적 행태 심화 및 평화, 개발, 안보, 거버넌스 분야의 적자(赤字) 문제 심화로 인류사회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전례 없는 도전 앞에서 중국은 중국적 길을 통한 극복을 강조하였다.^{76/} 즉, 대변혁, 도전의 시기에서 중국은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적 담론 혹은 세계관인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이 중요하며, 이는 전 세계의 미래이고 중국은 평화롭고 안전하고, 공동번영 및 상호포용하는 세계 건설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제안한 글로벌 발전구상(GDI), 글로벌 안보구상(GSI)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주의, 자유라는 인류공동의 가치를 증진하고, 다양한 문명에 대한 존중과 상호이해를 통한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처할 시기라고 인식하였다.

역대 당 대회 보고에 나타난 중국 지도부의 대외인식을 간단히 비

76/ “習近平：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 爲全面建設社會主義現代化國家而團結奮鬥，”『中國政府網』，2022.10.25.，〈https://www.gov.cn/xinwen/2022-10/25/content_5721685.htm〉 (검색일:2023.9.28.).

교하면 다음과 같다. 시진핑 정권이 공식 출범하기 직전인 18대에는 당시 국제정세를 중국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매우 유리하다고 진단하였고, 시진핑 1기의 경험이 반영된 19대까지도 평화와 발전이 시대적 주제라고 강조하면서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시진핑 1, 2기의 경험이 반영된 20대에는 국제정세를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며, 불확실한 대변화의 시대로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중국 외교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미국 및 서구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해지는 특징을 보였다. 18, 19대 모두 미국 및 서구의 강권, 패권 정치를 주요 위협요인으로 특정하였지만, 20대에는 패권주의 행태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이를 중국의 매우 강한 도전요인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과거와 비교해 중국적 색채가 강한 보다 적극적인 외교를 주문하였다. 18대까지만 해도 중국적 담론 및 질서 혹은 세계관을 드러내기보다는 이상적인 국제질서에 대한 희망을 주로 표현하였고, 반면에 20대는 중국적 색채가 강한 외교담론을 포함한 국제질서에 대한 희망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시진핑 3기 정부가 공식 출범한 2023년 양회에서 20차 당 대회의 대외인식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양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그리고 리창 신임 총리와 친강 외교부장의 기자회견 내용 등에서 나타난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인식은 시진핑 3기 중국의 대외정책의 향방을 예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들의 발언 내용 역시 당 대회의 대외인식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 우선, 18대에서 강조된 평화와 발전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인식보다는 현재 국제정세를 그간 100년에 없었던 대변혁의 시기로 인식하는 흐름으로 확실하게 전환되었다. 이러한 인식에는 지난 3년간에 걸친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복잡한 국제정세 변화 배경이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강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여러 차례 강조되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2년 3월 6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기업가 그룹 토의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 지목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억제, 포위, 압박을 통해 중국의 발전에

표 IV-1 역대 당 대회 보고에 나타난 국제정세 인식과 이상적 국제질서관

구분	18대(2012년)	19대(2017년)	20대(2022년)
국제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다극화, 경제 글로벌화 심화 발전 등 • 신흥시장국가와 개발도상국의 능력 증강, 국제역량 구조를 세계 평화 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다극화, 경제 글로벌화 발전 등의 상호연결과 의존의 심화 • 국제체계와 질서의 변화 가속화, 국제역량의 균형화, 평화 발전이 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대미문의 대변혁 시기, 세계 시대 역사의 전례 없는 변화 •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은 여전히 중요
국제 질서 위협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금융위기 영향 심각, 세계 경제 성장 불안정·불확정 요인 증가, 세계 경제발전 불균형 심화 • 패권정치, 강권정치, 신간섭주의 상승, 국부적 동란 • 식량안보, 에너지·자원안보, 네트워크안보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정·불확정 요인 증가, 세계 경제발전의 동력 부족, 빈부 격차, 지역 문제, 테러, 사이버안보, 전염병, 기후변화 등 비전통안보 위협 만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압, 속임수, 영합 게임의 패권주의적 행태 심화 • 평화, 개발, 안보, 거버넌스 분야의 적자문제 심화로 인류사회는 전례 없는 도전 직면
이상적 국제 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관계의 평등, 상호신뢰·포용, 상호 귀감·협력 상생의 정신 강화, 국제 공평·정의 공동 수호 • 국제관계 민주화, 주권존중, 안전공동 향유, 세계 평화안정 수호 • 포용, 상호 귀감은 세계 문명 및 발전방식의 다양성 존중, 세계 각국 국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사회제도와 발전방식에 대한 권리 수호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인민과 협력하여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평화롭고 안전하고, 공동번영, 상호포용하는 세계 건설 • 상호존중·평등, 냉전 사유와 강권정치 반대, 비동맹의 우호적 관계 지향,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일체의 테러리즘 반대, 자유무역주의 통한 경제 세계화 추동, 문명 다양성 존중과 공존 추구, 친환경 및 기후변화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은 전 세계의 미래, 평화안정, 공동번영, 상호포용하는 세계 건설 지향 • 글로벌 발전구상, 글로벌 안보구상을 국제사회와 협력 이행 •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주의, 자유 등 인류 공동 가치 증진, 문명의 다양성 존중, 상호이해 통한 글로벌 도전 공동 대처

자료: “胡錦濤在中國共產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習近平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習近平在中國共產黨第二十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中國政府網』, 〈<https://www.gov.cn>〉에서 저자 정리.

전례 없는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하였다.⁷⁷⁾ 중국은 특히 미국 문제와 관련해서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고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판을 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과거와 달리 시진핑이 직접 미국을 꼭 집어서 발언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위협인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반영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외교의 위기상황과 도전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중국의 길 혹은 중국적 해법이 더욱 구체화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발전될 것이라는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이 전 세계의 미래라는 것과 중국의 구체적 외교담론인 글로벌 안보구상과 글로벌 발전구상이 이상적 국제질서의 수단으로 강조되었다. 이는 미국과 서구가 주도해온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될 수도 있으며, 중국 외교의 공세성 강화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당면과제

미국의 대중 견제와 대만 문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한 전제로서 현재 중국의 당면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국의 대중 견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일 것이다. 사실 미국의 대중 견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가동되었고,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전쟁 정책 등을 거치면서 확대되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중 견제 기조를 유지했고, 과거 정부와 비교해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77) “習近平看望參加政協會議的民建工商聯界委員,” 『新華網』, 2023.3.7., <http://www.news.cn/politics/leaders/2023-03/06/c_1129416864.htm> (검색일: 2023.9.28.).

포괄적 견제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의 약속전략은 미국이 국내에서 힘의 기반에 투자하는 동시에 해외의 동맹, 파트너와 접근법을 일치시키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5월 대중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가장 심각한 도전이며, 중국의 원칙 훼손에 맞서 전략 환경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78/} 같은 해 10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최대의 위협 및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면서 대중 견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79/}

안보적으로 미국은 기존 동맹체제를 활용하여 대중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나토(NATO)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새 ‘전략 개념’을 승인토록 하였고,^{80/}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 소다자협력을 확대하면서 초음속 미사일 협력,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 이전 등과 같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기술 협력을 증강 중이다. 동시에 한-미, 미-일, 미-필, 미-호 등 기존 동맹국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중국과 관계가 좋은 일부 아세안 국가들에 대

78/ U.S. Department of State, “Integrated Country Strategy (ICS) – China”, May 3, 2022,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23/03/ICS_EAP_China_02FEB2023_PUBLIC.pdf> (검색일: 2023.9.5.).

79/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ctober 12, 20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검색일: 2023.6.12.); Department of Commerce, “Commerce Implements New Export Controls on Advanced Computing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ems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October 7, 2022,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about-bis/newsroom/press-releases/3158-2022-10-07-bis-press-release-advanced-computing-and-semiconductor-manufacturing-controls-final/file>> (검색일: 2023.6.12.).

80/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at the NATO Summit in Madrid, “NATO 2022 Strategic Concept,” 29 June 2022, <https://www.nato.int/nato_static_fl2014/assets/pdf/2022/6/pdf/290622-strategic-concept.pdf> (검색일: 2023.9.12.).

한 구인전략까지 진행 중이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비시장 행태 및 무역의 불공정 관행에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제도화 등 소위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첨단기술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도 이어졌다. 미국은 2022년 8월 국내 반도체법(CHIPS Act)을 통과시킨 이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연이어 시행하였고, 반도체 제작 기술 노하우가 풍부한 네덜란드, 일본 등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반도체 기기 규제를 강화하였다.^{81/} 또한 틱톡(TikTok)과 같은 중국의 IT 기업에 대한 규제, 반도체 동맹(Fab4(Chip4)), G7을 통한 공급망 안정 협의 등이 진행되었다.

미국의 대중 견제의 또 다른 형태는 대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중 갈등의 큰 화약고는 대만 문제였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국가적 사명으로 여겨왔고,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대만에 대한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수행 해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만 국내정치 역시 미중관계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미중 간 경쟁이 불거질 경우, 대만 문제는 항상 미중관계의 제1의 외교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다. 특히 독립성향이 강한 대만 민진당이 집권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 확대는 대만에게 중국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대할 호기가 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확대하면서 기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우호적 기조를 포기하였다. 중국을 불쾌하게 하는 여러 차례의 미국과 대만 사이에 이벤트들이 있었으나, 가장 결정적인

81/ “네덜란드 일본도 중국에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동참,” 『한겨레』, 2023.1.29.,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77338.html> (검색일:2023.9.28.)

사건은 2022년 8월에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이었다.^{82/} 대만 해협에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그 파장이 매우 컸다. 이후 미국은 계속해서 대만 문제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미 의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만정책법안을 상정하고,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이 증대되었고, 미 해군의 대만해협 진출이 빈번해졌다. 그러나 정치·안보적 갈등의 이면에는 미국의 대만 반도체기술 구인전략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대만과의 정치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를 미국 쪽으로 확실하게 견인할 수 있었고, 대만과의 무역 이니셔티브 협정 체결 등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항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보호주의 산업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이전 규제 정책 등을 볼 때, 반도체 외에 바이오 테크, 제조업, 금융업 등 전략 분야에 대한 강경조치 확대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미국의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 조치를 언제까지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동맹, 프렌드 쇼어링을 통한 대중 견제를 지속할 것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83/}

82/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펠로시 대만 방문…美中 셈법은,” 『연합뉴스』, 2022.8.2.,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2004351071?section=search>> (검색일:2023.9.28.).

83/ 당연히 미국의 대중국 정책기조는 경쟁 위주로 진행될 것이나, 최근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팅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미중 간 고위급 소통이 이루어지는 등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아래 대외정책 전망 관련 분석 참조)

경제회복과 체제안정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 외부위협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의 대중 견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지가 대외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요소는 국내 요인이다. 외부의 압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소신 있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 아니면 외부압박에 양보와 타협으로 일관할지는 국가능력, 즉 국내 환경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야심 차게 제시한 중국의 꿈을 본격화하기에는 많은 국내적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현재 중국이 직면한 경제·사회 분야의 위기 혹은 현실은 경제성장 둔화, 부동산 위험, 인구감소, 코로나19 기간 대두된 민심 이반 등이 라고 할 수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현실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곧 쇠락할 것이라는 소위 ‘피크차이나(Peak China)’를 제기하기도 한다.^{84/} 시진핑 3기 지도부가 출범한 2023년에도 비구이위안(碧桂園) 기업 사태 등 부동산 리스크가 전 세계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중국의 내수 경기 부양의 성과가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중이다.^{85/}

시진핑 정부는 두 개의 100년 중 한 개의 백 년 목표인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이미 달성하였고, 두 번째 백 년 목표인 중국식 사회주의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시작점이 사실상 시진핑 3기의 출범과 같다.

84/ Michael Berkley, “The end of China’s Rise,” *Foreign affairs*, 2021,10,1.,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1-10-01/end-chinas-rise>> (검색일: 2023.9.5); Joseph S. Nye, “Peak China?” *Project Syndicate*, 2023,1,3.,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peak-china-debate-calls-for-careful-assessment-by-joseph-s-nye-2023-01>> (검색일: 2023.9.5).

85/ “中 부동산 위기 금융권 불통에 ‘중국판 리먼사태’ 우려 확산,” 『연합뉴스』, 2023,8,19.,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9002800072>> (검색일: 2023.9.5.).

따라서 중국은 체제 안전을 확보하고, 현대화 강국 건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자체적으로 경제성장력의 한계를 노정 해왔고, ‘중국 성장 피크론’ 혹은 ‘중국 경제 쇠퇴론’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견제 전략은 중국의 향후 지속적 인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서 첨단기술의 자립·자강 및 민생복지 증진, 생태환경 개선, 그리고 공동부유의 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기술의 자립·자강은 미국 등 첨단기술 보유국들의 견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인구 대국의 복지증진과 공동부유의 달성은 경제성장의 뒷받침 없이는 시도조차 힘든 목표이다.

한편 중국 경제의 녹록하지 않은 상황은 결국 중국공산당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코로나19 통제 상황이 길어지자 중국 전역에서 각종 시위 등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도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민심이반 현상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국 시진핑 3연임의 시대적 명분을 퇴색시킬 것이고, 현 통치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인지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체제 안정성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안전(安全) 개념은 대외안보보다는 인민안전, 정치안전, 경제안전 등 체제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다.^{86/} 2023년 양회에서도 식량안보, 경제안보를 강조하면서 체제 안전 확보를 위한 국무원 기구 개편이 진행되었다. 전인대 폐막 연설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발전과 안전을 반드시 잘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안전은 발전의 기초이며 안정은 번영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87/}

86/ Sheena Chestnut Greitens, “Xi Jinping’s Quest for Order: Security at Home, Influence Abroad,” *Foreign Affairs*, 2022.10.3., <<https://www.foreignaffairs.com/china/xi-jinping-quest-order>> (검색일: 2023.9.5.).

87/ “十四屆全國人大一次會議在京閉幕 習近平發表重要講話,” 『新華網』, 2023.3.13., <http://www.news.cn/2023-03/13/c_1129430109.htm> (검색일: 2023.6.12.).

라.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 기초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 기초는 20차 당 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된 대외정책 방향에 이미 잘 제시되어 있다. 대외정책 기본원칙은 △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한 우호협력과 신형국제관계 추동, △ 평등, 개발, 협력의 세계 우호 관계 심화 및 각국 간의 이익 교집합 확대이다. 전통적으로 현 국제질서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18대와 19대에 비해, ‘평등, 개발 협력의 세계 우호 관계 심화’를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적극성을 보일 것임을 알 수 있다.

대외정책의 목표 및 원칙은 △ 세계평화와 공동발전의 외교정책 견지와 인류운명공동체 추동, △ 각국 주권과 영토, 평등성 존중, △ 각국의 발전모델과 제도 존중, △ 패권주의 강권정치 반대, △ 냉전 사유, 내정간섭, 이중잣대 반대 등이다. 기존 보고문건 내용과 비슷한 레토릭들이 제시되었으며, 중국의 전통적 외교원칙인 세계평화, 국가 간 다양성과 평등성 존중, 내정간섭과 패권 반대, 냉전적 사고를 반대하고 있다. 과거와 차별되는 것은 인류운명공동체 추동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인류운명공동체는 시진핑 1기부터 제시된 개념이기는 하지만, 대외정책 목표의 전면에 내세운 것은 중국적 세계관, 중국이 희망하는 이상적 국제질서를 위해 중국외교의 적극성을 보여주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중국적 질서 구상, 소위 글로벌 발전구상, 글로벌 안보구상, 글로벌 문명구상(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 GCI)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대외경제정책의 목표 및 원칙은 △ 대외개방 견지 및 상호이익과 상생의 개방전략, △ 개방형 세계 건설 촉진, △ 경제 세계화의 방향성

지지, 자유무역주의 및 지역·다자협력 등 추동, △ 보호주의, 디커플링, 일방제재 반대, △ 남북차이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투자 및 개발도상국 발전 지원 등이다. 과거보다 자유무역 강조, 보호주의 및 디커플링 반대 등 다자주의 질서에 대한 수호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남북차이 해소를 위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및 지원을 확대할 것을 천명한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정책이 예상된다.

큰 틀에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 방향성은 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정책은 국내외적 당면과제를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시진핑 3기 지도부가 선택할 보다 구체적인 대외전략은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썬기전략(wedge strategy)이다.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의 심화는 기존의 동맹체제 강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 공유 및 기존 동맹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안보적으로 군사동맹 강화, 경제적으로 프렌드 쇼어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국 간 연대에 대해 갈라치기를 해야 하는데, 중국의 자산과 매력을 활용해 약한 동맹 고리 끊기 및 구인책 등을 포함한 썬기전략이 활용될 것이다. 최근 두드러진 행보로는 중국의 EU 외교라고 할 수 있다. NATO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EU 간 안보협력 및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공유를 통한 가치동맹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EU의 다수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국은 EU 내 국가들과 경제협력 공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외교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중국 중심 블록 확대이다. 미국 중심의 블록화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도 다양한 중국 중심의 협의체를 확대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이 많은 지역인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

미 지역에서 중국은 막대한 경제 투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협의체를 주도해 온 경험이 있다. 미국의 IPEF 구상에 대한 대응으로는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어떻게 활용해갈지가 주목된다. 미국의 안보·가치 동맹 강화 및 G7 활용에 대한 대응으로,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확대, 브릭스(BRICS) 확대, G20 확대 등 개발도상국 혹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의체를 대폭 확대하는 행보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일대일로 연선 국들과의 진일보한 협의체 및 구상들을 전개할 것이다.

세 번째는 다자주의 질서 수호자 역할의 확대이다. 중국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디커플링 및 프렌드 쇼어링 전략이 기존 다자주의 질서의 원칙과 규범을 위배하는 일방주의라고 비판한다. 대신 중국이 세계화와 다자주의 질서를 적극적으로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해왔다. 특히 중국은 코로나19 당시 미국 및 선진국들의 백신 이기주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개발도상국 및 저발전국들과 함께 현 국제제도의 불평등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은 계속해서 국가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자주의 질서의 수호자임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서구 중심의 기존 질서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동시에 비서구 그룹 국가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경제안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전략이다.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 경제정책의 목표 및 원칙에서 대외개방 견지, 상호이익과 상생의 개방전략을 제1선에 강조했다. 소위 시진핑 2기 공동부유 강조로 인한 중국 경제의 마르크스화 현상에 대한 외부세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 개방정책의 유지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

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안보 목표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라기보다는 ‘경쟁에서 살아남기’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표명할 것이고, 세계 1위의 제조업 프리미엄으로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에게 구인전략을 지속할 것이다. 반도체와 로봇 분야에서 과학기술 자력갱생을 계속 추구할 것이기는 하지만, 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구조라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바, 중국은 자국의 시장과위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 추진하며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군사안보 차원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절대 양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인바, 주권문제에 대한 강경 기조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중국공산당 당 대회 보고에서도 19대에 비해 20대가 이 문제에 있어 매우 강경한 기조를 보여주었다. 심지어 무력 통일에 대한 가능성까지 해석 가능한 문구가 등장하였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만 관련 중국의 대외정책은 아래 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일단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만 전략은 대체로 20대의 「보고」에서 나타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한 필연적 요소로 간주하고,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입장을 분명하게 명시 했다는 점에서 대만의 독립 시도와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에 대한 강경 기조를 엿볼 수 있다. (<표 IV-2> 참조) 물론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 2024년 대만의 대선 결과에 따른 정권 변화의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다면 큰 틀에서 강경 기조 속에서 관리 기조가 예상된다.

표 IV-2 역대 당 대회 보고에 나타난 통일 관련 입장

구분	19대	20대
통일의 의미	중화민족의 근본이익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한 필연적 요소
통일의 장애 요인	대만독립분자의 분열행위	외부세력의 간섭과 극소수 대만 독립분자
무력사용 입장	불분명	무력사용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절대 하지 않겠다.

자료: “習近平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習近平在中國共產黨第二十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中國政府網』, <<https://www.gov.cn>>에서 저자 정리

표 IV-3 역대 당 대회 보고에 나타난 대외정책목표/원칙

구분	18대	19대	20대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한 각국과 우호협력의 전면적 발전 입장 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한 각국과 우호협력과 상호존중, 공평정의 상호원원의 신형국제관계 추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한 각국과 우호협력 하여 신형국제관계 추동 • 평등, 개발, 협력의 세계 우호관계 심화, 각국 간 이익 교집합 확대
대외정책 목표 및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발전의 길 시종 견지 • 독립 자주 평화외교정책 견지 • 시비곡직(是非曲直)에 기초한 정책 결정 •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 • 평화적 방법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 무력 위협·합법정권 전복·테러리즘 반대 • 다양한 형식의 패권주의 및 강권정치 반대, 중국 패권 불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자주의 평화외교정책 견지 • 각국의 자주적 발전체제·모델 존중 • 국제 공평정의 추구, 내정 간섭 반대, 타국의 이익을 희생해서 자국 발전 반대, 중국이 자국 이익의 피해가 되는 쓴 열매를 삼킬 것 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 것, 중국 국방정책은 방어적, 중국 패권 불추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평화와 공동발전의 외교정책 견지와 인류운명 공동체 추동 • 각국 주권과 영토, 평등성 존중 • 각국의 발전모델과 제도 존중, • 패권주의 강권정치 반대 • 냉전사유, 내정간섭, 이중 잣대 반대
대외경제 정책목표 및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혜·상생의 개방전략 유지, 세계 경제 지원, 균형 발전추진 • 남북격차 축소 노력, 개도국의 자주적 발전능력 강화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개방 견지, 일대일로 국제협력 적극 추진, 다양한 분야 소통 통한 새로운 국제협력 플랫폼 건설 • 대외원조 확대를 통한 남북격차 축소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개방 견지, 상호이익과 상생의 개방전략 • 기회 제공 위한 개방형 세계 건설 촉진 • 경제 세계화의 방향성 지지, 자유무역주의 및 지역

구분	18대	19대	2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주요 경제체와 함께 거시경제정책 협조 강화 • 협상 통한 경제무역 마찰 해소 • 권리와 의무의 균형추구,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에 적극 참여 • 무역 및 투자 자유의 편리성 제고 • 보호주의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적 무역체제, 자유무역지대 건설, 개방형 세계 경제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협력 등 추동 • 보호주의, 디커플링, 일방 제재 반대 • 남북차이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투자 및 개발도상국 발전 지원

자료: “胡錦濤在中國共產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習近平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習近平在中國共產黨第二十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中國政府網』, <<https://www.gov.cn>>에서 저자 정리

2.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 전망

본 절은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전망이다. 위에서 제시한 전반적인 대외정책 기조에 반해, 주요 대상별 구분을 통해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전망을 제공하고자 한다. 중국의 대상별 외교의 전통적 구분 방식에 따라 강대국, 주변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국제·다자 외교의 순으로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한 2023년 초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행보들을 분석하면서 향후 전망을 제시할 것이다.

가. 강대국 외교: 미국의 압박 대응 및 관리^{88/}

시진핑 3기 지도부가 제시한 강대국 외교 기조는 △ 선진국과의 협조와 건전한 상호작용 촉진, △ 대국관계체계의 평화공존, 안정적, 균형발전 건설 등이다. 19대에 비해 레토릭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19대에서는 단순하게 선진국과의 협력 확대를 제시한 반면, 20대에서는 구체적으로 관계의 건전한 상호작용 촉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점차 서구 선진국들이 편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즉, 중국이 강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 단지 협력과 협조를 기대하기보다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상호작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국에는 중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이러한 적극성은 특히 중국의 대미정책이 향후 공세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만든다. 이는 시진핑 3기가 본격화된 직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대미 강경 투쟁을 시사하는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20차 당 대회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겨냥해 “기꺼이 싸우겠다(敢於鬥爭)”는 표현을 사용했으며,^{89/} 2023년 양회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들이 우리(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봉쇄·포위·탄압을 시행해 우리 경제에 전례 없이 심각한 도전을 안겨줬다”라고 이전 관례와 다르게 미국을 꼭 집어서 비판한 것이다.^{90/} 달리 말하면, 미국의 공세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의

88/ 중국의 대상별 외교 분류에서 강대국 외교에는 당연히 미국 외 선진국들과의 관계도 포함된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대국 외교의 주요 대상은 미국인바, 여기서는 중국의 대미정책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다만 문제가 미중관계의 핵심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편의상 강대국 외교의 분류 속에서 중국의 대대만 정책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였다.

89/ “跟著總書記學習二十大報告 | 務必敢於鬥爭 善於鬥爭,” 『新華網』, 2022.11.24., <http://www.news.cn/politics/2022-11/24/c_1129156319.htm> (검색일: 2023.9.5.).

90/ “習近平看望參加政協會議的民建工商聯界委員,” 『新華網』, 2023.3.7., <http://www.news.cn/politics/2023-03/07/c_1129156319.htm> (검색일: 2023.9.5.).

지를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밝힌 것이다.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강경하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2023년 3월 친강 외교부장은 양회 기자회견에서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 중의 핵심이며, 미중관계의 정치적 기초 중의 기초라고 하면서, 미중관계에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되는 레드라인임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대만카드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돌아가 대만독립에 대해 명확히 반대할 것을 요구하였다.^{91/} 5월 미중 고위급 회동에서도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은 미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대만 문제는 넘어서는 안 될 첫 번째 레드라인임을 강조하였다.^{92/} 같은 달 G7 회의에서 미국 주도로 대만해협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자, 중국 외교부는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玩火者, 必自焚)”이라는 격한 표현으로 경고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6월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대만 문제 언급에 대해 중국 국방부장은 “언제든 싸울 수 있다”라는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 외교 엘리트 그룹의 전랑외교로 일컫는 늑대 전사 경향은 추후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대응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강한 레토릭과는 달리 중국이 정책 이행과정에서 미국과 직접적 충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더

www.news.cn/politics/leaders/2023-03/06/c_1129416864.htm (검색일: 2023. 9. 5.).

91/ “十四屆全國人大一次會議記者會外交部長秦剛答中外記者問,” 『人民網』, 2023. 3. 7., <<http://lianghui.people.com.cn/2023/GB/452475/452582/index.html>> (검색일: 2023. 6. 12.).

92/ “Anonymous official reveals details of Wang Yi’s 10-hour-long meeting with Sullivan”, *Global Times*, May 12, 2023, <https://www.globaltimes.cn/page/202305/1290618.shtml> (검색일: 2023. 9. 12.).

설득력이 있다. 중국의 종합국력이 아직은 미국과 차이가 크고,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갈등을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협력의 전환점과 공간을 만드는 것이 현재 중국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 전후 보여 준 대미 유화책에도 잘 나타난다. 2023년 초부터 중국은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성을 보였다. 1월 중국의 경제 수장인 류허 부총리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을 만났고,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문제 특사에 대한 접근이 있었다. 2월에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이 추진되었고, 친강 신임 외교부장이 춘절(설) 연휴에 미국 프로농구(NBA) 경기장 스크린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이벤트도 진행하였다. 특히 약 3년 반 만에 마블의 슈퍼 히어로 영화 등 미국 영화가 중국에서 본격 상영되기도 하였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은 3연임 확정 후 공식적인 첫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절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미국 패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93/}

물론 중국의 유화책이 초기에는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대중 공세가 계속되었고, 특히 미 의회를 중심으로 친대만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반도체기술 관련 제재 및 투자제한 등이 본격 시행되었다. 특히 2월에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이 연기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중국의 대러 무기 제공설(2월), 쿠바 내 중국 도청기지 설치설(6월) 등이 제기되었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행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독재자로 언급한 발언(6월)까지 알려지면서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93/ “習近平：攜手同行現代化之路—在中國共產黨與世界政黨高層對話會上的主旨講話,” 『中國政府網』, 2023.03.15.,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23/content_5748638.htm> (검색일: 2023.9.5.).

그러나 미국 역시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2023년 대표적인 사건으로 정찰풍선 갈등을 마무리 짓고, 블링컨 국무장관 방중(6월)이 재성사되었으며, 미국의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7월과 8월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제고되었다. 특히 미국의 경제수장들이 미중 간에 디커플링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미중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은 중국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중국 역시 미국의 견제에 맞대응을 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한 맞불로 5월에 중국은 미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진행하였다.^{94/} 이어서 8월에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등 희귀자원을 무기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95/} 미국 내 기업들에 대한 공략도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정찰풍선 사태로 미중 정치관계가 계속 악화한 시점에도 중국은 미국 기업인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냈고, 중국의 주요 경제 엘리트들이 직접 나서 면담을 추진하였다. 6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방중 이벤트에서는 중국의 부총리를 비롯한 주요 엘리트들이 총출동해서 특급환대를 했으며, 같은 달 빌 게이츠의 중국 방문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면담에 나서기도 하였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서구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의 대외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96/}

94/ “중국, 마이크론 제재는 첫 반격…미중 반도체 전쟁 향방은,” 『연합뉴스』, 2023.5.23.,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3102900009>> (검색일: 2023.9.5.).

95/ “중국, 반도체 재료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한다,” 『연합뉴스』, 2023.7.3.,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3165200074>> (검색일: 2023.9.5.).

96/ “習近平主持召開中央全面深化改革委員會第二次會議強調：建設更高水平開放型

이처럼 중국은 경제 파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의 대중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행정부와는 달리 시장의 이윤을 추구하는 미국 경제인사나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구애 전략이 향후 예상된다.

대만 문제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인바, 강경 기조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공격과 친대만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대만해협의 평화 문제에 대한 다자적 협의가 계속될수록 중국은 내정불간섭과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하여 공세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강한 경고성 레토릭이 사용될 수는 있으나 미국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전체적 외교 기조 속에서 대만 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정책은 2024년 대만 총통선거까지 대만에 대한 채찍과 당근의 병행이 될 것이다.

특히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반중 정책이 대만 국민들에게 양안 딜레마를 안겨 준 상황에서 민진당 정권에 대한 인기도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2022년 펠로시의 방문으로 일반 대중들은 대만의 국격 승격을 환영했지만, 반면 양안 긴장이 확대되는 것으로 인해 현 민진당 정부의 지나친 대미 편승정책에 대한 불안감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를 아는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대만에 대한 유화책을 병행할 것이다.^{97/} 실제로 2023년 양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만과 평

經濟新體制 推動能耗雙控逐步轉向碳排放雙控,”『中國政府網』, 2023.7.11.,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307/content_6891167.htm> (검색일: 2023.9.5.).

97/ “Beijing Tells Taipei That Mainland Is Ready to Resume Cross-Strait Flights,” *Caixin Global*, February 8, 2023, <<https://www.caixinglobal.com/2023-02-08/beijing-tells-taipei-that-mainland-is-ready-to-resume-cross-strait-flights-101995989.html>> (검색일: 2023.6.12.); “China lifts import ban for 63 Taiwanese businesses,” *Taiwan News*, January 30, 2023,

화로운 발전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고,^{98/} 대만 국민당 샤리엔 부주석과 전 총통 미양지우(馬英九)의 방중 이벤트가 2월과 3월에 성사되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양안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항공노선을 확대하고, 대만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도 하였다.

나. 주변국외교: 썬기전략과 우군 확대^{99/}

시진핑 3기 지도부의 주변국 외교 기조는 △ 친성혜용(親誠惠容)의 이념과 이웃과 화목하게, 이웃을 동반자로 하는 주변외교 방침 심화, △ 주변국가와의 우호 및 신뢰, 이익 확대 등이다. 사실 이것은 표현 자체도 모호하고, 18대, 19대 내용과도 차이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국 외교 기조와 관계없이 구체적 전략은 대략 두 가지 방향으로 좁혀질 것이 예상된다. 하나는 미국의 우방국가들에 대한 썬기전략 즉, 미국 주도의 동맹 또는 커플링이 약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우호적인 주변 국가들의 이탈 방지 및 중국에 대한 우군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 강화를 약화하기 위한 미국의 전통 우방국들에 대한 공략이다. 대표적인 대상은 프랑스, 독일, 사우디, 독일, 호주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중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비록 안보적 측면에서 NATO를 중심으로 대중 견제가 확대되고, 가치적 측면에서 중국 인권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고 있지만, 모

〈<https://www.taiwannews.com.tw/en/news/4794383>〉 (검색일: 2023.6.12.).

98/ “十四屆全國人大一次會議在京閉幕 習近平發表重要講話,” 『新華網』, (2023.3.13.), 〈<http://lianghui.people.com.cn/2023/n1/2023/0313/c452482-32643590.html>〉 (검색일: 2023.6.12.).

99/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은 강대국 외교의 대상으로 분류될 수는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분석에서는 강대국 외교의 대상으로 미국으로 고정하며, 이 국가들을 주변국 외교에서 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든 국가가 이러한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 흐름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헝가리의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디커플링은 자살행위라고 강조했다며,^{100/} 2023년 4월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프랑스를 분리해서는 안된다”라며 “프랑스는 중국과 상업적 관계를 계속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중국과의 협력관계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01/}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NATO의 아시아 태평양 확대와 디커플링을 반대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연대에 찬물을 끼얹으며, 중국의 환영을 받기도 하였다.^{102/}

이러한 유럽의 분위기를 감지한 것인지, 시진핑 3기 외교 엘리트들은 출범 직후부터 유럽외교에 실제 박차를 가했다. 예를 들면 5월에는 중국 외교 3인방(한정 부주석,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친강 외교부장) 모두가 유럽으로 총출동했으며, 리창 총리 역시 독일과 프랑스를 첫 출장지로 선택하며 소위 EU가 미국의 디커플링 정책에 편승하는 것을 약화하려 노력하였다.^{103/}

호주와의 관계 개선 노력도 썩기전략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18년부터 호주의 코로나19 조사 요구, 쿼드(QUAD) 및 오커스(AUKUS) 가입 등 대미 편승으로 인해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2023년 중국은 2년 이상 제재해 온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하면서 경제 무역 정상화 조치를 취했다.^{104/} 오커스(AUKUS)를 통한 핵잠수함 기술 이전

100/ “중에 더 다가서는 헝가리 외무, 디커플링은 자살행위,” 『연합뉴스』, 2023.6.28.,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8079700009>> (검색일: 2023.8.5.).

101/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국빈 방중…중과 분리해선 안 돼,” 『연합뉴스』, 2023.4.6.,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5146700083>> (검색일: 2023.8.5.).

102/ “나토 아태진출·디커플링 반대…유럽발 '이전'에 중국은 반색,” 『연합뉴스』, 2023.6.7.,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7068700083>> (검색일: 2023.8.5.).

103/ “미중담판 외중 중국 2인자는 유럽 다지가…리창, 독일 방문,” 『연합뉴스』, 2023.6.19.,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9068100083>> (검색일: 2023.8.5.).

104/ “중국, 호주산 석탄 수입 전면 재개…금지령 2년 만에 해제,” 『연합뉴스』, 2023.3.15.,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5150400097?section=search>>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중국은 호주에 대한 경제적 선물 조치를 통해 호주의 대미 편승을 약화하고, 중국의 경제적 지렛대 효과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 우방 국가들에 대한 틈새 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나 동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체로 분위기가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다. 캐나다의 대중 견제 확대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탈퇴,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탈퇴 검토 등 중국이 주도해온 경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직접적 반발도 나타나는 상황이다.^{105/} 게다가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의 군사협력 강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 견제 연대에 가장 적극성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G7 개최국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공급망 연대 강화, NATO의 아시아 확장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독자적으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인도와 필리핀과의 군사적 연대 강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필리핀도 2022년 6월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이 기존 정부의 친중 정책 기조와는 달리 미국, 일본과의 해상 합동훈련을 확대하면서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갈등 관계를 빚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우군 확보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우선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이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과 강권정치에 대한 대항으로 러시아와 전략적 목표를 공유한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의 주요 명분 중 하나가 NATO의 동진 즉, 미국과 우방국가들의 안보적 독선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3연임 이후 첫 해외 출장지로

(검색일: 2023.9.5.).

105/ “캐나다, 연일 중 견제…공산당이 장악 국제금융기구 AIIB 탈퇴,” 『연합뉴스』, 2023.6.15.,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5024500009>> (검색일: 2023.9.5.); “이탈리아, 일대일로 탈퇴 가닥…관건은 ‘중국 체면 살리기,’” 『연합뉴스』, 2023.9.5.,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045000009>> (검색일: 2023.9.15.).

러시아를 택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함께 세계질서를 수호할 것이라며,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고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였다.^{106/}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러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이는 중국이 현 다자주의 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의 중재자를 표방하며, 내정불간섭 원칙을 천명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 자국의 이미지 외교에 불이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를 비판하고, 러시아와의 경제,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면서 러시아의 숨구멍을 터주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고,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우군 확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북아지역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확대되는 분위기에 대응하여, 러시아와의 합동 군사훈련이 빈번해질 것이 예상된다. 2023년만 하더라도 6월과 7월, 동해 인근에서 중러 간 해군과 공군 그리고 해·공군 합동훈련이 전개되었다.

러시아 외 국가들과도 안보적 연대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중국은 라오스,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등과 개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향후 동남아 5개국과의 다국적 연합군사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107/} 아세안 지역 외에도 중동 국가들과 안보 연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랍에미레이트(UAE)와 처음으로 합동 공군 훈련을 시도했으며, 중국, 러시아, 이란 협의체인 RIC 합동 군사훈련도 재개되는 추세이다.

106/ “習近平同俄羅斯總統普京舉行會談”, 『新華網』(2023.3.22), <http://www.news.cn/politics/leaders/2023-03/22/c_1129452447.html> (검색일: 2023.9.12.).

107/ “China to join expanded military drills with SE Asian countries,” *Global Times*, May 28, 2023, <<https://www.globaltimes.cn/page/202305/1291521.shtml>> (검색일: 2023.9.12.).

미국의 소위 공급망 디커플링 시도에 대한 대응으로 중동, 아세안, 중앙아시아 지역 주변국가와의 공급망 연대 확대가 예상된다. 5월 미국은 G7회의를 통해 중국 견제를 노골화하면서 민주주의 국가 간 공급망을 확대하는 조치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108/} G7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맞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에 2027년까지 약 6,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맞서 중국은 주변국들과의 각종 회의에서 일대일로와 인류운명공동체를 강조하며 중국 주도의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G7회의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된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에너지 발전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고, 에너지 산업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109/} 그리고 6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과 에너지 공급망 관련 협력 강화를 발표하기도 하였다.^{110/}

다. 개발도상국 외교: 개발도상국의 대변자 및 일대일로의 확대

시진핑 3기 지도부는 개발도상국 외교의 방향성을 △올바른 정의와 이익, 진실과 성실의 이념을 견지한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 강화,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공동이익 수호에 두었다. 특히 과거와 비교해 개발도상국들과 연대와 협력을 넘어 공동이익을 수호하겠다

108/ “G7, 중·러 겨냥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경제강압 대항 플랫폼.” 『연합뉴스』, 2023.5.20.,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0033000073?section=search>> (검색일: 2023.9.12.).

109/ 中國-中亞峰會西安宣言 (2023.5.19.), <https://www.mfa.gov.cn/web/ziliao_674904/1179_674909/t20230519_11080194.shtml> (검색일: 2023.9.12.).

110/ “中, 사우디·UAE 등과 협력 강화-에너지 공급망 확보 속도.” 『연합뉴스』, 2023.6.13.,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2121800083>> (검색일: 2023.9.12.).

는 명시적 표현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외정책에서 개발도상국 외교를 더욱 중시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20대 「보고」에서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영향력 확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발언권 확대를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111/}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하고 국제질서의 진영화 추세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 강조는 미국 주도의 진영 확대에 대한 진영을 확보하고,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응하며, 중국의 전략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실제 2023년 브릭스와 상하이협력기구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2023년 7월 상하이협력기구는 이란을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하였으며, 향후 회원국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8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도 사우디,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 6개국이 정식 회원국 가입이 승인되어 총 11개국 모임으로 외연을 확장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회의에서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어떤 나라는 패권적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신흥시장국가와 개발도상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브릭스를 중심으로 신흥시장국가와 개발도상국이 연대하여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12/} 말뿐만 아니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연설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개발권을 강조한 글로벌 발전구상을 위해 100억 달러 출자를 약속하기도 하였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외교를 강조하는 분위기는 두 협의체 외에도 다양한 지역 협력회의에서도 나타났다. 예를 들면 2023년 1월 제7차 라

111/ “習近平：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 為全面建設社會主義現代化國家而團結奮鬥——在中國共產黨第二十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中國政府網』, 2022. 10. 25., <https://www.gov.cn/xinwen/2022-10/25/content_5721685.htm> (검색일: 2023. 9. 5.).

112/ “시진핑, 브릭스에 개도국 더 참여해야...경제강압 함께 반대하자,” 『연합뉴스』, 2023. 8. 23.,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3164700083>> (검색일: 2023. 9. 5.).

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공동체(CELAC) 정상회의에서도 시진핑은 화상 축사를 통해 중국과 중남미국가들은 개발도상국 단결의 중요한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이 회의체가 이미 전 세계 남남협력(개발도상국 간 협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추진력이 됐다고 주장하였다.^{113/}

무엇보다 중국은 개발도상국 외교에 있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대일로를 통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중남미 지역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6개월 만에 발표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2023년을 기준으로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일대일로 참여국은 152개국으로 늘어났고, 중국과 참여국 간 무역액이 1.04조 달러에서 약 2.07조 달러로 2배 이상, 연평균 8% 이상 성장하였으며, 상호누적투자액이 2,700억 달러, 중국기업의 해외건설 누적투자액은 571.3억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동기간 약 42.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달성하였다.^{114/} 특히 일대일로는 미국과 서구 주도의 국제질서 운영에 불만이 있던 개발도상국들에 많은 매력을 어필하였다. 여기에 중국의 내정불간섭 원칙을 앞세우는 투자가 환영받았다. 물론 잠비아, 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들이 일대일로를 통한 사업자금 조달과정에서 국가 부도 사태 위기에 처했고, 미국은 일대일로를 ‘채무의 함정’으로 비판하였다.^{115/}

113/ “시진핑, 중남미 국가들에 “개도국 단결의 중요한 동반자.” 『연합뉴스』, 2023. 1. 25.,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5059600083>> (검색일: 2023.9.5.).

114/ “我國與“一帶一路”沿線國家貨物貿易額十年年均增長8%”, 『新華社』, (2023.3.2.), <https://www.gov.cn/xinwen/2023-03/02/content_5744191.htm> (검색일: 2023.9.6.).

115/ “돈 빌려주고 운영권 쟁긴 ‘中 일대일로 10년’… 23國 파산 위기.” 『조선일보』, 2023.9.5.,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3/09/05/RJSJZNHPIJBVPVJO27ZQ6SRLT7Q/>> (검색일: 2023.9.5.).

이러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중국 내부에서도 기존 일대일로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하여 보완책을 연구하였고, 10주년을 계기로 향후 일대일로 2.0의 발전 방향을 계획 중이다. 기존 일대일로의 방향이 주로 인프라에 집중된 거시적 투자였다면,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다양하고 미시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대변자임을 강조하면서, 그 수단으로서 일대일로를 활용할 것이다.^{116/}

라. 국제·다자외교: 새로운 규범의 창조자

국제·다자외교는 시진핑 3기 지도부가 보다 적극성을 보여줄 영역으로 예상된다. 20대에서 제시한 중국의 국제·다자외교의 주요 방향성은 △ 국제관계 민주화 및 국제거버넌스 개혁 △ UN에 기초한 국제체제·질서·원칙·규범 등을 확고히 수호,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 반대, △ WTO, APEC의 더 나은 역할 촉진 및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신흥시장국가와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 △국제안보규칙제정, 안보협력, 국제평화 및 지역안정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18대와 19대와 비교해서 20대의 국제·다자 외교 방향은 그 내용이 훨씬 많아졌고, 목표의식과 수단이 매우 뚜렷하게 제시된 특징을 보였다. 첫째, 국제관계 민주화 및 국제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표명되었다. UN에 기초한 국

^{116/} 사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주변국외교, 개발도상국외교, 국제·다자외교를 포괄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 개발도상국 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한 것은 일대일로의 확장에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채무의 함정’과 같은 기존 비판에 더해, 2023년 9월 이탈리아가 사실상 일대일로 탈퇴를 공식 화함으로써 특히 유럽 및 선진국들에 대한 전략 확대에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23년 10월 110여 개국의 대표가 참가하는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참가국 규모는 6년 만에 4배가 늘 정도였으며, 이는 일대일로가 명실상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주요 외교 수단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제체제·질서·원칙·규범 등을 확고히 수호하고,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기존 다자주의 질서의 원칙이 무너지는 현상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특히 미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리고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등 중국이 주도해 온 협의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중국이 향후 남남협력과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다자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미 개발도상국 외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다양한 다자무대에서 중국이 신흥시장국가와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안보 분야의 규칙제정, 평화 문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선언하고 있어, 중국이 향후 기존 질서의 문제점을 개혁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규칙과 규범을 창조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진핑 2기 말부터 중국은 글로벌 발전구상, 글로벌 안보구상, 글로벌 문명구상과 같이 중국식 국제거버넌스 담론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등 기존 미국 주도의 질서와 가치에 대한 대응과 경쟁 의사를 확고히 해오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2021년 발표된 글로벌 발전구상이다. 발전문제가 현 국제의제의 핵심이며, 공동발전 번영의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 구상을 통해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약화 현상의 극복과 선진국과 후진국 간 경제 불평등과 남남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글로벌 공공재 제공 역할을 강조한다.¹¹⁷⁾ 향후 국제·다자무대에서 중국은 이 구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 외교와 남남협력의 강조 차원에서 이 구상을 현실화하는 다양한 외교적 실험이 진행

117) “習近平出席第七十六屆聯合國大會一般性辯論並發表重要講話,” 『人民網-人民日報』(2021.9.22.), <<http://politics.people.com.cn/n1/2021/0922/c1024-32232507.html>> (검색일: 2023.9.6.).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22년에 발표된 글로벌 안보구상이다. 중국판 안보구상으로 주로 주권 평등과 내정불간섭 그리고 냉전적 사고와 일방주의, 패권주의는 배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118/} 특히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과의 안보협력 및 연대 강화를 목표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기존 질서에 대한 대항 의지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중국이 주도하는 제도 속에서 특히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선전 그리고 공감대 형성 작업이 강화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2023년 발표된 글로벌 문명구상이다.^{119/} 이 구상은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 직후 발표되었으며, 기존 시진핑 국가주석의 다양한 외교담론과 글로벌 발전구상, 글로벌 안보구상 등을 종합한 중국판 신질서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명의 다양성과 공유된 인간 가치에 대한 존중, 다양한 문명유산과 혁신에 대한 존중, 국제적, 인적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 구상은 최근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동맹의 강조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이 꿈꾸는 국제질서는 국가 간 이념적 선을 긋고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문명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문명구상은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경쟁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중국의 의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가장 최근에 발표된 글로벌 AI 거버넌스구상이다. 2023년 10월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구상을 발표하면

118/ MFA of PRC, "The Global Security Initiative Concept Paper" (2023.2.21.), <https://www.fmprc.gov.cn/mfa_eng/wjbxw/202302/t20230221_11028348.html> (검색일: 2023.9.6.).

119/ "習近平在中國共產黨與世界政黨高層對話會上的主旨講話," 『新華網』 (2023.3.15.), <http://www.news.cn/politics/leaders/2023-03/15/c_1129434162.htm> (검색일: 2023.6.12.).

서, “모든 나라가 AI 개발에서 상호 존중해야 하며 규모, 국력, 사회 시스템과 관계없이 AI 개발에서 동등한 권리, 기회, 규칙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촉구하였다.^{120/} 우선적으로 이는 AI 첨단기술 관련 미국 및 선진국들의 대중 견제 정책 현상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단순하게 자국의 이익 확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들의 불만을 함께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규범권력 확대 의지를 잘 보여주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전개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중국은 글로벌 AI 거버넌스구상 발표와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리더로서 개발도상국들과 기술 협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확대 및 투자를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중재자 역할 수행이다.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 직후인 3월에 중국은 중동지역의 오랜 지정학적 경쟁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하면서 외교적 존재감을 과시하였다.^{121/} 이어 4월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5월 중량급 외교관인 리후이(李輝) 특사를 파견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역시 4월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주변국 외무장관 회의를 주도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주변국 간 협력을

120/ “第三屆一帶一路國際合作高峰論壇主席聲明”, 『人民網-人民日報』(2023.10.19.), <<http://cpc.people.com.cn/n1/2023/1019/c64387-40098580.html>> (검색일: 2023.10.22.).

12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PRC, “Joint Trilateral Statement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2023.3.10.), <https://www.fmprc.gov.cn/mfa_eng/wjdt_665385/2649_665393/202303/t20230311_11039241.html> (검색일: 2023.6.12.); John S. Van Oudenaren, “The Global Security Initiative: China Outlines a New Security Architecture,” *China Brief*, 23(4), 2023, <<https://jamestown.org/program/the-global-security-initiative-china-outlines-a-new-security-architecture/>> (검색일: 2023.6.12.).

표 IV-4 역대 당 대회 보고에 나타난 주요대상별 정책

		18대	19대	20대
대상별 주요 정책	강대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과 발전, 협력영역 확대, 차이점의 합리적 처리 • 안정적이며 건강한 신형대국관계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과의 협력·협조 확대 • 대국관계체계의 안정적 균형발전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과 협조와 건전한 상호작용 촉진 • 대국관계체계의 평화공존, 안정적, 균형발전 건설
	주변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과 화목하게, 이웃을 동반자로 견지 • 선린우호 공고화, 호혜협력 심화 • 중국 발전이 주변국에 혜택이 되도록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성혜용의 이념과 이웃과 화목하게, 이웃을 동반자로의 주변외교 방침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성혜용의 이념과 이웃과 화목하게, 이웃을 동반자로의 주변외교 방침 심화 • 주변국과의 우호 신뢰, 이익 확대
	개발도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인 개발도상국과 단결 협력 강화, •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익 공동 수호, 개발도상국의 국제 대표성·발언권 지지 • 개발도상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정의와 이익, 진실과 성실의 이념을 견지하여 개발도상국과 연대와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정의와 이익, 진실과 성실의 이념을 견지하여 개발도상국과 연대와 협력 강화 • 개발도상국의 공동이익 수호
	국제/다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사무 적극 참여 • UN·G20·SCO·BRICs 등의 적극적 역할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관계 민주화 및 국제거버넌스 개혁 • 세계 불평등 해소를 위한 UN의 적극적 역할 지지 • 국제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관계 민주화 및 국제거버넌스 개혁 • UN에 기초한 국제체제·질서·원칙·규범 등을 확고히 수호,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 반대 • WTO, APEC의 더 나은 역할 촉진 및 BRICs, SCO의 영향력 확대 통한 신흥시장국가와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 • 국제안보규칙 제정 안보협력 국제명화·지역안정문제에 적극적 참여

자료: “胡錦濤在中國共產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習近平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習近平在中國共產黨第二十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中國政府網』, <<https://www.gov.cn>>에서 저자 정리.

강화하기로 하였다.^{122/} 일련의 평화 중재 행보에 대해 중국은 글로벌

122/ “中·러·이란·파키스탄, 아프간 발전 공동 모색하기로.” 『연합뉴스』, 2023.4.18.,

안보구상의 성공적 실천사례로 홍보하고 있으며, 중국이 선의를 가진 신뢰할 수 있는 평화의 중재자인바 앞으로도 지역 및 국제 평화를 위해 미국이나 서구와는 차별화된 외교 행보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0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생함에 따라 세계정세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며, 세계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만하다.

3. 소결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가장 큰 특징은 시진핑 1인 우위 체제의 확립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에 시진핑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진핑 1인 우위 체제에서는 시진핑계열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약자들의 연합 결성 상태에서는 결국 시진핑의 말이 곧 국가의 외교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시진핑의 오판과 집단사고의 위험성이다. 시진핑의 판단이 현명하다면, 오히려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전 세계의 안녕과 평화가 1인의 오판에 따라 좌지우지될 재앙적 상황이 올 수 있다. 특히 문제는 전문성이 높은 관료조직이 전문적 판단 기능을 시진핑에게 양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사고의 위험성은 시진핑 3기 지도부에서 두드러질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권력의 안정성은 오히려 정책 결정 권한의 분산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 시진핑계열 엘리트들이라면 시진핑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책 결정의 자율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3162800096>〉 (검색일: 2023.9.5.).

성을 향유 할 수도 있다. 이번 지도부 인사에서도 기존 개혁개방 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경제·과학기술 전문가의 대거 배치는 그나마 향후 중국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 전문적 관료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군사안보 차원에서 가장 뜨거운 화약고인 대만 문제 역시도 대만 전문가들을 전면 배치함으로써 정책 결정 체계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전문 엘리트들이 향후 시진핑의 독단과 오판을 견제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지만, 최소한 경제, 과학기술, 대만 문제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대외정책의 최전선에 전문성이 있는 관료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나마 정책 결정의 속고와 조율의 과정을 기대하게 한다.

무엇보다 일국의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 엘리트 요인이 구조 요인에 비하면 덜 중요하다는 것도 시진핑 1위 우위 체제의 영향력 변수를 약화할 수 있다.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도 결국 대외환경과 같은 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미국의 대중 견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이 미국의 전략에 편승할지에 대한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외환경의 변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국내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위기를 중국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내 여론과 민심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의 국내정치 환경 변수이다.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 목표는 공식적으로 중국의 전통적 외교 레토릭인 세계평화, 국가 간 다양성과 평등성 존중, 내정간섭과 패권 반대, 냉전적 사고 반대 그리고 현 국제질서의 불평등성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과거 시진핑 1기, 2기와 비교해 좀 더 강조되는 점은 △ 인류운명공동체의 추동, △ 개발도상국과의 적극적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운명공동체는 시진핑 1기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이상적 질서관이고, 이미 1기와 2기를 통해 주요 외교 현장에서

홍보해 왔다. 시진핑 3기는 이 외교담론을 보다 본격적으로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 및 서구의 대중 견제와 소위 디커플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중국의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이상적 담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를 추동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기존 질서의 모순을 개혁하고, 새로운 이상질서를 구현하는 실질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강조 역시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도 우군이 필요하며, 그 대상으로 개발도상국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3기 지도부는 과거와 비교해 더욱 적극적으로 남북차이 해소를 위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및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인류운명공동체 추동을 위해 중국적 외교담론 시리즈인 글로벌 발전구상(GDI), 글로벌 안보구상(GSI), 글로벌 문명구상(GCI)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 구상들은 중국이 기존 헤게모니 질서를 비판하고, 새로운 미래 질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상적 질서인 인류운명공동체 추동을 위한 방법으로서 적합하다. 이미 중국의 국제·다자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공식 언급되었고, 다양한 협의체에서 이 구상을 근거로 중국 외교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다자주의 질서의 수호자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자주의 질서의 수호자임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서구 중심의 기존 질서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동시에 비서구 그룹 국가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속도 조절이다. 중국의 대미 강경 레토릭 때문에 미중 충돌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지만, 중국은 아직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국력의 차이,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 등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이라는 선택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협력의 공간을 늘리려고 노력할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전반적인 구조의 원심력이 경쟁의 심화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협력의 전환점을 찾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여전히 세계화와 자유무역 협력의 경로의존성이 미중관계에 작용하는바, 상호 경제이익을 위한 협력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은 세계 1위의 제조업 프리미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에 대한 구애, 시장파워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 추구해 대중 견제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안보 차원에서는 대만 문제가 가장 관건이다. 대만 문제는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특징과 관계없이 전통적으로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인바, 미국의 친대만 정책이 확대되고, 대만의 독립 추구가 강화되면 강경 대응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줄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 역시도 대만 문제가 미중 갈등을 최고조로 끌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려 할 것이다. 특히 2024년 대만 대선을 앞두고 최근 중국이 대만에 취한 다양한 유화책들과 대만 전문 엘리트들의 대만 업무에 대한 전면 배치 등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방법론으로는 썬기전략과 중국 중심 블록 확대가 있다. 썬기전략은 소위 미국의 동맹체제를 약화하고, 중국의 자산과 매력을 활용해 약한 동맹의 고리를 끊고, 미국보다는 중국의 이해에 유리하도록 구인하는 방법이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공략할 대상들은 EU, 사우디, 호주 등이 될 것이다. 중국 중심의 블록 확대는 미국 중심의 블록화에 대한 대응이며, 특히 중국의 주변국 및 개발도상국

외교에서 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다양한 중국 주도의 협의체를 확대해 온 경험이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천명한 이상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선물 공세와 투자사업이 예상되며, 이를 기존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등을 통해 신흥개발국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를 확대하는 행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중국이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U를 중국 쪽으로 견인하려는 썬기전략도 EU의 전통적 인권외교의 변수로 인해 방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지역 역시 미국에 대한 편승의 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2023년 한미일 간 협력이 확대되었고, 필리핀 역시 미국과의 군사동맹 훈련을 확대하면서 중국과의 남중국해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심지어 이런 분위기가 아시아판 NATO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베트남 역시 미국에 대한 편승이 확대되는 분위기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가 급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현재 중국은 일대일로 10주년의 성과를 경축하고 있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만, 지난 기간 동안 중국의 신제국주의, 채무의 함정 등 일대일로의 어두운 면이 다수 부각 되었다. 더구나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일대일로 투자역량 약화는 결국 중국의 공공재 제공능력 하락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이 주도하는 블록화 형성과 개발도상국 적극 협력 목표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 내 인권문제 및 민주주의 가치 훼손 사례들이 왕왕 등장하게 되면, 미국 및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것이고, 인류 보편의 가치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과 비교해 열세인 상황에서 중국의 매력 확산은 한계를 노정할 것이다.

V.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

일반적으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은 시진핑 집권 3기라는 점에서, 변화보다 지속성이 강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진핑 집권 3기의 대내외 정세 변화는 중국의 대내외 전략에 일정한 영향을 줄 개연성이 농후하며, 이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즉, 대외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인해 국제정세의 불안정성·불확실성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대내적인 경제발전의 성과와 대외적으로 국제적 위상 확대의 필요성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의 II~IV장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의 특징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규명하고,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의 특징과 한반도 정책과의 상관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인식과 정책 기조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며, 시진핑 집권 이후 3연임에 이르기까지 대북정책과 중북관계의 지속적 측면과 변화된 측면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중관계의 지속적 측면과 변화된 측면을 살펴보고 한중관계를 전망하고자 한다.

1.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인식과 정책 기조

가.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특징과 한반도 정책

Ⅲ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의 가장 주목된 결과는 첫째, 시진핑 1인 우위 체제의 확립으로 시진핑 장기 집권체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며, 중국식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사실상의 시진핑 1인 독주 체제의 특성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123/} 즉, 시진핑 1인 우위 체제에서 시진핑의 핵심 정책들은 탄력을 받아 높은 효율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고, 반면에 브레이크 없는 질주로 심각한 정책 실패의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집단적 사고(group-think)의 폐해도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이러한 특징은 국내외 정세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당 중앙의 권위와 통일된 영도를 높이는 방향의 기구 개편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이 당 중앙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면서 한반도 정책 결정 과정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124/} 당 중앙의 의사협조기구인 중앙금융위원회(中央金融委員會) 및 중앙과학기술위원회와 당 중앙의 직능부문인 중앙사회공작부(中央社會工作部)의 신설은 공산당 통치의 안정성·정당성을 확보하고 미중 전략경쟁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미중 전략경쟁에 더욱 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당 중앙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기구에서 집행한다는 점에서, 2018년 당·국가기구개혁을 통해 시진핑 2기에 강화되어 당정일원화의 특징으

123/ 전병곤 외, 『중국 20차 당 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p. 103.

124/ “關於國務院機構改革方案的說明,” 『中國政府網』, 2023.3.8., <https://www.gov.cn/guowuyuan/2023-03/08/content_5745356.htm> (검색일: 2023.3.8.).

로 나타난 당 지배체제의 일원적인 특성이 더욱 부각 되었다.^{125/}

셋째, 시진핑 3기의 중국은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만을 제거하고 권력 기반을 공고화할 수 있는 대내외적 성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대내외적 성과에 부응하고 관리하는 방향에서 한반도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126/} 시진핑 정부의 대내적 핵심 성과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말할 수 있다. 20차 당 대회 「보고」에서 나타난 ‘과학기술(科學技術)’과 ‘안전(安全)’이라는 용어의 사용 빈도수가 19차 당 대회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시진핑 3기의 중국은 경제 분야에서 과학기술과 사회안정을 중시할 것이라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127/} 그리고 대외적 핵심 성과로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미국의 봉쇄와 압박에 대응해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안정과 발전이 시진핑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자국의 대내외적 성과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결정되거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는 방향에서 결정될 개연성이 클 것이다. 한국과의 협력은 대내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역시 매우 중요한 외부 요소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급변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외적으로 중국에게 미국과의 외교전, 여론전에서 북한보다 한국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과의 대

125/ 2018년 당·국가기구개혁을 통해 강화된 당정일원화의 특징은 황태연, “중국의 당정(黨政)관계 변화,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인가?: 시진핑 시대 당정 기구개혁을 중심으로” 참조

126/ 전병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대내외정책 방향과 북중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KINU Insight, 2023-1, 2023), p. 13,

127/ 전병곤 외, 『중국 20차 당 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p. 65.

결(갈등·충돌)이 증가할수록 북한의 지정학적, 안보적, 이념적 가치 연대가 더 부각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만 문제는 중국의 대내외적 성과가 집약된 이슈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대만 이슈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될 것임을 시사한다.

넷째,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은 엘리트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더 클 것으로 평가된다. 미중 전략적 경쟁은 구조적 요인으로서 중국의 핵심적 외교과제라 할 수 있으며, 시진핑 2기와 3기의 한반도 정책에서 ‘지속’과 ‘변화’의 측면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조적 요인인 미중 경쟁 및 갈등이 더욱 격화될수록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더욱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

다만, 시진핑 3기의 경우 시진핑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미칠 엘리트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직위와 인물은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대외정책 결정 및 집행과 밀접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 관련 기관으로 당 중앙에는 중앙국가안전위원회와 대외연락부, 국무원에서 외교부 및 국방부, 상무부, 그리고 북한과 인접한 동북 3성 지방정부 및 싱크탱크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사로는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으로, 그는 외교계에서 가장 오랜 경력을 가졌다. 그 밖에 류젠차오 대외연락부장, 동북 3성 중 랴오닝성 당서기를 역임한 장귀칭 국무원 부총리, 류샤오밍(劉曉明) 한반도사무특별대표, 헤이룽장성 성장을 역임한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 왕야쥘(王亞軍) 주북한 중국대사, 그리고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등이 있다.

나.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인식

(1) 시진핑 집권 이전

한반도와 중국은 오랜 역사적 연관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반도는 접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서 중국의 경제발전과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는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중첩된 지역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지대이자, 중국과 긴 국경선과 해양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지정학적·지경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중국 중심의 주변질서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이처럼 한반도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국내 및 대외전략 전반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관건 지역으로 작용해왔다.^{128/}

탈냉전 이후 시진핑 집권 이전까지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이를 위한 안정적 대내외 환경 조성, 그리고 더욱 신장한 국력에 부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상생, 대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에 순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외전략 기조는 기존 중국의 한반도 인식에서 안보 및 이념적 측면보다 경제발전과 국제적 위상의 측면이 더 부각 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 가치 인식은 냉전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탈냉전 이후 한국과의 경제적 호혜, 정치적 선린, 안보적 협력이 중요해졌으며,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평화로운 주변 환경 창출에 한국과의 협력은 긴요하게 이뤄졌다. 그리고 자국 부상에 따른 유리한 역내 질서 수립을 위해서도 한국과의

^{128/} 전병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대내외정책 방향과 북중관계 전망,” p. 14.

협력을 중시하였고, 북한 및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한 한국과의 관계 설정도 필요하였다.

반면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 가치 인식은 냉전기보다 약화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은 전통 사회주의 우호국으로서 가치·이념 동맹을 맺고, 해양세력의 압력을 막아주는 완충지대로써 순망치한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북한은 한국 및 미일과의 관계 구도에서 유리한 측면이 존재하며, 중국 동북지역의 개발에 잠재적 자원 배후지로서의 전략적 가치로 인식됐다.

(2) 시진핑 집권 이후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인식은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질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129/} 이렇게 평가하는 주된 이유는 미중 양국의 체제와 이념에서 오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양국 국력 격차의 축소에서 기인한다. 특히, 중국의 국력 상승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위해 협력해야 할 대상이지만, 동시에 자국의 부상을 통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양면적인 중국의 대미 인식과 태도도 부각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진핑 1기 지도부는 2012년 11월 18차 당 대회에서 ‘중국몽(中國夢)’, 중화민족의 부흥, 사회주의 강국의 비전과 핵심이익(국가주권, 안보, 발전)을 제시하고, 미국에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평등한 신형대국관계를 제안하였다.^{130/} 이후

129/ 김동수 외, “미·중갈등 대응전략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 pp. 78~80, <https://www.nrc.re.kr/board_es?mid=a10301000000&bid=0008&act=view&list_no=0&otp_id=OTP_0000000000010132> (검색일: 2023. 1. 20.).

130/ “胡錦濤在中國共產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中國政府網』, 2012. 11. 18., <https://www.gov.cn/ldhd/2012-11/17/content_2268826.htm> (검색일: 2023. 1. 20.).

시진핑 2기 지도부는 2017년 19차 당 대회에서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 친밀·성실·호혜·포용(親誠惠容)의 주변국 외교를 주창하며 변화된 위상에 바탕을 둔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국제관계를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한편, 자국의 핵심이익 수호와 권리행사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131/} 2022년 10월, 20차 당 대회에서 출범한 시진핑 3기 지도부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와 방향을 계승하는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강조함으로써,^{132/} 향후 미중 갈등의 장기화·구조화·복합화 추세를 예고하였다.

이와 같은 미중관계의 질적인 변화는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한반도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였다. 과거 시진핑 1기 지도부의 중국은 미국의 견제 완화와 자국 부상에 유리한 질서 구축을 위해 한반도의 지정학적·안보적 가치보다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의 역할을 더 중시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에 시진핑 2기 지도부의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반도에서 국제사회의 책임대국으로서의 역할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안보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시진핑 3기 지도부의 중국은 2기의 한반도 인식을 대체로 계승하는 한편, 미국과의 경쟁이 가속화 함에 따라 자국에 유리한 주변 질서 구축을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131/ 중국 19차 당 대회의 공식문건인 정치보고에서 ‘중국은 자신의 정당한 권익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꿈은 버려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 “習近平：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 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網』, 2017.10.27., <<http://cpc.people.com.cn/19th/n1/2017/1027/c414395-29613458.html>> (검색일: 2022.1.26.).

132/ “習近平：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為全面建設社會主義現代化國家而團結奮鬥，在中國共產黨第二十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中國政府網』, 2022.10.25., <https://www.gov.cn/xinwen/2022-10/25/content_5721685.htm> (검색일: 2022.10.29.).

종합하면,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전략 가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지역은 중국의 대내외 전략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관건 지역이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변영은 중국의 안보와 발전에 직결된다. 셋째, 한반도는 미중 양국 세력의 완충지대로서 지정학적 가치가 여전히 지대하다. 넷째, 중국 주도의 주변 질서를 형성하는데 한반도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대미, 대일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다. 한반도 정책 기초

시진핑 집권 이전부터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란 원칙을 유지·강조하며 한반도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해왔다.^{133/} 이러한 원칙 안에서 중국의 대미정책이 협력에 방점을 둘 경우, 중국은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에 협조하면서 경제발전의 실리 획득은 물론 대외적 위상과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특징을 보였다.^{134/}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대외전략과 그 하위에서 운용되는 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속에 방점을 두면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집권 시기별로 살펴보면, 먼저, 시진핑 1기의 중국은 국내문제의 해결과 평화발전을 통한 부상 및 증대된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데 유리한 외부환경 조성에 치중해왔고,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비핵화 실현, 영향력 우위를 통한 대국으로서의 입지 강화’라는 한반도 정책 기초를 유지해왔다.^{135/}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133/ 전병곤 외, 『중국 20차 당 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p. 107.

134/ 김동수 외, 『미·중갈등 대응전략 연구』, p. 79.

안정 유지'는 가장 핵심이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영향력 우위를 통한 입지 강화'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요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시진핑 2기의 중국은 안정적인 외부환경과 자국 주도의 질서형성에 유리하도록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점진적·전략적으로 증대시키려는 정책을 구사해왔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공존공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135/} 다만, 이러한 시기 구분이 명확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1기와 2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차이와 변화를 노정한 바 있다.

먼저, 시진핑 1기에서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대국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중관계도 갈등보다는 협력이 우세하던 시기다. 이때는 한중관계가 중북관계보다 상대적으로 협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진핑 2기는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관계의 갈등이 대두되고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미중관계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적 가치가 더욱 증대되었고, 상대적으로 중북관계는 개선되고 한중관계는 악화했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 3기의 한반도 정책 기조 역시 2기의 기조를 대부분 계승할 것이라는 점에서 변화보다는 지속적 측면이 더 클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관계의 변화 수위에 따라 한반도 정책 기조가 달라질 여지도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기

135/ 전병곤,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통일정세분석 2013-03 (통일연구원, 2013), p. 15.

136/ 전병곤,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통일연구원 KINU Insight 17-02 (통일연구원, 2017), p. 18.

존 한반도 정책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진핑 3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 목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그리고 ‘자국 주도의 질서형성을 위한 대한반도 영향력 강화’로 압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북한 김정은 정권체제의 유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자국 주도의 한반도 질서형성 및 한반도 비핵화를 바란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경제발전의 성과와 대외적 위상 확대가 필요한 중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의 경쟁이 핵심적인 외교과제라 할 수 있다.^{137/} 특히,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에 따라 중국은 미국 주도의 한반도 질서형성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자국 주도의 질서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도록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것이다. 먼저, 자국 주도의 질서형성 차원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안보적, 전략적 가치를 고도로 중시하면서 중북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미국과의 경쟁에 맞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억제하기 위하여 한중협력을 유인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억제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봉쇄 전선의 약화 내지, 돌파를 모색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반도에서 미중 전략경쟁 구도는 한미일 대 중러북의 대립 양상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크다.

137/ 전병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대내외정책 방향과 북중관계 전망,” pp. 13~14.

2.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가. 대북(핵)정책과 중북관계 전망

(1) 대북(핵)정책 목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외전략 및 한반도 정책 기조에 따른 대북(핵)정책의 목표인 북한 체제의 평화와 안정,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북 영향력 확대 등은 대부분 유지·계승되었다. 다만, 중국은 미중관계와 북한의 외교·안보적 가치에 따른 중국의 핵심이익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북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시진핑 1기에 발생한 북한의 3~6차 핵실험 시기가 이에 해당한다. 즉, 당시 중국은 자국의 부상에 따른 대외적 이해관계가 확대하고 핵심이익이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 변수가 국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국익에 유리하도록 북한을 유도하려는 동기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당시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 유지처럼 안보이익을 더 우선시 하면서 북한이 일으키는 긴장 고조 행위를 억제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등 발전이익을 수호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오히려 중북관계의 약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보유를 반대하지만,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방식을 선호하는 중국의 북핵 정책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나 급격한 통일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시진핑 집권 2기에도 기존 북핵과 북한을 분리한 대화와 제재라는 투트랙 접근방식을 취하였다.^{138/}

^{138/} 투트랙 접근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협상이며, 구체적인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 → 한미 군사훈련 잠정 중단 → 대화 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2기에 한반도 질서를 둘러싼 미중 간 영향력 경쟁의 격화는 중국이 대북정책 목표를 조정함으로써 중북 협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채, 남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미국 주도의 질서형성을 시도한 바 있다.^{139/} 이에 따라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4월 27일, 5월 26일, 9월 19일) 및 2차례의 미북 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 2019년 2월 28일)이 개최되었고, 이러한 미국의 시도에 대해 중국은 중북관계를 활용한 개입으로 자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한반도 질서형성을 견제하였다. 실제로 중국은 5차례의 중북 정상회담(김정은 방중 4회, 시진핑 방북 1회)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투영함으로써 한편으로 ‘중국배제론’을 불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역할론’을 부각시켰다.

종합하면, 시진핑 3기 중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 체제의 평화와 안정, 대북 영향력 확대,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요약할 수 있다.^{140/} 특히,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더욱 중요해진 북한의 전략 가치를 고려한 중국은 북한 체제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최상위 목표로 설정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자국 주도의 질서형성에 유리하도록 대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명백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이며, 대화를 통한 해결 즉,

→ 무력불사용, 불가침, 평화공존의 총원칙 확정 → 핵문제 포함한 모든 문제 일괄타결(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보기제) → 관계 정상화이다.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和俄羅斯聯邦外交部關於朝鮮半島問題的聯合聲明,” 2017.7.4., <https://www.mfa.gov.cn/wjzb_673089/zyhd_673091/201707/t20170704_7577579.shtml> (검색일: 2017.7.6.).

139/ 전병곤 외, 『중국 20차 당 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p. 110.

140/ 전병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과 북중관계 전망,” p. 1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 협상을 주장하며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141/} 특히,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북한의 급변·붕괴 등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국에 더 많은 전략적 손실과 비용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대북관계를 전략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142/}

왜냐하면, 미중 전략경쟁의 구도에서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부담보다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할 개연성이 더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143/} 중국은 전략적 부담으로 여겨지는 북한의 경제난과 탈북자 증가, 핵보유국화 시도 및 각종 도발 등 북한의 행위가 중국의 국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은 전략적 자산인 북한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를 더욱 유효하게 평가하고 있다.

(2) 중북관계의 전개

중북협력과 중러북 연대의 강화

북한은 2019년 2월 미북 정상회담의 하노이 노딜(no deal) 이후 자력갱생과 자주국방의 길을 걸으면서 한국이나 미국과의 대화보다 대결을 선택하며 점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강 대 강의 국면을 계속해서 조성하고 있다. 어느 정도 핵무기의 소형화 및 경량화를 완성한 북한은 미사일 발사체의 다중화(SLBM, 열차, 트럭 등 활용)를 통해 전술핵 역량의 강화를 시도하였고, 2022년 3월 ICBM과 핵 실험 유예를 폐기함으로써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예고하였다. 또한,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함으로써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141/ 전병곤 외, 『중국 20차 당 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p. 112.

142/ 위의 책, p. 113.

143/ 전병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대내외정책 방향과 북중관계 전망,” p. 15.

특히,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핵무력 완성을 추구하면서 미중 갈등 구도에서 미국을 비난하고 중국을 지지함으로써, 미중 사이의 간극을 더욱 넓히고 자신의 생존 및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 즉, 한미(일) 군사훈련에 맞대응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중북관계를 활용해 중국으로부터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경제적 지원 획득 및 경제협력 확대, 그리고 외교적 우군 및 최소한의 안전판 확보를 추구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144/}

실제로, 북한은 2022년 12월 제8기 6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2월 26일~31일)를 개최하고 자력갱생과 국방력 강화, 대미·대남 강경책 등을 선포하고, 2023년 초부터 ICBM(1월 18일), 화성-15형(2월 18일), 탄도미사일(2월 20일)을 연달아 발사하는 등 잇단 도발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며 러시아와 협력하여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채택을 무력화하고 있다.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주중 러시아 대사와 회동(2월 21일)해 중국(러시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정치적 해결을 추구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또한,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주장하며, 한미일의 군사훈련 및 강압 정책을 북한의 도발 원인으로 지목하였다.^{145/}

더욱이 북한은 한미일 공조 강화 추세에 대해 김여정 명의의 공식 입장(4월 29일)과 통신사 및 전문가 논평(4월 30일, 5월 1일)을 통해 워싱턴 선언을 폄훼하고 한미 양국을 강력히 비난하는 여론·외교전을 수행함과 동시에 도발 명분을 축적하려는 반응을 보였다. 김여정은 워싱턴 선언을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로서 역내 및 세계평화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미 전략자산의 전개는

144/ 전병곤 외, 『중국 20차 당 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p. 113.

145/ 전병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대내외정책 방향과 북중관계 전망,” p. 16.

북한이 강력한 행동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북한의 자위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해 증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46/}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에 철저히 준비되어야...”,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할 것”, “우리의 자위권 행사도 정비례 증대”,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제2의 임무(선제사용)” 등의 표현은 고강도 도발을 암시하는 것이다.^{147/} 또한 “반민족적이고 대미 굴종적인 행태는 남조선을 미국의 핵전쟁 화약고로 전락”, “우리 인민은 물론 온 겨레의 분노를...” 등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도 보였다.^{148/} 이처럼 워싱턴 선언을 “조선반도에 또 다른 핵위기를 몰아오는 기폭제”, “동북아시아 지역에 승냥이를 끌어들이는 행위”, “지역을 긴장 고조와 군비경쟁의 악순환 속에 몰아넣은 위태로운 결정” 등으로 평가절하하였다.^{149/}

이처럼, 북한의 도발에도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등 중러 북 연대 강화 추세가 계속되면서 중북관계도 긴밀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된 후 첫 번째로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3월 21일)을 개최함으로써 반미연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대북제재로 인해 사용 불가능한 북한의 나선향을 대신해 블라디보스토크항의 사용권을 확보함으로써 물류비용의 절감(借港出海)은 물론, 향후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연해주의 경제협력 토대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왕야권 신임 주북한 중국대사가 부임하면서 시진핑 구두 친서를 북한 노동

146/ “북한 김여정 ‘워싱턴 선언’ 반발...미한 정상 맹비난,” 『VOA』, 2023.4.30., <<http://voakorea.com/a/7072350.html>> (검색일: 2023.10.1.).

147/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입장 발표,” 조선중앙통신사(2023년 4월 29일)

148/ “위험천만한 핵전쟁행각의 진상을 해부한다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조선중앙통신사(2023년 4월 30일)

149/ “전략자산전개의 적법성을 떠드는 근거에는 무엇이 깔려있는가,” 조선중앙통신사(2023년 5월 1일)

당 국제부상 김성남에게 전달하였다. 왕야쥬 주북한 중국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신임 외국 대사로는 처음으로 부임한 인사로 중북관계 강화의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축전에 대한 답신으로 구두 친서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략적 소통의 강화, 중북관계의 발전 방향을 언급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3연임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먼저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중북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북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우의와 발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어 5월 8일에는 중북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다롄(大連) 회동 5주년 기념행사^{150/}를 개최하고 우의를 과시하며 중북관계 강화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편, 2023년 9월 13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중북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은 러북 간의 일로 중북 우호 협력관계는 새롭게 더 큰 발전을 부단히 촉진하고 있다”^{151/} 라고 하였다. ^{151/} 이는 중국이 러북 정상회담을 중러북 연대와 직접 관련짓는 것을 피하고 전략적으로 중러북 연대를 강화하면서도 한미일 협력 강화를 반대해온 중국이 미국을 의식해 자칫 중러북 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차단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150/ 중국 측에서는 왕야쥬 대사와 평춘타이(馮春臺) 공사 등이 참석하였고, 북측 참석자는 최선희 외무상, 박명호 외무성 부상, 맹영립 아시아1국장 등이다.

151/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23年9月13日外交部發言人毛寧主持例行記者會,” <http://mfa.gov.cn/fybt_673025/202309/t20230913_11142325_shtml> (검색일: 2023.10.5.).

중북 경제교류 협력의 정상화

중국은 전인대 이후 김정은 정권의 친중화 및 안정화를 위해 식량과 의약품, 생필품 등 인도적 지원 이외에도 에너지와 사회간접자본(SOC), 관광 등의 경협을 재개할 전망이다. 중국의 신임 국무원 부총리인 허리핑^{152/}은 거시 경제정책과 사회간접자본, 일대일로 등 직무와 관련해 정책 경험이 있어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와 연계된 중북 경협의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3년 동안 국경봉쇄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도 이러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북 교역을 전략적으로 재개할 동인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중북 교역액은 약 10억 달러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중북 교역액인 약 30억 달러의 3분의 1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3억 달러, 대중 수입액은 8.9억 달러이다. 올해 2023년 1분기 중북 무역액은 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다소 완화된 지난 1월 말부터 중북 간 화물열차 및 트럭 운송이 재개되었으며, 특히 주로 식량과 식용유, 설탕, 의약품, 타이어 등의 생필품에 대한 대중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중북 경제교류 및 협력관계의 정상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14기 전인대(3월 5일~14일)를 통해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되어 안정적으로 정권 연장이 이뤄졌고,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왕야쥘 대사도 부임함에 따라 중북 양국 간 교류협력 관계가 정상적 궤도로 진입하는 상황이다. 중북 경제교류

^{152/} 최근 경제 총괄 기구인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판공실 주임을 겸임하면서 경제 분야에 대한 전권을 장악했다.

외에도 코로나19가 여전히 변수이긴 하지만, 중북 간 인적교류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인을 대상으로 평양이나 금강산 관광 등 북한의 관광사업도 재개할 전망이다. 현재 북한은 보건위생의 취약성으로 인적 교류를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관광 재개 등 중북 간 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해 국경봉쇄를 점진적이거나 해제할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 그러나 유엔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중북 간 사회간접자본 등 본격적인 경험 추진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종합하면, 향후 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에 대응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북 포용정책을 유지,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북한은 고체연료 ICBM 추가 발사나 군사정찰위성 발사, 7차 핵실험 등 도발의 강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 채택으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력 고도화’가 포함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핵무력 법령화를 넘어 헌법화를 이루어 북한 비핵화를 더욱 요원하게 하였다.^{153/} 이를 통해 한반도 역내 질서를 한미일 대 중러북 구도로 조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의 대북제재에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당분간 북한과의 군사훈련 및 안보 협력을 전격 단행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나타난다.

153/ 헌법 제58조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무력 법령화 넘어 헌법화··· 더 멀어지는 북한 비핵화,” 『경향신문』, 2023.10.3., <<http://m.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2310031600001#c2b>> (검색일: 2023.10.4.).

(3) 중북관계 평가와 전망

이처럼,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통해 볼 때, 당분간 중북관계는 전략적 협력과 긴밀한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양국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쟁점들도 부각 되지 않고 잠재할 것으로 보인다.^{154/} 다만, 북한이 원하는 것, 즉, 제재 해제와 적대시 정책의 해소, 체제보장 등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라는 점에서, 중북관계의 한계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국익상 최우선책은 미북대화이나,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북한 주도의 결과를 획득할 수 없는바, 당분간 미북 대화는 요원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핵·미사일실험), 비핵화, 제재 완화와 경협, 남북관계의 불안정 등은 여전히 중북관계의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155/}

그간 중국은 ‘제재수단론’과 민생·인도주의를 강조하며 식량과 의약품 등을 북한에 지원해왔으나, 제재 완화 및 해소를 주장하는 북한의 요구에 전면 부응하지 못하는 딜레마를 노출하였다. 즉,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대국으로서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재 상황 및 코로나19 국면에서 본격적 중북 경협은 부재할 수밖에 없었으며,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더욱 심화하여 자율성이 약화하는 결과를 낳았다.^{156/} 특히,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보유를 반대하지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한 사활적 이익으로 간주하고 핵보유국화를 시도하는바, 비핵화 문제가 양국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 사안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 여부

154/ 전병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대내외정책 방향과 북중관계 전망,” p. 16.

155/ 위의 글, p. 17.

156/ 위의 글, p. 17.

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은 핵실험 반대를 표명함과 동시에 관련국의 냉철한 절제를 요구하는 기존의 공식 입장을 유지할 것이나, 한미일의 안보협력 강화를 특별히 경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157/}

나. 대한민국정책과 한중관계 전망

(1) 대한민국 정책 목표

탈냉전 이후 한중관계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선린우호협력 관계에서 출발하여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2008년 이후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중관계의 연장선에서, 시진핑 집권 이후 대한민국 정책의 공식 목표를 살펴보면, 시진핑 1기(박근혜 정부, 2013년부터)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추구하였고,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한중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발전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후 시진핑 2기(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구축을 위해 노력하던 시기로 한중관계의 부침을 반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평화발전과 핵심이익을 수호하는 데 한국과의 협력이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후진타오-이명박 시기에 합의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중국은 경제적 차원에서 자국의 지속적인 부상을 위해 한중 경제협력이 중

^{157/} 위의 글, p. 17.

요하였고, 정치·외교적 차원에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제어하는 한편, 중국에 유리한 역내 질서 수립을 위해서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22년 10월 20차 당 대회와 이듬해 3월 14기 전인대를 통해 공식 출범한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출범 당시 한반도에 대한 언급 없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한편, 한국의 대미경사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미중 전략적 경쟁에 따른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압력,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정세의 불안정은 시진핑 3기 지도부가 전례 없는 위협과 도전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중국의 대한국 정책 목표도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 전선에 편입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이를 위한 중국의 대응은 일단 외교적 수준에서 진행하되, 만약 군사안보적 참여시에는 맞대응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과의 경제 및 사회문화적 교류는 유지하며 회유·압박 수단을 확보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 한중관계의 전개

한중은 수교 이후 빈번한 정상외교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현안 및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해왔을 뿐만 아니라,^{158/} 6자회담, 아세안(10개국)+3 및 G20 등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양국 간에 다양한 외교적 협력을 계속해서 모색해왔다.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2015년 3월 한국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

^{158/} 수교 이후 2020년 10월까지, 한중은 46차례의 정상회담과 128차례의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였음.

여하였고, 이어서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등 한중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맞는 최상의 협력관계를 구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은 적지 않은 외교안보적 갈등을 노정하는 바 있다. 중국의 남북한 균형외교와 한미동맹에 따른 북한(핵) 문제, 천안함·연평도 포격 사건 등은 한중 상호 간에 적지 않은 갈등을 유발하였다. 특히, 2016년 이후 북핵 고도화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단행된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및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한중관계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소위 ‘3불(三不)’을 표명함으로써 한중 갈등을 봉합하고,^{159/}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중국의 협력을 유인하고자 했으나, 2019년 미북·남북대화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한중간 실질 협력도 확대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2022년 5월 출범한 한국의 신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비전을 갖고 자유, 평화, 번영 등의 가치 실현과 실질 협력의 증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및 한미동맹의 포괄적 수준으로의 강화 등을 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즉시 첫 한미 정상회담(5월 21일)을 추진하고, NATO 정상회의(6월 29일~30일)에 참석하였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동맹(CHIP-4) 참여를 시사하는 등 미국에 경도된 외교안보 행보를 보였다.

이와 같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제어하기 위해 중국은 한국의 신정부에 우회적 경고 메시지와 한중협력의 견인을 동시에 시도하기 위하여 시진핑 국가주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하였고(3월 25일),

^{159/} 3불은 사드 추가 불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임.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중국 인사와 비교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각별한 신뢰를 받는 왕치산 부주석이 특별대표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였으며(5월 9일),^{160/} 왕이 외교부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화상통화나(5월 16일),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가(6월 2일) 이뤄진 바 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중은 이사할 수 없는 이웃으로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한중관계 발전이 양국의 근본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밝히며,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상호존중 △정치적 신뢰 강화 △민간우호 증진 등을 통한 한중관계의 안정화를 강조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 공정·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161/} 이는 상호존중과 정치 신뢰, 민간우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매우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있으며, 사드 문제, 공급망 문제 등 첨예한 현안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끌어당기려는 우회적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162/} 이러한 맥락에서 왕이는 고위급 소통, 호혜협력, 문화교류, 국제지역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고,^{163/} 양제츠는 각계각층의 소통 유지, 실무협력 강화, 인문교류 강화, 다자주의 공동

160/ “中 왕치산 부주석, ‘시진핑 특사’로 韓대통령 취임식 참석(종합), 『연합뉴스』, 2022.5.6., <<http://yna.co.kr/view/AKR20220506109151083>> (검색일: 2023.10.1.).

161/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習近平同韓國當選總統尹錫悅通電話,” 2022.3.25., <https://www.mfa.gov.cn/zyxw/202203/t20220325_10655686.shtml> (검색일: 2022.11.26.).

16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화통화 내용에서 양측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나타났음; “윤석열-시진핑 통화는 뭘 말하나,” 『중앙일보』, 2022.3.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8754#home>> (검색일: 2023.10.1.) 참조.

163/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王毅同韓國新任外長樸振舉行視頻會晤,” 2022.12.12., <https://www.mfa.gov.cn/wjzbzd/202205/t20220516_10686692.shtml> (검색일: 2023.6.7.).

수호, 민감 문제의 타당한 처리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한중관계 증진,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2023년 4월 26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성명과 워싱턴선언을 채택하였다. 한미는 국방부 차관급의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구성 및 연 4회 정기회의 개최, 전략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와 동맹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에도 합의하였다. 이밖에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공급망 협력 강화 및 미래세대 교류(장학금과 비자면제 프로그램) 확대 등 한미 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협력 성과를 이루었다.^{164/}

이와 함께 한국의 외교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일 정상회담(5월 7일)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5월 21일) 등을 잇달아 성사시키며 한미일 3국의 전략적 공조가 강화되는 추세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북핵·미사일 경보 정보의 공유 등 안보협력과 인도·태평양전략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미협력에서 나아가 한미일 협력 강화로 발전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를 제기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王文斌)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은 분리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이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

164/ 대한민국 대통령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2023.4.27., <<http://www.president.go.kr/newsroom/press/B4x547qk>> (검색일: 2023.5.23.); 대한민국 대통령실, “워싱턴 선언,” 2023.4.27., <<http://www.president.go.kr/newsroom/press/C8pBYSLx>> (검색일: 2023.5.23.).

정이고 핵심이익 중에도 핵심이익인바, 타인의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는다(不容置喙)”라고 언급하며 불만을 제기하였다.^{165/}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이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이나 매립지역의 군사화와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하였다. 이에 중국은 주중 한국 공사를 초치(4월 27일)하고 엄정 교섭을 제기하였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毛寧)은 한미 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가지 말 것을 강하게 경고하였다.^{166/} 그밖에도 북한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한미일 간 레이더시스템 연계와 관련해서 왕원빈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를 구실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의 진영화와 대결을 격화시키며, 상호신뢰를 훼손하고, 타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167/} 또한 G7 정상회의(5월 19일~21일)의 중국 견제에 대하여 중국 공격과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168/} 이처럼 중국은 대만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한편, 중국 시안(西安)에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5월 19

165/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23年4月20日外交部發言人汪文斌主持例行記者會,” 2023.4.20., <https://www.mfa.gov.cn/fyrbt_673021/jzhsl_673025/202304/t20230420_11062419.shtml> (검색일: 2023.5.16.).

166/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23年4月27日外交部發言人毛寧主持例行記者會,” 2023.4.27., <https://www.mfa.gov.cn/fyrbt_673021/jzhsl_673025/202304/t20230427_11067709.shtml> (검색일: 2023.5.17.).

167/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23年5月9日外交部發言人汪文斌主持例行記者會,” 2023.4.20., <https://www.mfa.gov.cn/fyrbt_673021/jzhsl_673025/202305/t20230509_11073924.shtml> (검색일: 2023.5.16.).

168/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外交部發言人就七國集團廣島峰會炒作涉華議題答記者問,” 2023.4.20., <https://www.mfa.gov.cn/fyrbt_673021/dhdw_673027/202305/t20230520_11080726.shtml> (검색일: 2023.5.22.).

일)하며 맞대응을 하기도 하였다.^{169/}

종합해보면, 미국과 전략적 경쟁 중인 중국은 워싱턴선언을 통해 보여준 한미의 확장억제 확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변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러북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경계하고 비판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선에 편입되는 것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한편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추구라는 목표 아래 한중협력의 견인을 동시에 시도하기도 한다.

(3) 한중관계 평가와 전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 단계에서 볼 때,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선에 편입할 것을 심히 우려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향후 한중관계는 협력보다 경색 및 갈등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최근 한국 야당 대표에게 “중국의 패배에 배팅하지 말라”는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발언(6월 8일)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70/} 다만, 중국 측은 한국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맞대응을 통한 확전은 자제하는 상황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미중 전략경쟁 체제하에서 향후 한중관계는 기

169/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中國-中亞峰會西安宣言(全文),” 2023.5.19., <https://www.mfa.gov.cn/zyxw/202305/t20230519_11080194.shtml> (검색일: 2023.5.22.).

170/ 한국측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내정간섭에 해당한다고 항의한 반면, 중국측은 싱하이밍 대사의 활동은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함이며, 한중관계가 직면한 도전은 중국의 책임이 아님을 강조함.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23年6月12日外交部發言人汪文斌主持例行記者會,” <https://www.mfa.gov.cn/web/fyrbt_673021/202306/t20230612_11095228.shtml> (검색일: 2023.6.15.)

회와 도전의 측면이 모두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회의 측면은 중국이 한미동맹의 강화를 제어하기 위해 한중협력을 확대하려는 동기를 보유한 점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중국이 우호적인 주변외교 정책을 선호하거나 우방국 확대 정책의 방향에서 한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협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중 갈등의 구조화, 장기화, 복합화 추세로 한중관계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의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의 정책적 방향성은 한중관계에는 도전의 측면이 증가할 수 있다. 군사안보 차원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공급망 문제 등에서 나타나는 디커플링 현상, 정치적으로 현 정부의 가치외교와 중국의 신장, 홍콩, 대만 문제와 관련된 ‘주권’과 ‘내정 간섭’의 시각 차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한중 양국 국민들의 감정 악화 등 한중관계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한다.^{171/} 따라서,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한반도는 한미일 대 증려북의 대립 양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한중관계도 기회와 도전의 측면이 모두 존재하면서도 갈등과 대립이라는 도전의 측면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3. 소결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시진핑 1인 우위 체제에서 중국식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상황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운 주요 핵심 정책들

^{171/} 김한권, “시진핑 정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3.9.22.),

은 탄력을 받아 더욱 높은 효율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고, 반면에 ‘집단적 사고’의 폐해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장기 집권체제의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만 요소를 제거하고 권력 기반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내외적 성과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대내외적 성과에 부응하고 관리하는 방향에서 중국은 한반도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급변 상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방향이 결정되거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는 방향에서 결정될 개연성이 크다.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미중 전략경쟁 구도라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 다만, 시진핑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미칠 엘리트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책 관련 기관 및 인사들은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 정책 관련 기관으로 당중앙의 중앙국가안전위원회와 대외연락부, 국무원의 외교부 및 국방부, 상무부, 그리고 북한과 인접한 동북 3성 지방정부 및 싱크탱크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 인사로는 왕이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류젠차오 대외연락부장, 라오닝성 당서기를 역임한 장귀칭 국무원 부총리,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 헤이룽장성 성장을 역임한 왕원타오 상무부장, 왕야쥘 주북한 중국대사, 그리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등이 있다.

시진핑 집권 이전까지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대내외 환경 조성으로 성장한 국력에 부응하는 위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상생, 대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에 순응하면서

대한반도 인식에서 경제발전과 국제적 위상의 측면이 부각 되어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평화로운 주변 환경 창출에 한국과의 협력이 긴요하였다. 반면에 북한에 대한 전략 가치 인식은 탈냉전 후 약화하였고, 전통 사회주의 우호국으로서 해양세력을 막아주는 완충지대로서의 인식이 유지되었다.

시진핑 집권 이후 한반도 인식은 질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의 국력 상승에 따라 미국은 한편으로 중국의 부상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부상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였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양면적 인식과 태도에 따라 미중관계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중국의 한반도 인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였다.

지속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시진핑 집권 이후 3기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략 가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한반도는 중국의 국내외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관건 지역으로 중국의 안보와 발전에 직결된다. 또한, 한반도는 미중 양국 세력의 완충지대로 여전히 지정학적 가치가 크고, 중국 주도의 주변 질서형성에 있어 한반도가 중요한 토대가 되며, 대미, 대일관계 형성에서도 중요하다.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 목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그리고 자국 주도의 질서형성을 위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중 경쟁 구도에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억제하기 위해 한중 협력을 유인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대중 봉쇄 전선의 약화나 돌파를 모색할 것이다.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북한의 전략 가치를 고려해 북한 체제의 평화와 안정을 최상위 목표로 둔 가운데, 지속적인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북핵문제를 평화적

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전략적 부담보다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해 북한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를 더욱 유효하게 평가하고 활용하려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에도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등 중북 우호 협력관계는 강화되고, 중러북 연대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다만, 미국을 의식하며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응해가며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유지,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보유를 반대하지만,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보유국화를 시도하고 2022년 핵무력정책법에서 나아가 2023년 9월 핵무력 고도화가 포함된 헌법화를 이룬바, 비핵화 문제는 중북 양국관계에서 핵심적 사안으로 향후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평화발전과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이 계속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라는 국제정세의 불안정은 시진핑 3기 지도부로 하여금 전례 없는 위협과 도전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한국 정책 목표도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 전선에 편입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워싱턴선언을 통해 보여준 한미의 확장억제 확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변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러북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경계하고 비판함과 동시에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선에 편입되는 것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추구라는 목표 아래

한중협력의 견인을 동시에 시도하기도 한다.

종합하면, 미중 전략경쟁 체제하에서 향후 한중관계는 기회와 도전의 측면이 모두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한반도에 한미일 대 중러북의 대립 양상이 강화된다면, 갈등과 대립이라는 도전의 측면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한중관계 경색과 갈등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Ⅵ. 결론: 내용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결론: 내용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논의에서 본 연구는 다음 3가지 필요성과 논점에 주목하고 향후 5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 갈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선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당-국가체제’인 중국정치 특성상 정책 결정의 제도화 수준, 즉,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요인, 집단지도체제 및 관료체제 등에서 나타나는 정책 결정 구조의 제도화 정도에 따라 대외전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국가발전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 공간 확장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기존 중국 외교의 4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대국외교와 주변외교, 개발도상국 외교 및 다자외교에 대한 일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그동안 중국은 미중관계의 하부 구조로서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시진핑 3기에도 이러한 경향성이 계속될 것인지, 한반도 정책 결정요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의 논점을 반영한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 및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II장에서는 대외정책 결정 모델의 중국 적용과 사례를 살펴보고,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특징과 구별하고자 시진핑 1,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특징을 분석했다. 대외정책 결정 모델을

적용해보면, 시진핑 집권 1, 2기는 협의를 중시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식 협의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2기에서 3기로 나아갈수록 시진핑 1인 우위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집단지도체제가 약화하였다. 따라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견제와 도전의 시대라는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내외적 위협인식이 커지고 시진핑 1인 우위 체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모델에서 나타나는 지도자의 강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특징이 시진핑 1, 2기보다 향후 3기에 적용하는 것이 더욱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외정책 결정에서 마오쩌둥 시대처럼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된 상황과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 즉, ‘약자들의 연합’과 ‘집단사고’ 개념에 주목하였다.

시진핑 1, 2기 지도부 구성의 주요 특징은 시진핑 1기에서는 소위 기존에 있던 파벌, 즉, 공청단 세력을 대표하는 리커창, 상하이방을 대표하는 장더장 등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세력 간 균형이 이뤄지며 세력 간에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인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시진핑 1기에서 후진타오 전임 국가주석의 시대에 존재하는 파벌을 일정 부분 용인하는 형태로 지도부가 구성되었다면, 2기에서는 정치세력 간 균형이나 안배뿐만 아니라 시진핑의 측근 인사를 전진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신의 영향력을 집권 1기 동안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중국공산당 내 ‘핵심’지위를 확립하고, ‘시진핑 사상’이 중국공산당장에 삽입되며 당내 권력을 강화하였다.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에서 시진핑에게 충성도가 높은 소위 시진핑계열이라는 시진핑 측근 그룹이 부상하고 집단지도체제가 약화하는 등 시진핑 1기와 비교해 시진핑 1인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어 대내외정

책 결정 구조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시진핑 1, 2기의 대외정책에서도 나타났다. 시진핑 1기는 전임 후진타오 시기까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대외정책 경향을 강대국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의 전환에 맞춰 이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으로 전환하는 시기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으로 정의되는 ‘중국몽’과 같은 집정이념을 주창하고 대국외교를 중심으로 주변외교, 개발도상국 외교 및 다자외교를 강조하였다. 또한, 신형대국관계, 신형국제관계 및 인류운명공동체 등을 새로운 담론으로 제시하며 새로운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시진핑 2기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이 더욱 심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맞서 소위 전랑외교로 평가받는 적극적 외교 자세를 보여주었다. 특히,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전략에 맞서 대외정책 추진 방향으로 다자주의 외교 및 국가전략사업인 ‘일대일로’를 더욱 강조하면서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국을 끌어안으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이처럼 시진핑 2기는 시진핑 중심의 권력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맞서 새로운 어젠더를 주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외정책 전략을 추구하며, 강대국 건설 목표를 실현하고자 꾸준히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Ⅲ장에서는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구성을 당·정·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진핑 1, 2기와의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그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시진핑 3기 지도부의 주요 특징은 당·정·군의 핵심 지도자를 소위 ‘시진핑계열’로 분류되는 측근들로 대부분 구성하고, 시진핑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시진핑 1인 우위’ 체제를 확

립했다는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임 지도자들이 5년 임기의 국가주석직을 연임한 후에 퇴임한 것과 달리 2018년 헌법에 명시된 연임 규정을 폐지하고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서 2022년 20차 당 대회에서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차지한 후 2023년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직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에 선출되며 최고 권력을 장악했다. 각 분야의 주요 지도자들을 자신의 측근으로 구성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주요 부처의 수장은 유임시킴으로써 정책의 연속성도 동시에 추구하였다. 또한, 미국과의 장기적인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지도부 인선과 당·국가기구 개혁이 이뤄졌다. 끝으로, 당 지도부 구성에서 통일전선을 강화하고 대만 문제 전문가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시진핑 3기 지도부가 양안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을 1, 2기와 비교하여 지속과 변화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시진핑 3기도 소위 ‘격대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진핑 체제는 최소 5년 이상 10년 정도 계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왕이 전 외교부장의 중앙정치국 위원 승진과 외교사령탑 역할 수행은 대외정책의 지속성을 전망하게 한다. 또한, 시진핑 2기에서부터 더욱 강화된 중국공산당의 전면적 영도는 시진핑 3기 지도부에서도 계속되고, 최근 국무원의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무원조직법’ 개정 방향은 덩샤오핑의 ‘당-정 분리’의 완전한 폐지와 ‘당-정 일체화’의 완성을 시사한다. 한편, 시진핑 3기 지도부의 새로운 변화는 ‘시진핑 1인 우위’ 체제의 권력구도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기존 권력 승계와 달리 국가주석직 3연임에 성공하여 명실상부한 1인자의 지위에 올랐고, 향후 대내외정책 방향이 1, 2기로부터 이어지는 시진핑 개인의 철학과 구상에 따른 정책적 연속성에 기반하고, 그것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정세에 대응하

기 위한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진핑 2기에서 전진배치하기 시작한 측근 인사는 시진핑 3기에서 당·정·군 지도부 대부분을 소위 시진핑계열이라는 핵심 측근들로 채웠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시진핑 본인을 제외하고 리창, 덩쉐샹, 차이치 등 3명은 업무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는 핵심 측근이고, 자오러지, 왕후닝, 리시 등 3명은 시진핑이 발탁 혹은 승진시킨 시진핑계열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대거 등용은 미국과의 기술패권경쟁에 대외정책 방향이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3기 지도부의 대외위협 인식이 미국과의 전략경쟁 및 기술패권경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시진핑 1, 2기와 다른 변화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및 구조화 속에서 시진핑 3기는 대내외적 성과를 통해 시진핑 1인 우위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다양한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운 ‘당-국가’체제의 특성과 시진핑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에는 소위 ‘집단사고’ 및 ‘약자들의 연합’의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에 따른 ‘지속’과 ‘변화’의 특징이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시진핑의 리더십이 어떤 방향으로 작동되는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찰과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IV장에서는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통해 대외정책을 전망해보았다.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난 ‘시진핑 1인 우위’ 체제의 확립은 대외정책 결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영향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시진핑계열로 지도부가 구성된 ‘약자들

의 연합' 결성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시진핑 개인의 오판과 '집단사고'의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것이 오판이라면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3기 지도부 인사에서 나타난 과학기술 및 경제 전문가의 대거 등용은 향후 대외정책 결정에서 전문적 관료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군사안보 차원에서 대만 문제 전문가들의 전면 배치는 대만 문제를 중시한다는 사실 외에도 정책 결정에서 전문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외정책 결정에서 엘리트 요인이 구조 요인과 비교해 덜 중요하다는 사실은 시진핑 1인 우위 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오히려 상쇄시킬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미국의 대중 견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외환경 변화가 중요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 국내상황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곧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이라 할 수 있다.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 외교의 4대축인 대국외교, 주변외교, 개발도상국 외교, 다자외교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강대국 외교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구체적으로 관계의 건전한 상호작용 촉진을 제시하면서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는 공세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경제적 힘을 활용하여 미국의 대중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더욱 강경하고 공세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표면적인 강한 레토릭과는 달리 정책 이행과정에서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대만에 대한 강경책과 유화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변국 외교에서 하나는 미국의 우방국가들에 대한 썬더전략으로 미국 주도의 동맹 혹은 커플링에 대한 약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우호

적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탈 방지 및 우군 확대를 위한 외교전략의 강화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 우방 국가들에 대한 틈새 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우군 확보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과 아세안 국가 및 중앙아시아,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 안보 연대가 확대될 것이다. 셋째,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브릭스 및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영향력 확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발언권 확대를 강조하고, 이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넘어 공동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것은 대외정책에서 개발도상국 외교를 더욱 중시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진핑 3기에서는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대변자임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 외교에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그동안의 비판을 의식해 앞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질적으로 향상된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다자외교는 시진핑 3기 지도부가 가장 적극성을 보여줄 영역으로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의 문제점을 개혁하고 새로운 규칙과 규범을 창조하는 데 중국이 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첫째, 중국적 외교 담론 시리즈인 글로벌 발전구상, 글로벌 안보구상, 글로벌 문명구상, 나아가 최근 발표된 글로벌 AI 거버넌스구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존 헤게모니 질서를 비판하고 새로운 미래 질서를 규정하는 인류운명공동체를 계속해서 추동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속도에 따라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다만, 군사안보 차원에서 다만 문제가 가장 관건이다. 셋째,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의 동맹체제를 약화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썬기전략을 추구하고, 미국 중심의 블록화에 대응해 신흥개발국과 글로벌 사

우스 국가들과 연대하는 등 중국 중심의 블록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구조화 상황에서 시진핑 1인 우위 체제가 공고화되어 이전보다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운 당-국가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소위 집단 사고 및 약자들의 연합의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 시진핑의 리더십과 대외정책 결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이유다.

V장에서는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의 특징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규명하고,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여 한중관계 및 중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관계를 전망하였다.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요인이다. 다만, 시진핑 1인 우위 체제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창한 주요 핵심 정책들은 더욱 탄력을 받아 높은 효율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고, 반면에 집단적 사고의 폐해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내외적 성과에 부응하고 관리하는 방향에서 한반도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연임은 최소 5년에서 10년이라는 장기집권체제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시진핑 3기 집권의 정당성 및 불만 제거, 권력 기반 공고화를 위해서는 대내외적 성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급변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결정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북정책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북한의 전략 가치를 고려해 북한체제의 안정을 최상위 목표로 두고 지속적인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및 자국 주도의 질서형성

을 위한 한반도 영향력 강화에 있다.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미중 전략경쟁 구조에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억제하기 위해 한중협력을 유인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동맹으로의 발전을 억제하여 미국의 대중 억제 및 봉쇄 전선을 약화하려 할 것이다.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전략 가치를 고려해 북한 체제의 안정을 최상위 목표로 두고 대북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면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전략적 부담보다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해 북한의 도발에도 중북 우호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중러북 연대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을 의식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중러북의 강한 연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중관계나 한미일 안보협력 및 북핵 문제의 변화 등 전략적 상황 변화에 따라 중국의 태도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언제든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미중 전략경쟁 구조하에서 향후 한중관계는 기회와 도전의 측면이 모두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미일 대 중러북의 대립 양상이 강화되면 한중관계는 경색과 갈등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구조적 차원에서 미중 전략경쟁 양상 및 미중 양국의 입장 변화를 늘 관찰해야 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한을 포함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외전략 및 이들 국가와의 양자관계, 그리고 중러북이라는 다자관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관련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진핑 1인 우위 체제가 확립된 상황에서 시진핑의 리더십과 대외정책 결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대외정책은 지속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내외적 구조 및 정세 변화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한미일 대 중러북의 구도 변화 속

에서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디리스킹 전략을 바탕으로 사안별 전략적 유연성을 통한 접근 방식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의 연구는 시진핑 3기 지도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지도부 구성 및 대외정책의 특징을 선제적으로 연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시의성 및 정책성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을 전망한다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본 연구를 기초로 시진핑 3기의 대외정책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이 계속되고 시시각각 국제정세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또한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이뤄진 시도는 향후 학술 연구 및 정책 대안에 중요한 기초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갑식 외.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22.
- 김계동 외. 『현대외교정책론』. 서울: 명인문화사, 2017.
- 김동수 외. 『미·중갈등 대응전략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
- 신중호.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신중호 외.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21.
- 이상우·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1992.
- 전병곤.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통일정세분석 2013-03.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_____.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KINU Insight 17-02.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_____.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_____. 이재영·황태연·양갑용. 『중국 20차 당 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22.
- 정재호 편. 『중국정치연구론』. 서울: 나남출판, 2000.
- David Shambaugh 편저. 김지용·서윤정 옮김. 『중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서울: 명인출판사, 2021.

Allison, Graham T.,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 Missile Crisi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 Bo, Zhiyue. *China's Elite Politics: Governance and Democratization*. Singapore: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Pte. Ltd., 2010.
- Dittmer, Lowell. *China's Continuous Revolution*. Berkeley and Los Angel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 Goldstein, Avery. *From Bandwagon to Balance of Power Politic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 Hilsman, Roger, Laura Gaughran, and Patricia A. Weitsman. *The politics of policy making in defense and foreign affairs : conceptual models and bureaucratic politic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90.
- Janis, Irving L.. *Victims of groupthink: A psychological study of foreign-policy decisions and fiascoes*. Boston: Houghton Mifflin, 1972.
- Lampton, David.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 Li, Cheng. *China'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Prospects For Democra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2008.
- Liao, Xuanli. *Chinese Foreign Policy Think Thanks and China's Policy toward Japan*.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2006.
- Lieberthal, Kenneth and David Lampton. *Bureaucracy, Politics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 MacFarquhar, Roderick. *The Origins of the Cultural Revolution, vol. 1: Contradictions Among the People 1956-1957*.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 Ning, Lu. *The Dynamics of Foreign-Policy Decision making in China*. Boulder: Westview Press, 1997.
- Robinson, Thomas and David Shambaugh. *Chinese Foreign Policy*. New York: Clarendon Press, 1997.
- Shih, Victor C.. *Coalitions of the Weak: Elite Politics in China from Mao's Stratagem to the Rise of Xi*.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 Swaine, Michael D.. *The Role of the Chinese Military in National Security Policy making*. Santa Monica, CA: RAND, 1998.
- Wong, John and Hongyi Lai. *China's into the Hu-Wen Era: Policy Initiatives and Challenges*. Singapore: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Pte. Ltd., 2006.
- 張曆曆. 『外交決策』.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7.

2. 논문

- 김선진·조은교. “시진핑 3기 경제 제약요인과 대내외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27집 제4호, 2022.
- 김한권. “시진핑 시기 중국 다자주의 외교의 변화: UN 전문기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04.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 김흥규. “시진핑 시기 미중 새로운 강대국 관계 형성 전망과 대한반도 정책.” 『국방연구』. 제56권 제3호, 2013.
- _____.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사고의 변화와 함의.” 『신아세아』. 제22권 제4호, 2015.

- 서정경. “시진핑 2기 정부의 외교 전망: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4권 제1호, 2018.
- 신중호.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과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GLOBAL ISSUE BRIEF』. Vol. 09, 2023년 3월호.
- _____. “2021년 양회(兩會)를 통해 본 중국의 대미 장기전 태세와 함의.” 『KINU Online Series』. CO 21-10, 2021.3.17.
- _____. “중국공산당 제18차 당 대회와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 『국제문제연구』. 제12권 4호,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2.
- _____. “중국 제20차 당대회 이후 대외정책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정세와 정책』. 2022년 제11월호, 통권 356호, 2022.
- 양무진. “중국의 정책결정구조와 정치적 권위관계.” 『동북아 연구』. 제3권, 1997.
- 전병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대내외정책 방향과 북중관계 전망.” 『KINU Insight』. No.1, 2023.
- 焦佩·이창신. “중국 대약진운동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집단사고(groupthink)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7(3), 2013.
- 한강우. “시진핑 집권 1,2기 권력집중화 양상 비교 분석-인민일보 1면 보도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제22권 제2호, 2019.
- 황상필.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역할이론적 검토.” 『국제정치연구』. 제25집 3호, 2022.
- 황태연.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신설과 특징: 권위주의적 통제강화와 법·제도화의 딜레마.” 『현대중국연구』. 제22집 3호, 2020.
- _____. “중국의 당정(黨政)관계 변화,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인가?: 시진핑 시대 당정 기구개혁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21집 제2호, 2019.

- Allison, Graham T. and Morton H. Halperin. "Bureaucratic Politics: A Paradigm and Some Policy Implication." *World Politics*, no. 24, 1972.
- Berkley, Michael. "The end of China's Rise." *Foreign affairs*. 2021.10.1.
- Brands, Hal and John Lewis Gaddis. "The New Cold War." *Foreign Affairs*. vol. 100, no. 6, 2021.
- Greitens, Sheena Chestnut. "Xi's Security Obsession: Why China Is Digging In at Home and Asserting Itself Abroad." *Foreign Affairs*. July 28, 2023.
- _____. "Xi Jinping's Quest for Order: Security at Home, Influence Abroad," *Foreign Affairs*. 2022.10.3.
- Hao, Karen. "China's Xi Stacks Government With Science and Tech Experts Amid Rivalry With U.S.." *Wall Street Journal*. Nov. 18, 2022.
- Harding, Harry. "Competing Models of the Chinese Communist Policy Process: Toward a Sorting and Evaluation." *Issues and Studies*. vol. 20, no. 2, 1984.
- Hsu, Chih-Chia.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in Deng's China: Three Patterns For Analysis." *Asian Perspective*, vol. 23, no. 2, 1999.
- Krasner, Stephen D. "Are Bureaucracies Important?(Or Allison Wonderland)." *Foreign Policy*. no. 7, Summer 1972.
- Rudd, Kevin. "The Return of Red: China Xi Jinping Brings Back Marxism," *Foreign Affairs*. Nov 9, 2022.
- Westad, Odd Ame. "The Sources of Chinese Conduct: Are Washington and Beijing Fighting a New Cold War." *Foreign Affairs*, vol. 98, no. 5, 2019.

- 劉玉, “毛澤東晚年探索出現失誤的個人因素探析.” 『黨史博采』.
林子立, “中共20大對外交政策的影響與未來走向.” 『展望與探索』, 第20卷 第12期, 2022.
王章維·郭學旺, “大躍進時期國人社會心態探析.” 『新視野』, 2000年 第2期.

3. 웹사이트

- 경향신문 <<http://m.khan.co.kr/>>
대통령실 <<http://www.president.go.kr/>>
연합뉴스 <<http://www.yna.co.kr/>>
중앙일보 <<http://www.joongang.co.kr/>>
Project Syndicate <<https://www.project-syndicate.org>>
South China Morning Post <<https://www.scmp.com>>
NATO <<https://www.nato.int>>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
U.S. Department of Commerce <<https://www.bis.doc.gov>>
U.S. Department of State <<https://www.state.gov>>
VOA <<http://www.voakorea.com/>>
新華社 <<http://www.xinhuanet.com/>>
人民日報 <<http://cpc.people.com.cn/>>
中國外交部 <<https://www.fmprc.gov.cn/>>
中國人大網 <<http://www.npc.gov.cn/>>
中國政府網 <<http://www.gov.cn>>
21世紀經濟報道 <<http://www.21jingji.com>>

4. 자문회의 자료

김한권. “시진핑 정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3.9.22.).

신종호. “대외정책 결정 모델과 중국.”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3.3.31.).

양갑용.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과 한반도 정책.”(통일연구원 정책자문회의 자료, 2023.4.6.).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2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홍제한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곤 외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운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한·김석진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2021-15 KINU 통일외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장철운 외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2021-31-01 평화공동체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2021-02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황진태·백일순
2021-03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황대연
2021-04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이상신·이재원

〈Study Series〉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Choon Geun Lee·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202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2-01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이규창 외
2022-02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김석진·홍제환
2022-03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이지순·최선경
2022-04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최규빈 외
2022-05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나용우 외
2022-06 2022 접경지역주민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2-07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2-08 북한의 중산층	정은미 외

2022-09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태은·박동준
2022-10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황수환·권재범
2022-11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합의	현승수 외
2022-12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조한범 외
2022-13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김상기 외
202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	이무철 외
2022-15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장철운 외
2022-16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정성윤 외
2022-17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도경옥 외
2022-18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이재영 외
2022-19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2-20 KINU 통일외식조사 2022	박주하 외
2022-21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황진태 외
2022-22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하 외
2022-2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최지영 외
2022-24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홍 민
2022-25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구상: 해외 사례와 시사점	홍제환 외
2022-26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김갑식 외
2022-27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박영자 외
2022-28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홍 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2-01 중국 20차 당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전병곤 외
2022-02 동아시아 다중 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박은주
2022-03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별 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22-04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한동호 외
2022-05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홍 민 외

〈Study Series〉

2022-01 An Assessment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un Regime	Hyeong-Jung Park et al.
2022-02 The Cultural Meaning of North Korea's National Symbols and Its Branding Strategy	Ji Sun Yee et al.
2022-03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Order and a New Korean Peninsula System	Eun Joo Park et al.

2022-04 The Arms Race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Cheol-wun Jang et al.

2022-05 Exploring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Formation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Ji Young Choi et al.

2023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3-01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황진태
2023-02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통해 본 북한 경제발전 전망과 과제	김석진
2023-03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3-04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3-05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	김갑식 외
2023-06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장철운 외
2023-07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SDGs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23-08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이무철 외
2023-09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	현승수 외
2023-10	KINU 통일외식조사 2023: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과 여론	이상신 외
2023-11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	나용우 외
2023-12	2023 접경지역 남북협력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3-13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역량 접근과 공동 성과	최규빈 외
2023-14	김정은 시대 뉴미디어 대외선전 실태와 전략	이지순 외
2023-15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이재영 외
2023-16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이해와 전망	정성윤·김민성
2023-17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최지영 외
2023-18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정은미·박희진
2023-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조정아 외
2023-20	북한 주민의 직장 생활	박형중 외
2023-21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조정아 외
2023-22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박영자 외
2023-23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이기태 외
2023-24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황수환 외
2023-25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황태연 외
2023-26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홍민 외
2023-27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홍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3-0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통일방안	오경섭 외
2023-02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향	정성윤 외
2023-03	남북 체제비교와 성과 연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동호 외
2023-04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이재영 외

〈Study Series〉

2023-01	The Changes in North Korea's Fiscal and Financial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Ji Young Choi et al.
2023-02	North Korea's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to North Korea Soohwan Hwang et al.
2023-03	The Challenge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ng-Yoon Chung et al.
2023-04	North Korea's Official Markets in 2022 Min Hong et al.
2023-05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Implementing Government Tasks Dong-ho Han

KINU Insight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2022-01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홍제환 외
2022-02	2022 북핵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정성윤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북한인권백서 2022	이우태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이우태 외
북한인권백서 2023	이우태 외

연례정세보고서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2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3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1 (2021)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2 (2021)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1 (2022)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2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2 (2022)
-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1 (2023)
-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2 (2023)

기타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혁·용혜민 엮음
2022	2022 KINU 북한도시포럼 발표집: 「욕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홍 민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inu.or.kr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통일연구원

